

2017
겨울

생협 평론

29

길잡이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의 가치 연대를 꿈꾸며 — 박종현(편집위원장)	6
-----	---	---

특집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 활동	
	사회적경제 기반으로서의 사회적 참여 — 김종걸(한양대학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	14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 — 곽형모(한국자원봉사문화 교육위원장)	29
	생협의 주인으로서 조합원 활동 — 안인숙(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전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	46
	투명하나 총만한 그림자 : 생협 여성 활동가들의 노동을 생각하다 — 임정은(강서아이쿱생협 조합원)	59
	조합원의 자부심, 아이쿱 자원봉사 — 이순옥(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자치국장)	74
	[좌담] 열정페이와 자원봉사 사이에서	86



김기민 김수화 민선영 박준구 손홍택 박범용

이슈	협동조합 간의 협동으로 만드는 신협의 미래 — 주세운(동작신용협동조합)	110
	지구를 뒤흔든 살충제 계란, 소비자의 걱정과 생산자의 대책 — 황성구(한경대학교 동물생명환경과학과 교수)	119
기획특집	협동조합 원칙 다시 보기 ④ 『ICA 협동조합 원칙 안내서』 제6, 7원칙 해설 — 김형미(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	131
아이쿱생협 만평	적폐 청산 — 박해성(만화가)	144



기획 연재	협동조합을 가다 ⑩	
	행복은 우리 동네 ‘좋은 일자리’에서 시작된다	145
	: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	
	— 김은남(시사IN 기자)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길라잡이 ⑨	
	협동조합에서 교육의 우선순위	161
	: 협동을 통한 더 좋은 교육 만들기	
	— 김현하(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부문 부문장)	
서평	인간을 존중하는 경제는 가능하다	171
	: 존 레스타키스, 『협동조합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 이강백(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대표)	
	협동조합,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177
	: 헨리 한스만, 『기업 소유권의 진화』	
	— 송성호(쿠팡협동조합 감사)	
협동조합 소식	협동조합의 사회 참여	181
	— 이주희(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국제부문 부문장)	
생활 속 사회적경제	소비로 전하는 사회적 가치	185
	— 신효진(편집위원회)	
	독자의 소리	4
	정기구독 안내	212
	『생협평론』 과월호 목차	189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발행물 목록	206

생협 평론

계간 2017년 겨울 제29호 펴낸날 2017년 12월 20일 펴낸이 윤유진 편집위원 김현대 박경숙 박범용 임정은 조금득 조현경

편집위원장 박종현 펴낸곳 (재)ICOOP협동조합연구소 주소 07317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 1층

전화 02-2060-1373 이메일 icoop-institute@hanmail.net 편집간사 신효진 디자인편집 이다 인쇄 아람P&B

ISSN 2093-9876 등록번호 구로, 바00038 등록일 2016년 4월 5일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도서 반품 및 유통 관련 문의 도서출판 알마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연남로1길 8 | 전화 · 02-324-3800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독자의 소리

주영선

성공회대 협동조합경영학과
석사과정,
양산아이쿱생협 조합원

그 친구를 처음 만난 건 생협 활동을 시작한 그해 겨울이었다. 그는 산타클로스처럼 빨간 옷을 입고 나타났다. 새로 사귄 친구는 마침 활동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고, 매번 다음 만남을 설레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인연이 시작되었다.

1년에 네 번 그 친구와 어김없이 만남을 가졌는데, 그때마다 롤러코스터 같은 생협 활동을 하던 내게 위로를 주었고 새로운 상상과 자극이 되었다. 또 새로운 영역에 대한 호기심을 열어주며 한 해의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데 한 몫을 했다.

친구를 점점 알아가던 중 2015년 지역 생협에서 소모임을 만들었고, 그 친구와 조합원들이 함께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갔다. 이 모임은 1년 넘게 지속되었고, 자연스레 인문학 모임으로 확장되어갔다. 모임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해 좀 더 깊이 공부해보고 싶은 막연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었다. 또 2017년 협동조합경영학과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친구는 신기한 능력을 지녔다.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이들을 마법사처럼 자연스럽게 연결했다. 올해에는 남부산, 울산, 해운대에 적을 두고, 아이쿱 지역 생협의 임기를 마친 활동가들과 한 달에 한 번 공부하는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소비자 생협 활동의 경험을 축적하고 이종 협동조합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 의지를 가지고 모였다. 8월부터 시작되어 매월 협동조합 한 곳을 정해서 직접 방문하여 학습하고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해 논의도 진행했다. 즐거운 수다와 맛있는 음식이 덤으로 따라왔다.

그 친구를 소개하자면(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에서 발행하고 있는 계간 『생협평론』이다. 『생협평론』의 성장과 함께 내 지적 호기심도 확대되었고, 협동조합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는 곳으로까지 동행하고 있다. 아이쿱 조합원을 비롯

하여, 다른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에 관여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생협평론』은 그 쓰임새가 아주 유용하다. 협동조합을 탐구하는 연구자에게는 말할 것도 없이 훌륭한 텍스트가 된다. 『생협평론』이 앞으로도 내 훌륭한 벗이 되어줄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 새로운 타자와의 접촉을 기꺼이 도와줄 것이다. 유년기를 지난 아이쿱생협의 『생협평론』이 더 넓은 한국 사회적경제 영역의 북극성이 되기를 희망한다. 언젠가 '한국 협동조합의 한 세기'라는 책이 나온다면 『생협평론』이 주요하게 등장하지 않을까 싶다. 끝으로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내 친구'가 되었으면 한다. 고마워, 사랑해~ 생협평론^^

길잡이

박종현

편집위원장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의 가치 연대를 꿈꾸며

우리나라의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는 그동안 적지 않은 성취를 이뤘다. 생협을 비롯한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힘으로 외부의 지원 없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영역 또한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영향의 측면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시장에서의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정부와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가 본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시민사회 및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비금전적 자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유입이 요구된다.

사회적경제는 너와 나의 좋은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목적을 두고,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을 기반으로 각자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방식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한다는 특성이 있다. 다양한 비금전적 자원들의 유입은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경제를 한층 사회적경제답게 만들어줄 것이며 사회적경제의 기반을 보다 튼튼히 다지고 그 저변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람들은 함께하는 동료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잠재된 역량을 개발하고 꽃피우고, 이 과정에서 축적된 신뢰와 네트워크의 사회자본은 지역과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호의 특집 주제로 시민과 주민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활동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 사회와 사회적경제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자원봉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와 이를 복돋기 위한 방안을 다룬 총론은 한양대학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의 김종걸 교수가 맡아주었다. 이 글은 아리스토텔레스, 아담 스미스, 존 스튜어트 밀, 칼 폴라니, 로버트 퍼트남 등 여러 학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인간이 협력하는 존재이고, 이타적이고 호혜적인 관계의 확산을 위해서는 사회자본과 사회적 참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 조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이 자신의 가치와 경쟁력을 증명해야 하며, 절대적 노동시간을 줄

임으로써 삶의 여유를 되찾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대우받도록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자원봉사문화의 곽형모 교육위원장은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의 의의를 최근 진행 중인 적폐 청산이라는 관점에서 성찰한다. 적폐 청산은 단순히 적폐 인물의 징벌이나 일부 제도의 변경이 아니라 양적 성장과 물질적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우리 자신에 내면화된 ‘성장 이데올로기’를 벗어던지고 사회의 자원배분 구조는 물론, 개인의 생활 패턴과 환경을 대하는 자세도 동시에 바꾸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는 자원배분의 원리와 삶의 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사유와 삶에 찌든 때들을 벗겨내는 주요한 공간이 될 수 있다. 곽 위원장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노동의 성격을 바꾸고 생활 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제도가 그 길을 열 수 있다. 기본소득이 보편화되고 사회적경제가 사람들에게 자기충족적이고 가치 있는 노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우리 모두 타인에의 배려를 내면화한 시민, 공익에의 긴장감을 실행하는 시민, 더불어 사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생협은 여성 조합원 활동가들의 헌신과 주도에 기반한 독특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 고양여성민우회 생협사업부 시절부터 생협과 함께 해왔고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이사장을 역임한 안인숙 한국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우리나라 생협의 발전 과정에서 조합원 활동가들이 담당했던 역할 및 성격에 대해 검토한다. 한국 생협은 활동가들이 높은 주인의식을 발휘함으로써 출범 후 짧은 기간 동안에 눈부신 성장을 할 수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활동과 노동의 경계가 불분명한 지점들이 생겨났고, 이후 생협의 규모가 커지면서 활동 방향이 생협의 경영 쪽으로부터 사회적·공공적 목적 쪽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생협 활동가들은 높은 노동 강도로 생협을 움직여왔고 밀도 깊은

보람과 성취감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번 것은 아니기에 주변 사람들로부터는 그 치열한 ‘활동’이 쓸모 있는 ‘일’로 인정받지 못한 채 그림자 노동으로 치부되는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이다. 임정은 강서아이쿱생협 조합원은 생협을 만들고 발전시키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치열하게 살아온 세 분 활동가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토대로 ‘자원봉사’라는 명칭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생협 내 여성 조합원들의 ‘활동’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준다. 독자들은 이 글로부터 그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일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보상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보상은 어떻게 가능할지와 같은 어려운 과제를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의 이순옥 자치국장은 조합원 활동가들의 질적 성장에도 전체 조합원의 참여가 정제되고 있는 현실을 조합원의 자원봉사 활동 강화를 통해 타개하려는 아이쿱생협의 최근 시도를 소개한다. 활동가와 조합원이라는 구분이 대부분의 조합원들에게 참여의 제약 요소로 작용했다는 문제의식 위에, ‘활동’과 ‘활동가’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시민으로 성장하는 모든 활동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연대의 모든 움직임을 자원봉사로 규정하고, 아이쿱 조합원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활동을 ‘아이쿱 자원봉사’의 이름으로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이번 특집에 실린 글들을 보노라면, 생협이 추구하는 가치를 보다 잘 실현하고 생협의 활력을 한층 고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고민이 무르익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활동가들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생협의 수준을 높여야 하고 그러려면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도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한편에 있는가 하면, 더 많은 조합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활동의 문턱을 낮추려는 시도가 진행 중인 것이다. 이번 특집이 생협 내 조합원 자원봉사 활동의 미래를 향한 보다 구체적인 고민과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좌담〉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경험하신 분들을 모시고,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

정과 보상, 자원봉사와 열정페이와의 차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개인과 사회의 변화 가능성 등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소중한 토론의 장에 참여해준 김기민 청년연대은행 토닥 이사장, 김수화 행복중심생협 조합원,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박준구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팀장, 손홍택 희망나눔세상 위원, 박범용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연구PM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호의 <이슈>에도 두 편의 글을 실었다. 동작신용협동조합의 주세운님은 동작신협이 협동조합 금융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담당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소상하게 소개해주었다. 독자들은 신협이 협동조합에 대출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을 고려하는지, 인내자금을 공급할 기금이 왜 필요한지, 신협과 협동조합들과의 협동을 통해 주거 문제, 부채 문제, 환경 문제 해결을 돕는 새로운 사회적금융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새롭게 알게 될 것이다. 환경대학교 동물생명환경과학과의 황성구 교수는 얼마 전 큰 파문을 일으킨 살충제 계란 문제에 관해 심도 깊은 글을 써주었다. 살충제 계란 파동 국내의 상황, 살충제 계란이 생산된 이유, 친환경인증제도의 신뢰성 문제, 친환경적 진드기 방제 및 퇴치법 등에 관한 풍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협동조합의 7대 원칙들을 세밀하게 재음미한 <기획특집>에서는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과 커뮤니티 관여의 제6원칙과 제7원칙의 현재적 의미를 톺아보았다. 그동안 연재를 맡아 협동조합의 7대 원칙들에 관해 많은 영감을 준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김형미 소장께 고맙다는 인사를 전한다.

<기획연재> 중인 “협동조합을 가다”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직원협동조합으로 마트를 운영 중인 제주 행복나눔마트를 찾아가 보았다. 이 실험을 주도하고 생활에서 부닥치는 문제를 함께 풀어갈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행복나눔제주공동체의 값진 활동에 박수를 보낸다. 또 다른 <기획연재>인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길라잡이”에서는 지역과 협동조합의 교육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협동의 노력을 통해 어떤 내용의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조직의 기풍을 바꿀 수 있는지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서평>에서는 『협동조합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와 『기업 소유권의 진화』, 두 권의 책을 안내하고 있다. 적폐 청산을 1컷 그림으로 표현한 <만평>, 협동조합의 사회 참여 동향을 알려주는 <협동조합 소식>, 일상의 소비로 지구촌의 빈곤 및 환경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는 <생활 속 사회적경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 활동

우리나라의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는 그동안 적지 않은 성취를 이뤘다. 생협을 비롯한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힘으로 외부의 지원 없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영역 또한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영향 측면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시장에서의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정부와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가 본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시민사회 및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비금전적 자원(non-monetary resources)의 보다 적극적인 유입이 요구된다. 사회적경제는 너와 나의 좋은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목적을 두고,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을 기반으로 각자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방식을 통해 본래의 미션을 달성한다는 특징이 있다. 다양한 비금전적 자원의 유입은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경제를 한층 사회적경제답게 만들어줄 것이며 사회적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그 저변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람들은 함께하는 동료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잠재된 역량을 개발하고 꽃피우고, 이 과정에서 축적된 신뢰와 네트워크의 사회자본은 지역과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호의 특집 주제로 시민과 주민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활동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생협 평론

사회적경제 기반으로서의 사회적 참여

_____ 김종걸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

_____ 곽형모

생협의 주인으로서 조합원 활동

_____ 안인숙

투명하나 총만한 그림자 : 생협 여성 활동가들의 노동을 생각하다

_____ 임정은

조합원의 자부심, 아이쿱 자원봉사

_____ 이순옥

좌담

열정페이와 자원봉사 사이에서

_____ 김기민, 김수화, 민선영, 박준구, 손홍택, 박범용

김종걸
한양대학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사회적경제 기반으로서의 사회적 참여

“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 거짓말로 출세하는 것이
원천봉쇄된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과 실적이 없는 한
윤리적 존재로서 인간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윤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인간 중시의 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을 하나씩 실천하여
성공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
그것이 가장 필요한 선결 과제다. ”

1. 협력하는 종(種)으로서의 인간

인간은 ‘사회적(정치적) 존재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인간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게는 가족과 친구의 관계망 속에서 살며, 크게는 지구 반대편 생면부지의 사람에게까지 관심을 가진다. 이러한 관계를 의식적으로 유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이나 조약과 같은 사회계약의 형태로 발전시킨 것은 생명체 중 인간이 유일하다.¹

생각해보면 우리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사람들과의 연결망 속에서 살아간다. 경제학에서는 시장과 정부를 주로 논의하지만 우리의 일상도 시장과 정부의 작동 원리와는 다른 형태로 움직인다. 가족의 사랑, 친구와의 우정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며 가격 또한 형성되지도 않는다. 먼 곳에 있는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위해 기부를 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것 또한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행동 중 시장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다.

국가 또한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는 먼 존재다. 국가가 개인의 일상 삶에 너무 많이 개입하는 것은 자유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의 작동 원리와는 차이가 난다. 밀 J. S. Mill은 『자유론』에서 “타인에게 실제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근대 자유주의의 기본 이념이다. 내가 귀중하듯 타인도 귀중하며, 내가 억압받고 싶지 않듯 타인도 억압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 표현과 행동의 자유, 다수결에 의한 결정, 소수자에 대한 배려, 토론에 의한 합의 등 자유주의를 유지하는 기본 원칙 중 가장 근저에 흐르는 가치는 바로 개인의 자유다.

1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란 남녀가 결합된 가정(oikos), 여러 가정으로 구성된 마을(kōmē), 그리고 여러 부락으로 구성된 복합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인간은 그 복합체를 구성하는 동물(zōion politikon)이라고 규정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정치적 동물 혹은 사회적 동물로 번역된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천병희 옮김(2009), 숲, 제2장.

클머리를 장황하게 시작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과 국가가 아니라 개인, 가족, 사회라는 지극히 ‘일상적’인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곳에서 작동되는 원리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가성(等價性)’의 원칙도, 국가에 대한 ‘의무’의 원칙도 아닌, 보다 이타적이며 호혜적인 관계다.

『거대한 전환』을 쓴 칼 폴라니(Karl Polanyi)는 사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시장이 ‘악마의 맷돌’처럼 인간본성에 내재한 사회성 혹은 공동체성을 해체하고 파괴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무리 시장의 파괴력이 강력하다고 해도 이타성과 호혜적 관계의 가족과 사회는 면면히 이어진다. 그래서 사회를 파괴해가는 형태의 시장은 계속 유지될 수 없으며, 결국은 사회(공동체)의 반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² 2011년 미국의 월스트리트 점령운동과 영국의 청년 폭동은 시장의 폭주에 대한 공동체의 자기방어를 보여준다. 지난해 겨울 연 1,500만의 시민이 촛불을 높이 든 이유도 시장과 권력이 소수에 의해 장악되고 한국이라는 공동체가 파괴되어가는 것에 대한 위기감의 반영이었다. 세계적으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열풍이 부는 이유도 근본은 마찬가지다. 시장의 폭주, 이것을 옹호하는 권력에 대한 공동체의 반격인 것이다.

지금까지 시장경제를 지탱했던 강력한 사고방식은 자유로운 상행위와 이기적 이윤 추구가 사회 전체의 행복 증진을 가져온다는 것이었다. 아담 스미스(A. Smith)의 『국부론』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문장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장 잘 나타낸다. “우리가 식사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그들의 관심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인간성에 호소하지 않고 그들의 이기심에 호소하며,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의 이익

2 칼 폴라니에 대한 간단하지만 명쾌한 해설은 김균, 「칼 폴라니와 자유주의 비판」(이근식·황경식 편,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삼성경제연구소, 2001) 참조.

을 이야기 한다.”³ 그러나 아담 스미스가 인간 본성에 내재하는 이타적 심성을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한다.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그 천성에는 분명히 이와 상반되는 몇 가지가 존재한다.”, “연민pity과 동정심compassion이 이런 종류의 천성에 속한다.”⁴ 아담 스미스의 세계에 있어서도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은 양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슴’에 의해서 제대로 견제되어가는 것이다.

2. 사회자본과 사회적 참여

그러나 인간의 이타성은 무한정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개개인의 이타적 행동이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확신, 사회 전체의 행복이 결국은 나의 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이타적 행동은 확대된다. 일종의 호혜성의 원칙이다.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분석했던 퍼트남Robert Putnam은 그의 유명한 저서에서 호혜성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호혜성의 체계 내에서 각 개인의 행동은 단기적 이타주의와 장기적 자기이익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나는 언젠가 당신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하고 불확실하며 계산적이지 않은) 기대감에서 당신을 돕는다. 호혜성은 단기적으로는 이타적인 일련의 행동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행동들이 모두 합쳐지면 모든 참여자를 더 좋아지게 만든다.”⁵

3 아담 스미스(1776). 『국부론(상)』, 김수행 옮김(1992), 두산동아, 22쪽.

4 아담 스미스(1759). 『도덕감정론』, 박세일·민경국 옮김(2009), 비봉출판사.

5 로버트 퍼트남(2000). 『나홀로 불링』, 정승현 옮김(2009), 페이퍼로드, 218쪽. 퍼트남은 사회적 자본을 개인들 사이의 연계(connection),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이라고 규정한다. 같은 책, 17쪽.

이러한 호혜적 행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는 톨스토이의 우화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속에서 재구성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외상값을 받으러 갔던 가난한 구두 수선공 세몬이 한 젊은이를 집으로 데려오는 것에서 시작한다.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였던 그 젊은이는 한겨울 벌거벗은 채로 성당 옆에 쓰러져 있었다. 세몬의 부인은 받아오라는 돈은 못 받아오고, 술은 얼굴이 벌겋도록 마시고, 게다가 덤으로 객식구까지 데려온 남편에게 무서운 독설을 퍼붓는다. 그러다 이내 따뜻한 스프와 거친 빵을 내놓기 위해 부엌으로 향한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살피는 마음(이기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남을 위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이다.⁶ 그러나 젊은이가 만약 착실한 일꾼이 아니었다면 부인의 호의는 한 번으로 끝났을 것이다.

이들의 관계가 지속적 신뢰 관계로 발전한 이유는 ① 만남network이, ② 세몬 부부의 따뜻함과 젊은이의 성실함이라는 규범norm을 통해, ③ 결국은 서로 신뢰하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설명한 퍼트넘도 같은 저서에서 네트워크와 규범이라는 차원에서 미국의 사회자본의 형성과 위기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정치 참여, 사회단체 활동, 종교적 참여, 직장에서의 연계, 일상생활에서의 사회적 연계, 이타심, 자원봉사, 자선심, 정직함, 신뢰, 사회운동 등 다양한 차원에서 미국의 사회자본이 감소하고 있음을 분석한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과제를 설정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사회자본을 확충하여 호혜적 관계의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자원봉사, 기부라는 호혜적 행위는 한 사회에 축적된 사회자본의 양만큼 더욱 늘어날 수 있다. 해결 실마리의 첫째는 다양한 참여를 통해 사람들의 관계망을

6 레프 톨스토이(1885),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순영 옮김(2015), 문예출판사.

확충하는 것이다. 둘째는 참여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규범을 참여자가 내면화하는 것이다.

밀 J. S. Mill은 그의 『대의정부론』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사람들이 공공 영역에 참여하면 자기와 관계 없는 다른 이해관계에 대해 저울질하게 된다.” “결국 자신이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면서 사회 전체의 이익이 곧 자기 자신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생각을 품는다.” 고대 아테네가 커다란 발전을 이룩했던 이유도 바로 일상의 공적인 참여를 통해 일반 시민의 지적, 도덕적 수준이 놀라울 정도로 높아졌기 때문인 것이다.⁷

사회적경제 또한 그 성격상 시민의 다양한 참여를 촉진한다. 일반 기업도 단순히 재무적 성과 이외에 지배구조의 민주성, 인권 중시, 노사 화합, 친환경,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참여 등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활동의 주목적은 어디까지나 이윤 추구에 있다. 이것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공정, 연대’의 가치에 입각해,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협동조합의 정체성과는 차이가 난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단순한 사회 공헌이 아니라, 협동조합의 이념을 지역사회에서 확대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1980년 국제협동조합연맹 모스크바 대회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레이들로 A. F. Laidlaw 박사는 협동조합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별)협동조합 단독으로는 주류 경제 시스템과 사회질서에 실질 변화를 일으킬 수 없기” 때문이다.⁸

비슷한 의미로 성남용인 한살림의 윤형근 상무는 한양대에서 열린 세미나(2015년 10월 30일)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생활은 의식주, 상하수도, 전기·에너지, 폐기물 처리, 보건의료, 교육·문화 등 생활의 대부분을 시장과 행정기관에 위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들에게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생활에서) 먹거리의 문제를 교육·교통·복지·문화 등

7 존 스튜어트 밀(1861), 『대의정부론』, 서병훈 옮김(2012), 아카넷, 72~73쪽.

8 A. F. 레이들로(1980), 『21세기의 협동조합』, 염찬희 옮김(2015), 알파.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지역에서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맞는 말이다. 둘러보면 한국 사회에서 협동조합의 지역운동은 다양하게 전개된다.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는 지역 활동가 지원, 생협시민학교, 식생활교육센터, 재능기부 활동, 윤리적소비운동, 한국사회적경제씨앗재단 등 여러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관련을 맺는다. 수원아이쿱생협의 민바우 모임에서는 위험한 전기줄 등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민원을 제기한다. 진주아이쿱생협은 시 예산을 분석하고 의정감시 활동을 한다. 홍성, 안산, 안성, 완주, 전주, 서울 성북, 강동, 노원, 양천 등 거의 모든 지역에서 지역의 활동가들은 보다 좋은 사회 만들기에 매진한다. 협동조합 유전자가 만 들어놓은 다양한 참여의 활동인 것이다.⁹

사회적기업의 경우 애초부터 이윤 극대화를 단일 원리로 움직이는 영리 기업 활동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특히 비영리 원칙(사적배당 및 자산분배 제한)에 입각하며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기업 활동은 영업수익 이외에 사회의 자발적인 선의의 자원들과 결합하기 쉽게 한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기업 붐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사회적기업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 세계 유수의 경영대학원(하버드, 옥스퍼드, 스탠퍼드 등)에서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 그리고 기업의 사회공헌 자금이나 개인 기부 및 자원봉사가 사회적기업과 연결되고 있다는 현실은 이 조직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참여가 벌어지며 사회자본이 축적되고 있다는 현실을 나타낸다.

9 자세한 김중걸(2017.3), 「지역, 운동, 정치로서의 협동조합」(『김중걸의 창』,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3. 불합리한 제도, 열악한 사회자본

그러나 한국 사회의 고민은 사회적경제, 특히 중요 구성 요소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이 한국 시민사회의 자발적 운동의 결과물만은 아니었다는 점에 있다. 정부의 공식 문서에서 사용되는 어법은 취약계층 일자리,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공동체, 시민사회, 연대 협력 등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실제로는 취약계층을 경제적·사회적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부 창조물의 성격이 강하다.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 정책은 “우리 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실시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조). 마을기업 지원도 행정안전부의 정책사업명으로서 계속되고 있다. 모두 다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과 사회서비스 확충이 주요한 정책 목표이다. 이 정책 목표에 따라 사회적기업은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등 일부를 지원받으며 세제 혜택을 받는다. 마을기업은 직접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그러나 이것은 애초부터 본말이 전도된 논리다. 사회적기업이 사회문제를 풀기 위한 시민의 주체적 노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부 자원 이전에 사회의 선의의 자원을 잘 결합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자원봉사, 기부 등이 잘 연결되어 있다는 사례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이들이 진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사회적기업의 인증 조건은 ① 일자리제공형은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30% 이상, ② 사회서비스제공형은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③ 혼합형은 근로자 및 사회서비스 수혜자가 각각 20% 이상, ④ 지역사회공헌형은 지역 취약계층 고용 20% 혹은 서비스 제공 20% 이상, ⑤ 기타형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인증 조건에서 말하는 ‘취약계층’이란 자활사업에서

의 그것보다 아주 넓은 범위로 규정한다. 벤츠를 몰고 다녀도 55세 이상이면 취약계층이며, 해외 유학을 다녀온 청년이라도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취약계층이다. 이렇게 넓게 취약계층을 규정하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일반 국민들의 경제행위가 취약계층 사업이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소규모 영세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수단이 된다. 이 역차별의 문제는 마을기업이라고 자유롭지 않다. 2016년 현재 마을기업의 업종은 일반식품(42.8%), 전통식품(15.6%)이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60% 가까이가 식품업종이다. 같은 마을에 지원받는 떡집과 지원받지 못하는 떡집이 공존하는 것이다. 공동체가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마을기업의 본래 지향 형태임을 생각하면 한국의 상황은 상당히 일탈되어 있다.¹⁰

두 번째 문제는 대한민국의 사회자본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연구로 유명한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시민사회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시민단체 상근 인력 및 자원봉사자의 노동시간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9.80%, 8.54%를 차지하는 미국, 영국과 비교해 한국의 경우 2.43%로 그 격차가 크다(www.ccss.jhu.edu). 전체적으로 한국의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의 지원규모가 특별히 작아 보이지는 않는다. 현재 한국의 비영리단체의 법적 규정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재단법인(인가제), 비영리단체지원법(2000년)에 따른 비영리단체(등록제)가 근간이 된다. 기본적으로는 면세이며 각종의 보조금 등이 지급된다. 옆 나라 일본에서 비영리단체에 대한 면세 조항이 일부 신설된 것이 2012년이었던 것을 보면 “적어도 일본보다는” 폭넓게 보호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는, 정부의 비영리단체 지원 전체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10 영국의 마을기업(communitiy business)의 상당수가 마을의 공동시설(communitiy hub), 산촌 지역의 스포츠센터 및 교통편의 사업인 것을 생각하면 현저한 차이가 난다. 전대욱(2017.10.27), 「한국 마을기업의 현황과 진단」, 마을기업정책포럼, 행정안전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각 부처별로 시행되는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사나 자료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가면 더욱 극명히 드러난다. 또 다른 하나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재무자료 및 성과지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사회적경제를 논의할 때 비영리 조직을 거론하는 이유는 이들이 사회적경제의 중요한 수입 수단인 사회적 선의(기부, 자원봉사 등)를 조직하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투명하지 않은 비영리 조직의 존재는 사회적 선의를 조직할 방법을 차단하며 결과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자율적인 발전을 저해한다. 영국의 경우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흘러오는 자금의 상당 부분은 각종 자선기금으로부터 나온다. 20만 개가 넘는 자선단체가 자선위원회(Charity Commission)에 등록되며, 자선단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각종 기부금 등이 자선단체에 몰릴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¹¹

4. 무엇을 할 것인가?

한국 사회에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증진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이익만을 좇아가는 단순한 ‘경제인(호모 에코노미쿠스)’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사이코패스로 불러야 한다. 때로는 남들에게 베풀고,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기도 하는 윤리적인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에 대한 믿음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 그 생각

11 이러한 자금들이 300여 개 있는 전국 단위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수천 개에 달하는 광역별, 기초지자체별, 마을 단위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현장에 투입된다. 자세한 김종걸(2013.7.3), 「한국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발전방향」(전국중간지원기관 정책토론회 기초발제 논문) 참조. 간단한 요약은 김종걸(2013.7.23), 「사회적경제를 위한 중간지원조직」(『국민일보』 경제시평)

과 마음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가야 한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 거짓말로 출세하는 것이 원천봉쇄된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과 실적이 없는 한 윤리적 존재로서 인간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윤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인간 중시의 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을 하나씩 실천하여 성공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 그것이 가장 필요한 선결 과제다.

둘째는 삶의 여유를 되찾아야 한다. ‘저녁이 있는 삶’이 없는 한 애초부터 사회적 참여는 불가능하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우리 모두 너무 지쳐 있다. 절대적인 노동시간을 줄이지 않는 한 다양한 참여는 어려워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기관 등을 시작으로 자원봉사를 위한 유급휴가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2015년 영국 총선거에서 보수당에서조차 15세에서 17세까지의 청소년에 대한 공동체 교육 및 자원봉사를 강화하는 공약을 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근로자에게 연 3일간 자원봉사의 휴일을 부여하는 공약 또한 파격적이었다. 이런 정책을 실시했던 이유는 바로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함이었다.¹² 고대 아테네에서도 모든 시민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민회, 민회에 안건을 제기하기 위한 500인 위원회, 그리고 각종 사안을 재판하기 위한 배심원 법정에서 일상적으로 참가했다. 빈민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참가에 따른 일당도 지급했다.¹³ 이 모든 것은 앞으로 한국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사항이다.

셋째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스스로의 가치와 경쟁력을 증명해야 한다. 한국 4대 생협 매출액은 7,071억 원으로 이마트의 5.6%(2012년)에 불과하다. 의료생협 전체 매출액은 200억 원으로 가톨릭대학교병원 1조 7,843억 원, 삼성병원 1조 4,000억 원과 비교조차 불가능하다. 사회적기업도 상당

12 김종길(2015.6.9). 「영국 보수당 압승의 비밀」, 『한국일보』

13 자세히는 김종길(2017.3). 「민주주의자의 기본 덕목」(『김종길의 창』,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수 정부 지원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전환 전 늘푸른돌봄센터)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장애인활동 지원, 노인돌봄 및 산후도우미, 아동심리 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현재는 서울시립 중랑노인전문요양원(2013년 11월)과 광진구립 꿈맞이어린이집(2017년 3월)도 위탁 운영한다. 지역의 시민 조직이 자활사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의 방식으로 지역 고용문제 해결의 담당자로 커나갔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고유한 사회적 성과를 매년 사업장 별로 책정하고 그 평가 과정과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¹⁴ 사회로부터 다양한 선의의 자원을 연계하려면, ① 능력을 증명하고, ② 투명하게 공개하며, ③ 이윤과 자산 사용을 사적으로 배당하거나 처분하지 말아야 한다. 당연한 원칙이지만 한국의 사회적기업 중에는 잘 통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넷째는 정부는 관련된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 현재 가장 이해하기 쉬운 한국에서의 사회적경제 정부 정책의 중요한 목적은 ① 시장에서 스스로 자립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②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정책의 주요 대상도 구체적으로는 영세 자영업자, 농어민, 실업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염두에 둔다. 그리고 정책 목표를 실현시키는 수단을 시장경제의 하위 부문(마을기업, 자활공동체, 일반협동조합)과 비영리의 경제 부문(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화로 이해된다.¹⁵ 그러나 정부의 지원 대상이며 그 목적이 일자리와 사회서비스의 제공에 있다면 굳이 사회적경제라는 고깔모자를 씌우지 않아도 정책 목표는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 만약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영리 분야에서 스스로 성장해 나간다면 굳

14 민동세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이사장 면담(2017.11).

이 그것을 막을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경제를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윤호중,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제3조)이라고 규정한 것은 애초의 정책목표와도 배반되는 것일 수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2가지 선택 기로에 서게 된다. 정부 정책이, ① 지원 대상의 자립적 발전이 목적인가. 아니면, ② 사회적경제 원칙을 견지하는 조직으로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목적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정부의 사회적경제법 수정 의견의 제2조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이윤을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하기를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바로 이러한 고민의 반영이다. 그리고 그 고민이 해소되지 않은 한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은 어려워진다.

그러나 만약에 정부가 시민의 자발적·호혜적 활동 공간으로서 사회적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정부 지원에 따른 새로운 제약 조건(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자활기업과 같이 엄격히 규정된 취약계층의 경제 행위에 대해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지원은 충분히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의 경우에는 지원에 따른 확실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책임의 중요 구성요소는 이윤의 배당 금지와 청산 시 잔여자산의 분배 금지 규정이다. 배당 금지의 정도, 외부투자자본의 회부 가능성 정도 등 제도 설계는 다양한 옵션

15 가령 사회적기업 정책은 “우리 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실시되며(사회적기업육성법 제1조), 협동조합 정책은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협동조합기본법 제5조)으로 하나 정책 목표의 중심은 안정된 일자리에 맞추어져 있다.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에 있어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제9조)하며, 자활을 돕기 위한 자활센터(제15조),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제18조) 등도 규정한다. 마을기업도 안전행정부의 정책사업명으로서 2010년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시작으로 2011년 ‘마을기업 지원사업’으로 계속되고 있다. 모두 다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과 사회서비스 확충이 주요한 정책 목표로 되는 것이다

선이 필요하나 적어도 영국의 CIC(community interest company)와 같은 새로운 법인격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¹⁶

다섯째는 시민의 자발적인 그러한 면에서 현재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실질적 자치의 가장 기초 단위가 되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2012년 5월 정부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제안했던 모델들, 즉 현재의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자치위원회의 산하에 두는 것과 같은 새로운 주민참여 모델이 강구되어야 한다.¹⁷ 그것만이 아니다. 지역발전 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기초자치 단위로 이양하는 (가칭)지방발전법 제정도 필요하다. 주민참여, 골목상권, 지역복지 등의 각종 과제는 마을과 기초 단위에서 제대로 계획되고 실행될 수 있다. 마을 주민 스스로 마을 경제와 복지의 발전 계획을 세우는 것, 그리고 기초지자체가 각각의 계획을 종합하는 것이 사회경제적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다.¹⁸

여섯째는 시민 조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한 ‘(가칭)시민공익위원회’의 설립은 상당히 시급한 과제다. 현재 시민 조직의 회계장부는 과연 믿을 만한가? 정부의 비영리단체 및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금은 투명하게 운영되는가? 아쉽게도 이 모든 것을 판단할 정보는 거의 없다.¹⁹ 이러한 규율 방식은 법원에서 시민사회단체의 비영리 여부만을 심사하는 미

16 새로운 법인격 논의에 대해서는 김혜원,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현황 및 법인격 부여 필요성」(사회적경제법제도 발전 방향 세미나, 재단법인 동천, 2017년 11월 27일) 참조.

17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2013).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향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물론 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담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18 지금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는 광역 단위의 발전 계획을 세우고(제7조), 이것을 지역발전위원회가 심의(제22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혁신 공간으로서의 기초 단위(군/구/읍/면/동)에 대한 계획은 부재하다. 지방발전법 및 지방자치법개정 등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김종걸 등(2015), 『인구구조 변화와 지속가능한 행정기능 발전 방안』(행정자치부) 참조.

19 현재 국회에 계류된 사회적경제기본법에서도 사회적경제 조직이 ①정관, 규약 등 관련 규정, ②총회, 이사회 등 회의록, ③사업결산보고서, ④기타 필요사항 등을 사회적경제 통합정보시스템에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유승민법 30-31조, 윤호중법 42-43조). 그러나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게 함으로 현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유통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조직을 시민 조직으로 발전시켜가기 위해서는 투명성의 레벨을 한층 높여야 한다.

국식 모델보다는,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기관이 시민사회단체의 비영리성과 공익성을 심사하는 영국식 모델을 고려해볼 만하다. 영국의 자선위원회^{Charity Commission}는 공익성을 가진 시민 조직의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며, 정기적으로 철저한 조사도 실시한다. 그러한 면에서 ‘시민공익위원회법’은 조속히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사고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된다. 과연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서 사회적경제 정책을 기획재정부가 통괄하는 것이 맞는가? 사회적경제 정책이 경제 정책, 사회 정책, 시민사회 정책의 하이브리드 지점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차라리 영국과 같이 별도의 시민사회청^{Office of Civil Society}을 설립하는 것이 방법 아닌가? 아니면 내년도 이후 분권형 총리가 앞으로의 시대정신이라고 한다면 총리실에 사회혁신실을 두고 그곳에서 관장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과거 박근혜 정부 시기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이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의 최고 조율 부처로 기획재정부를 생각했던 이유는 그 정부가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중요시한다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촛불혁명 이후의 새로운 정부는 시민의 권리와 자발적 참여를 통해 경제사회의 발전을 추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상할 시기에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한 면에서 사회적경제 정책의 담당 부처를 별도 설립, 혹은 총리실로 옮기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

반가운 것은 현재 국회에 민주당 윤호중 의원 발의의 ‘시민공익위원회법’, 김경수 의원 발의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시민 조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가치가 국가 및 공공기관의 행위의 기준으로 삼으려는 중요한 법적 기반인 만큼 20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함께 시급히 입법 절차를 밟기를 희망한다.

곽 형 모
한국자원봉사문화
교육위원장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

“ 자원봉사는 ‘가치 연대’가 필요하다.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영역끼리
연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원봉사와 사회적경제는 가치 연대의
좋은 파트너이다.
그 핵심에 노동이 있다.
노동하는 방식과 내용을 바꿔야만
자원봉사, 사회적경제의 길이 보인다.
반대로 자원봉사를 통해서
노동의 질을 바꿀 수 있다.
자원봉사,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꿈을 꾸기 위해서는
노동을 바꿔야 한다. ”

1. 시민은 무엇으로 사는가

2016년 겨울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혁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사회 구석구석에 파리를 틀고 있던 권력이 '적폐 청산'이란 이름으로 벌진 몸뚱이를 드러내고 있다. 적폐 청산 소급 연한은 아직 지난 정권 9년이지만 시민의 요구에 따라서는 반세기 또는 100년, 200년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쉽게 드러나지도, 시민들 스스로 인정하려 들지도 않는, 그렇게 징벌할 수도 없는 권력이 있다. 바로 지난 반세기 동안 이 땅에서 살아 가는 모든 이의 생활 방식, 일상, 머리 위에 군림해왔던 '성장 이데올로기'이다.

성장 이데올로기는 아무도 대중에게 강요하지 않았기에 청산 타깃에서 벗어나 있다. 그것은 형체가 없고 색깔도 없어서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잘 달라붙는다. 성장 이데올로기는 그 연원이 무엇 이든 이미 우리의 수족, 심장과 같은 것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저항하기가 쉽지 않고 청산하기는 더욱 어렵다. 내가 스스로 나의 팔을 잘라야 한다고 생각해보라!

'발전'은 총량 지표들의 양적이고 외형적인 경제 성장뿐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을 망라하는 질적이고 내용적인 사회 발전을 포괄한다. 하지만 한국의 근대화·산업화는 오로지 성장¹만을 편향적으로 추구했을 뿐, 종합적인 사회 발전을 이룩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압축적 근대화의 과정에서 고도성장 이면의 그늘과 후유증을 이미 경험해왔다. '선성장 후분배'의 논리, 환경·안전을 압도하는 개발 담론, 불균형 발전(도시-농촌,

1 그동안 성장과 발전의 차이에 대해서는 1960년대 외자의존형 외연적 성장이나 자립경제를 지향하는 내포적 발전이나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왔다. 박현채는 내포적 발전을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의 민족경제론은 이제 21세기 글로벌 자본주의를 설명하기 어렵다. 즉, 그의 이론은 수명을 다했다. 그러나 철저히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분석하고 글을 썼던 그의 치열했던 자세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중앙-지방)의 만연과 부작용, 노동자·농민 등 사회적 약자의 소외와 배제, 복지 문제의 개인·가족 책임 전가,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삶의 질 등이 그것이다.²

편차는 있지만 진보 진영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성장을 통한 분배’ ‘친성장 친분배’ ‘진보적 성장’은 슬그머니 ‘포용적 성장’으로 바뀌더니 요즘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진화했다. 정치하는 사람은 성장에 반발이라도 걸쳐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성장 이데올로기가 딛고 있는 정치·사회·시민적 인프라는 바위처럼 단단하다. 성장 이데올로기는 이미 한국 사회에 집단무의식화 되어 있다.

성장 이데올로기는 경제는 물론, 정치, 교육, 문화, 심지어 스포츠, 종교에까지 속속들이 녹아들어 있다. 박정희가 죽은 지 40년이 되어가지만 그는 아직 살아 있다. 박정희는 죽었지만 그가 남긴 성장 이데올로기는 각양각색의 흔적으로 변용되어 일상 속에 편재한다. 자신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쩌면 그 흔적이 어딘가 남아 있을지 모른다. 이것이 성장 이데올로기의 위력이자 우려이다.

앞에서 성장 이데올로기의 뿌리가 박정희인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 그 연원은 더 깊다. 성장 이데올로기의 키워드는 ‘조국 근대화’였다. 조국 근대화의 뿌리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다보면 19세기 말 도입되기 시작한 사회진화론에 닿게 된다.³ 사회진화론은 우리에게 왜 한국이 생존경쟁에서 약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와 어떻게 하면 강자가 될 수 있으며, 왜 근대화와 문명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이에 관한 정당성을 제공하는 이론이었다. 사회진화론은 서구의 제국주의 국가에서처럼 강자의 이해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이 아니라 약자가 스스로 강자가 되는 것을 돕는 이론으로 변형되었다.⁴

2 윤상우(2016년). 『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한국사회』 제17집 1호, 4쪽.

사회진화론은 이후 자강론(自強論)의 사상적 기초가 된다. 사회진화론의 논리에 따르면, 자연세계와 마찬가지로 열국도 제국주의적인 경쟁에서 승리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절박한 상황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나라를 구하려는 당면 목표는 바로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었다. 승리를 위해서는 결국 스스로를 강하게 하는, ‘자강(自強)’밖에 도리가 없었다. 구한말 자강사상은 이렇게 배태되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교육과 계몽이었다.⁵

자강론은 이후 두 갈래로 나뉘어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된다. 첫째, 신채호, 박은식 등의 역사민족주의 계열이다. 그들에게 사학은 과학이라기보다는 국권회복운동, 제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였다. 특히 신채호는 국가를 생존경쟁의 단위로 강조하면서 약육강식의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애국심을 강조했다. 신채호가 나중에 친일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한중일)동양삼국연대론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김성수, 이광수류의 자치파이다. 특히 이광수는 민족개조론(1922)을 통해 ‘참정권 획득 청원’, ‘실력 양성’, ‘민족성 개조’를 주장함으로써 일제 지배 안에서의 자치를 주장했다. 이광수의 주장대로 하자면 그는 일제

3 요순(堯舜)시대를 이상으로 여기는 상고주의 역사관에 젖어 있던 구한말 지식인들에게 국내외적 경쟁을 합리화 한 사회진화론은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구한말 조선에 사회진화론을 처음 소개한 사람은 미국 유학 경험을 가진 유길준이었다. 그는 사회진화론에서 점진적 개혁과 문명에 도달하는 길을 발견하려 했던 것 같다. 그에게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이다. 게이오대학 설립자이기도 한 후쿠자와 유키치는 유길준이 그 대학에 유학할 때 자신의 집에 기숙하도록 했다. 그는 김옥균이 일본에 망명했을 때도 뒤를 봐주었다. 그의 초상화는 현재 일본 1만 엔권 지폐에 들어 있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일본인들에게는 근대화의 아버지로 불리지만 탈아론(脫亞論)을 주창했던 제국주의자이다. 그의 주장은 사회유기체론, 사회진화론, 국가주의, 약육강식, 부국강병으로 요약된다. 그 후 후쿠자와 유키치는 이광수와 최남선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이광수는 일본 유학 시절 그의 묘를 찾아가 “그가 비록 차체에 부재하시나 그의 유한 덕과 입한 언어 천추에 그의 최애하는 일본 국민의 감사하는 도사가 되고 천우가 되리니, 그의 생명은 그의 조국의 영원함과 동히 영원하고 그의 조국과 영광됨과 공히 영광되리다...”라며 머리를 조아리기도 했다.

4 전복희(1996). 『사회진화론과 국가사상』. 한울아카데미. 10쪽.

5 이만열(1999). 『한말·일제강점기의 지식인』, 『한국의 지성 100년 : 개화사상가에서 지식계열라까지』. 민음사(2001).

말기의 탄압을 이겨내지 못해 변절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궤결의 씨앗을 담고 있었던 것이 된다.

이렇게 보자면 구한말 ‘사회진화론 도입-자강론-실력양성·자치론-친일-박정희의 조국 근대화’를 거쳐 ‘식민지근대화론’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결코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 일본이 대륙 침략을 위해 만들어놓은 철도, 병참기지를 근대화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는 지난 100여 년 동안 유전인자처럼 물려받은 성장(=성공) 이데올로기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특히 분단체제는 성장 이데올로기가 왕성하게 자랄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제공했다. 전쟁과 쿠데타를 거치면서 다양한 사상과 세계관이 철저히 봉쇄된 채 오로지 물질·성장·성공 이데올로기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인은 상대적으로 물질주의적 생활 태도가 강하다. 한국은 미국(47.22%), 일본(42.95%), 스웨덴(51.32%), 멕시코(45.96%)에 비해 탈물질주의자가 14.4%밖에 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첫째, 탈물질주의적 가치와 대척점에 있는 물질주의적 가치는 성장과 안보를 무엇보다 중요시한다. 둘째, ‘한강의 기적’에 대한 기억이 각인되어 있다. 셋째,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다. 고속 성장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낳는다. 여기서 성장이 둔화되면 한국인 자산의 80%를 차지하는 부동산 거품이 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⁶ 따라서 한국인에게 성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20~3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송호근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한국에서는 개인의 자유, 주체성의 탐색보다 집단적 민족주의와 성장 위주의 국가주의가 시민 계층으로 발돋움하던 개별 시민의 텅 빈 마음을 장악했다. ‘국민의 과잉’은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자율권을 포박당한 채 빈곤 탈출을 향

6 장덕진(2016). 「데이터로 본 한국인의 가치관 변동 : 김우창, 송복, 송호근의 양적 변주」, 박대준미래전략연구소, 12쪽.

한 근대화·산업화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했던 한국의 국가적 상황과 국제정치적 위상에서 기인한다.” 성장이 가장 뚜렷한 성과이자 정치적 정당성의 근거였던 한국의 “지배집단에게 계급적 세계관은 여전히 불온했고, 빈곤층, 노동계급, 저항집단의 절규는 성장저해적 독소로 규정되었다.”⁷

그렇다면 적폐 청산의 최대 과제는 성장 이데올로기와의 싸움이다. 성장 이데올로기는 시민들 스스로 적폐와 담합하게 만든 뿌리이다. 2016년 겨울 박근혜의 탄핵을 찬성한 국민은 80%였다. 그렇지만 박근혜, 이명박의 멘탈리티와 완전히 다르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시민이 몇이나 될까. 이명박, 박근혜는 우리 안에 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성장 이데올로기가 있다. 이것이 친일파 청산이 어려운 이유, 박정희 유령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일 것이다.

성장지상주의는 경제 성장을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추구해야 할 지상과제이자 절대가치로 간주한다. 따라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다 허용할 수 있다는 맹목적 인식과 도구적 가치관을 사회 전반에 보편화하고, 과점상의 문제점이나 도덕적·윤리적 하자를 문제 삼지 않음으로써 민주주의적 가치와 절차를 훼손하는 사회적 심리 상태를 초래한다. 성장지상주의는 학벌주의와 다양한 서열주의, 승자/패자의 구별 짓기와 승자독식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한다(윤상우).

무엇보다도 성장 이데올로기의 가장 큰 맹점은 지난 반세기, 아니 20세기에 걸쳐서 이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성찰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데 있다. 오로지 살아남기 위한 생존술, 이기기 위한 경쟁력만이 사회 윤리가 되었다. 그리하여 타인에의 배려를 내면화한 시민, 공익에의 긴장감을 실행하는 시민, 더불어 사는 시민은 없고, 국가 명분에 수직적으로 동원된 원자화된 개체인 국민, 수평적인 관계에는 한없

7 장덕진, 위 논문, 13쪽.

이 미숙한 존재만 남았다(송호근).⁸

이처럼 성장 이데올로기는 한국 사회 밑바닥에 차곡차곡 내려앉아 두터운 지층을 형성했다. 하지만 성장 이데올로기와의 싸움이 단지 논쟁이나 담론 수준에 머무는 것은 허공을 향한 외침에 지나지 않는다. 성장 이데올로기와의 싸움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자원분배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그것은 시민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2. 새로운 자원배분의 원리

자원배분의 원리는 크게 보자면 세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사회적 자원의 배분이다. 여기서 사회적 자원은 사회를 운영하는 에너지를 가리킨다. 공장을 돌리는 데 에너지가 필요하듯이 사회를 운영하는 데도 에너지가 필요하다. 토목 건설, 교육, 환경, 문화, 복지, 군사 등 어느 곳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느냐에 따라 사회 운영 양상은 크게 달라진다. 경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어느 쪽에 에너지를 더 배분하느냐, 농업과 공업, 문화의 비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탈핵의 본질은 단지 ‘에너지’ 전환정책이 아니라 한 사회의 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데 있다. 그러한 자원배분의 원리가 바로 전략이다.

둘째, 개인의 생활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이다. 인간은 누구나 돈, 감정, 건강, 재능, 지식, 열정, 시간, 욕망 등 삶의 자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삶의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즉, 삶의 설계이다. 가령, 개인이 돈을 버는 데 하루 몇 시간을 투자하느

8 장덕진, 위 논문, 14쪽.

냐, 퇴근해서 가사노동, 운동, 돌봄, 자원봉사, 학습, 문화생활에 시간과 열정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생활의 가치가 달라진다. 한 개인의 생애사는 시간과 돈,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색깔이 달라진다.

셋째, 인간이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이다. 인류 역사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던 1917년 러시아혁명 때만 하더라도 자원배분에 있어서 환경문제는 그리 큰 변수가 되지 못했다. 마르크스도 레닌도 모택동도 사람(지배권력)과의 투쟁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한국의 경우도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회변혁의 가장 큰 과제는 지배권력과의 싸움이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인류는 자연으로부터 얻은 자원의 고갈, 환경오염이라는 어찌면 더 큰 변수가 권력 옆에 버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바로 이 지점이다. 적폐는 검찰, 재벌, 언론, 국정원을 비롯한 마피아, 친일파 등 각종 거대권력 집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적폐는 시민들의 삶을 옥죄는 왜곡된 자원배분 시스템에 편재한다. 그것은 크게는 세계 자본주의체제, 한국 자본주의체제에서부터, 일상의 작은 욕망에 속속들이 스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적폐 청산을 위해서는 제도 몇 개를 바꾼다거나 적폐 인물을 징벌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의 자원배분 구조는 물론이고 개인의 생활 패턴, 환경을 대하는 자세를 구석구석 바꿔야 한다.

이러한 자원배분의 세 섹터는 서로를 굳건히 붙들고 있는 관계이다. 가령, 장시간 노동은 개인의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의 의지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것은 사회적 자원배분 구조를 바꿀 때만 해결할 수 있다. 반대로 시민들 스스로 사회적 자원배분의 원리에 맞춰서 자신의 생활 패턴을 바꿔가야만 적폐 청산이 가능할 것이다. 시민 참여 없는 사회적 자원배분은 공허하다. 마찬가지로 환경문제를 외면하고 사회적 자원의 배분, 개인의 생활 패턴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처럼 구조와 행위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 상호결속의 관

계이다. 그렇게 사회적 자원배분의 원리, 개인의 생활 패턴,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새롭게 바꾸기 위한 실험이 사회적경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회적경제에 길을 묻다

사회적경제의 사전적 의미는 “1) 국가와 시장에 의해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필요에 대응한다는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2) 폭넓은 시민사회의 주도성과 그것들의 결속을 보장하는 참여주의 모델로서 사회적 소유를 실현하며, 3) 호혜와 연대의 상호부조의 원리를 토대로 축적되는 사회자본에 기초한, 경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정치·사회적 개입 전략”⁹이다. 다른 정의로는 “구성원이나 공공을 위한 목표,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수익 배분에 있어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의 중시라는 네 가지 원칙을 따르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경제활동”¹⁰이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사회적경제의 사전적 의미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맥락적 의미이다. 즉, 사회적경제는 앞 장에서 말한 세 가지 원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이다. 여기서 연결지점이란 사회적경제가 담고 있는 힘은 무엇이며, 사회적경제 앞에 놓여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을 뜻한다.

첫째, 자원배분의 원리를 바꾸는 것이다. 2016년 겨울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이게 나라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국가가 공정한 자원배분을 해주지 못한 데 대한 성토이자 분노였다. 촛불혁명은 민주적 의사결정

9 장원봉(2014), 「지역살림운동과 협동조합 : 새로운 경제전략으로써 사회적경제」, 한살림 기초교육 강의 자료.

10 김석호,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핵심가치의 이해」, 사회적기업지원과정 강의 자료.

에 의한 투명하고 공정한 자원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소비자-노동자-운영자-지방정부-자원봉사자의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지향하는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일치한다. 또한 사회적경제가 가야 할 길에 놓인 조건이기도 하다.

둘째,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자원배분이 바뀌면 삶의 방식도 바뀐다. 신자유주의체제에서 노동자들은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한다는 강박을 갖기 마련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필연적으로 자신을 장시간노동, 시간빈곤, 고(高)스트레스에 밀어 넣는다. 이에 비해 사회적경제는 녹색노동, 적정노동시간, 적정임금, 녹색소비를 지향한다. 노동과 소비가 바뀌면 삶의 방식도 바뀐다.

셋째,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다. 냉정하게 본다면 가까운 시일 안에 사회적경제가 시장경제를 대체할 수 있다거나 국가적 차원의 재분배 기능을 대신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사회적경제가 촛불혁명, 적폐 청산의 요구에 부응할 수는 있다. 촛불혁명은 스펙주의, 물질중심주의, 우월주의, 일등주의, 고속주의, 무한경쟁, 승자독식을 청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지점은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한다. 사회적경제는 구성원들의 자발적 동기를 끌어내어 공감·협동·신뢰를 높이고, 그들을 경제공동체 속의 책임 있고 유능한 시민으로 성장시킨다.¹¹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는 시장 영역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없도록 취약계층에 눈길을 돌린다. 사회적경제는 자본 축적보다는 사회자본 향상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공동체 구성원들의 복리 증진을 도모한다.

하지만 사회적경제가 사회적경제 하나만 뚫 떼어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법이나 기금 조성 등 제도 확충이 필요하지만 문제는 오히려 사회적경제 내부에 있어 보인다. 핵심은

11 박종현(2017.6.26). 「사회적 경제는 경제 민주주의의 학교」, 한겨레.

사회적경제가 본래 안고 있는 ‘노동’이다. 노동의 성격, 노동을 대하는 태도, 노동이 추구하는 가치, 노동의 대가는 사회적경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바로 이곳이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의 가치가 연결되는 지점이다.

4. 자원봉사의 다른 길

그동안 자원봉사가 사회 변화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는 매우 다양한 갈래로 연구되어왔다. 자원봉사가 지닌 사회적 영향력 개념의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 * 사람들이 살아가고, 일하고, 상호 관계를 맺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조직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대처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공공 또는 민간의 조치로, 이로 인한 사람들의 모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결과 (Burge & Vanclay, 1996)
- * 자원봉사 활동의 결과로 지역사회나 수혜자에 대한 실제적이고 측정 가능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에 대한 효과성(Minnesota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1997)
- * 사람들과 사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일하고, 상호 관계를 맺고, 그들 자신을 조직하고 기능하는 방식의 변화를 꾀하는 어떤 계획된 조치(UNEP, 2002)
- * 지역사회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의 돌보는 힘을 동원하여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것(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4)
- * 사회 구성원으로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인간이 하는 공적 또는 사적 활동의 결과로서 일, 놀이, 삶의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활동을 한 사람들의 변화, 누구에게 혜택이 되고 또 누구에게 그렇지 않은가(Centre

for Good Governance, 2006)

*대단위 커뮤니티나 사회에서 이뤄지는 활동, 프로그램이나 이니셔티브의
효과나 결과(Brudney & Nezhdina, 2011)¹²

위 사회적 영향력 개념의 주된 초점은 사회문제 해결, 사람의 태도 및 행동 변화, 프로그램의 효과에 맞춰져 있다. 그런데 정작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노동은 빠져 있다. 노동을 빼놓고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 더구나 노동을 바꾸지 않고 어떻게 사회변화, 삶의 변화를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면 노동이 왜 빠졌을까. 추정컨대 자원봉사를 기능으로 보기 때문인 것 같다.¹³ 이러한 개념에서 보자면 자원봉사는 관계 맺기, 프로그램, 활동일 수는 있어도 노동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아무리 장시간노동, 시간빈곤, 차별임금, 고^高스트레스에 시달려도 자원봉사와 연결 짓기 어렵다.

과연 자원봉사는 노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일까? 3년 생존율 평균 50%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자원봉사는 무엇일까? 정규직에 비해 절반의 연봉, 언제 날아올지 모를 정리해고 메시지에 가슴 졸이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자원봉사는 무엇일까?

우리의 삶이 뒤틀려 있다는 것은 사회적 자원배분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즉, 노동이 막혀 있다. 더욱 어려운 것은 자원배분 왜곡이 합법

12 한국자원봉사문화(2013).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영향력 측정지표 개발 연구』. 18쪽.

13 아직 자원봉사를 사회를 움직이는 힘보다는 부족한 곳을 메워주는 기능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다.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불우이웃돕기'로 생각하고 있으며 시간이 남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도구적, 경제적 성격(주성수), '사회복지 구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가 하면 공무원들은 자원봉사자를 '행사시 동원 가능한 인력', '유휴노동 인력'으로서 공익을 위해 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해줄 수 있는 자원', 그래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 정도로 여긴다(이강현). 한마디로 한국 사회에서 자원봉사는 공짜다. 자원봉사는 아직 한국 사회 곳곳에서 소비되고 있다.

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 눈감고 자원봉사의 사회적 영향력을 논하는 것은 공허하다. 가령,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논의나 토론회에서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는 인식 개선, 홍보, 캠페인처럼 공허한 것은 없다. 왜곡된 자원배분에 의해 자원봉사가 원천 차단되어 있는데 인식 개선이 귀에 들어올 리 없다.

자원봉사의 사회적 영향력은 어떤 특정한 지점이나 사람(태도, manner)의 변화를 넘어서 자원배분 질서를 바꾸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적 자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때로는 결단하는 것이 바로 정치다. 자원봉사가 정치를 외면할 수 없고 외면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원봉사가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을 지니려면 노동과 하나의 맥락 위에 서야 한다. 그래야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원봉사를 무급노동¹⁴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자원봉사를 ‘노동문제’의 맥락에서 보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왜냐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삶의 설계는 어떻게 노동할 것인가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원봉사는 삶의 설계도 안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¹⁵

앞에서 연결되어 있다고 표현했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원봉사와 노동은 성질을 공유하고 있다. 자원봉사는 노동, 삶의 패턴과 무엇을 공유하고 있는지 다음 그림을 보자.

14 가구 구성원에 의해 생산되며, 시장에 내다팔지 않고 가족 안이나 가족 밖에서 소비되는 재화나 용역(UN Economics & Social Affairs, 2005 ; UNDP, 2005). 많은 연구에서 드러나듯이 한국 남성들은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 무급노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성평등, 아동복지 향상, 저출산 문제 해결, 일-가족 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남성의 무급노동 참여가 필요하다. —손문금(2011), 「OECD 주요국 성별 무급노동 참여현황과 국가정책」, 서울시여성가족재단.

① 비정규직·정규직 간 임금격차, 학력 간 임금격차, 장시간 노동
승자독식, 무한경쟁, 저임금 → 시간빈곤, 고스트레스, 고우울증

저가사노동
저자원봉사
돌봄 빈곤
배움 빈곤



기본소득

② 최저임금 인상, 적정임금, 적절한 노동
일자리 나누기, 임금격차 해소, 생태적 소비

가사노동, 돌봄, 문화생활
자원봉사, 지역사회 참여
배움 활성화

15 자원봉사를 노동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첫째, 자원봉사에 대해 보수를 받는 노동(labor)과 구분하여 일(활동, work)로 보자는 견해가 있다. 물론 자원봉사는 속성으로 보자면 일(활동)이다. 일상에서도 '자원봉사노동'이란 말은 쓰지 않고 '자원봉사활동'이라고 쓴다. 부사와 아오리는 똑같은 사과이지만 두 개의 품종을 구분하는 독특한 맛을 지니고 있다. 마찬가지로 자원봉사는 노동과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부사와 아오리를 사과라고 말하는 이유는 포도와 구분되는 공통된 범주로서의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자원봉사도 노동으로서의 범주가 섞여 있다. 자원봉사에는 노동을 노동답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과 구분 짓는 범주가 있다. 범주로서의 노동을 보지 못하면 현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시간 유급노동으로 황폐화된 생활구조를 허물기 위해서는 속성으로서의 일(work)만으로는 어렵다. 정규직에 비해 연봉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과연 자원봉사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범주로서의 노동이 필요하다. 생활은 노동으로 영위하는데 일(work)로 대응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미 존재하는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 속으로 들어가 노동의 성격을 바꿔야 한다. 자원봉사는 황폐한 노동과 구분될 때 오히려 일(work)로서의 속성이 두드러질 것이다. 자원봉사가 확대된다는 것은 생활구조가 개편된다는 것을 뜻한다. 생활구조의 핵심은 노동이다. 현재 자원봉사 참여율이 20%대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은 노동의 범주가 막혀 있다는 뜻이다. 둘째, 무급노동으로 인해 자원봉사 영역에 시장 논리가 침투하여 무급성의 원칙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렇지만 무급노동의 확장은 이미 유급노동 중심의 생활구조를 허무는 것을 전제로 한다. 물론 또다시 유급노동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무급노동의 실패로 보기보다는 생활구조를 더욱 개편해야 할 과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유급노동을 줄인다고 반드시 자원봉사 참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그러한 지적에는 일리가 있지만 그것이 유급노동을 줄이고 생활구조를 개편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넷째, 무급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사회운영 시스템은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자원봉사의 생활화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자원봉사 생활화를 위해서는 무급노동 범주를 늘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양한 기제가 필요하다.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총량은 같으나 노동의 내용과 질이 다르다. 한국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하루 45분, 여성은 3시간 14분으로 이는 OECD 국가 중 꼴지 수준이다.¹⁶ 무엇보다도 노동의 의미가 다르다. ①의 노동은 가사노동, 자원봉사, 돌봄, 배움과 완벽하게 단절되어 있다. 생활구조에 약간의 변화는 일어날지언정 가치의 변화는 일어나기 어렵다.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삶의 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여기서 자원봉사는 ‘공짜노동’이라는 푸대접을 벗어나기 어렵다.¹⁷

그러나 ②의 노동은 다르다. 첫째, 노동의 질이 바뀐다.¹⁸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낯설지만 경제외적, 비상업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 새로운 소비·생산·협업의 방식을 꿈꿀 수 있게 된다.

16 이를 두고 남녀 임금 격차의 원인이 ‘노동시장의 가부장제’ 때문이라고 보는 경향이 많다.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가부장적 구조”가 가정 바깥의 노동시장에서도 유지되어, 여성들이 가정에서의 역할이 연장되는 주변적인 직업군에 몰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구조에서 남성들은 임금노동과 가사노동 모두에서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남성을 주요 생계부양자로 취급하는 이데올로기가 가족임금 제도로 정착된 것도 여성의 저임금을 정당화한다고 본다. 그러나 남성 노동자가 여성에 견주어 상대적으로 더 나은 처지라 할지라도, 남성이 여성의 저임금과 차별 대우를 유지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여성 차별은 계급 분열의 효과 때문에 남성 노동자 전체에게 해롭게 작용한다. 가령, 여성의 저임금은 오히려 남성의 임금 인상을 제한하기 위한 압력으로 작용한다. 여성이 저임금 일자리에서 고충받으면 그와 함께 사는 남성 노동자는 생계유지에 더 압박을 받을 것이다. —최미진(2015.9.), 「15년째 변함없는 남녀 임금 격차」, 『노동자연대』 157호.

17 자본주의사회에서, 가사노동은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축적될 수 있거나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어떤 잉여가치로 생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사노동은 노동으로 간주되지 않고, 대신 경제적 가치가 없는 사적 서비스와 동일시됐다. —앙드레 고르(1980), 『프롤레타리아여 안녕』, 이현웅 옮김(2011), 생각의 나무, 133쪽.

18 앙드레 고르는 ‘가능한 한 최대의’ 필요를 위해 ‘가능한 한 최소의’ 노동을 투여하는 자활노동을 제시한다. 자활노동은 필요노동이지만 타율노동이 아니다. 자활노동은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이 바람직한지 토론과 소통을 통해서 결정하고 미래를 계획한다. 자활노동을 움직이는 기제는 경제적 합리성이 아니라 자기충족성이다. 자활노동을 회복한다는 것은 사적 개인주의나 가족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미시사회적 관계망을 복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활노동은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토론을 통해 결정한다.

둘째, 개인의 가치와 공익적 가치가 균형을 이룬다. 자원봉사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삶 속으로 스며든다. 여기서 자원봉사는 공짜노동¹⁹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로 인정받는다. 그러면서 생활구조에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셋째, 삶의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얻은 경험을 갈무리하고 그것은 다시 삶의 방식으로 피드백이 된다. 그것이 배움이다.²⁰ 그리하여 단지 노동만 하는 생활이 아니라 배움이 충만한 생활이 된다.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는 시민들의 몫이지만 사회운영 시스템을 바꾸어야만 가능하다. 반대로 생활구조의 변화가 사회운영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노동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즉, 착취 노동이 아닌 자기충족적 노동, 민주적 의사결정, 새로운 소비·생산·협업 방식이 바탕을 이루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이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의 가치가 만나는 지점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회적경제와 자원봉사는 공존, 나아가 상승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5. 새로운 꿈을 꾸기 위해

적폐 청산은 단지 ‘쌓여진 폐단’을 씻어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꿈을 꾸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혼자 꾸는 꿈으로는 해결 불가능하다. 가령, 교육의 문제는 혼자만의 꿈으로 해결할 수 없다. 교육은 정치, 경제, 노동, 문화, 복지, 보건, 먹거리, 공간, 생태적 환경

19 자원봉사가 공익성, 본인에게 돌아오는 피드백이 없으면 ‘열정페이’가 된다.

20 배움의 동사형 ‘배우다’는 ‘배다’의 사역형이다. 배다는 ‘(냄새가) 배다, (아기를) 배다, (알이) 배다, (습관이 몸에) 배다’의 뜻을 지니고 있다. 즉, 외부의 것을 안으로 받아들이는 뜻이다. 배움이란 세상과 창조적인 관계 맺는 방식을 터득하는 것이다.

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교육문제 하나만 뚫 떼어서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자원봉사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사회를 위해 자원봉사는 어떤 꿈을 꿀 것인가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꿈을 꿀 것인가이다. 자원봉사가 꿈을 꾸다는 것은 잠재력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잠재력이란 말 그대로 숨은 힘이다. 숨은 힘은 평소에 잘 보이지 않는다. 숨어 있던 힘은 필요에 따라 자기 모습을 드러낸다. 자원봉사는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 문제, 교육, 환경, 정치, 평화, 인권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기 모습을 드러낸다. 그것이 자원봉사의 유연성이요, 확장성이요, 연대다.

그런 의미에서 자원봉사는 ‘가치 연대’가 필요하다.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영역끼리 연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원봉사와 사회적경제는 가치 연대의 좋은 파트너이다. 그 핵심에 노동이 있다. 노동하는 방식과 내용을 바꿔야만 자원봉사, 사회적경제의 길이 보인다. 반대로 자원봉사를 통해서 노동의 질을 바꿀 수 있다. 자원봉사, 사회적경제가 새로운 꿈을 꾸기 위해서는 노동을 바꿔야 한다.²¹

이렇게 노동을 바꾼다는 것은 자신의 생활 패턴을 새롭게 설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이 배려와 공익성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자원을 배분할 수 없다면 시민성은 교과서 같은 규범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시민성은 ‘전달,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삶의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적폐 청산의 종점은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

21 1866년 마르크스가 제1인터내셔널 강령에서 8시간 노동제를 주장했던 것은 노동자들이 새로운 꿈을 꾸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전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

생협의 주인으로서 조합원 활동

“ 좋은 삶을 위해서는
임금을 받는 지불노동과
부불노동의 균형이 있어야 한다.
생협의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활동과 노동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지점이
생겨나게 된다.
논의하고 합의하여
임금노동의 성격을 띠는 것에는
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 ”

* 고양여성민우회 생협사업부 시절부터 생협의 성장을 함께해온 필자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행복중심고양파주생협 이사장, 2013년부터 2017년 3월까지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을 맡았다. 그의 경험이 생협의 성장과 여성 조합원의 역할에 특히 반영되어 있다. (편집자 주)

한국적 소비자협동조합, 생협

1980년대 후반, 한살림, 바른두레생협, 행복중심생협이 생겨나고, 1990년대까지 많은 지역생협이 창립되었다. 대도시 주거지를 중심으로 시작된 생협은 아직 세상에는 낯선 ‘유기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모델로 하고 있었다. 역사적 배경으로는 우리밀살리기운동에 참여했던 주체들이 있고, 원주에서 시작된 생명운동 등의 농촌 및 농민운동이 전개되어왔으며, 환경운동·여성운동 등 다양한 신사회운동이 출현하는 등 시대적 전환을 시도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소련의 패망 또한 큰 영향을 주었는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사상적·정치적 긴장 구조가 해체되면서 자본의 질주가 시작되고, 사회운동 그룹은 새로운 운동을 모색하게 된다. 일견, 소련의 붕괴는 미국과 벌여온 물질적 성장 경쟁에서 국가사회주의의 패배를 의미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폐해를 염려했던 이들도 물질적으로 번영한 사회라는 전제에 기반해 있었기 때문에, 물질적 진보가 가능하고 불평등과 소외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 제3의 길로의 전환이 모색되었다.

운동의 주체 측면에서 한국의 생협운동은 농민운동 내부의 생명운동과 협동운동의 역동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모습을 띌 수 없었을 것이다.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에서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지 않았을 시기¹에 생명농업의 가치를 걸고 유기농업을 시도한 가톨릭농민회나 풀무학교를 중심으로 한 홍성의 지역운동 활동가가 없었다면 말이다. 생산자가 먼저 준비하고 있었고, 산업문명의 폐해로부터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한 생명운동의 정신은 많은 부분 생협의 출범 선언문에 반영되었다.

1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이 있기도 전에 한국에서는 유기농업을 시도하는 농민이 있었다.

생협과 생협 조합원의 탄생

생협과 생협의 조합원은 스스로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일제의 탄압 속에서 협동조합운동은 번성할 수 없었고, 국가 주도 경제개발 시대에서 소비자협동조합의 자율성과 자발성은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그 명맥 또한 사라진 상태였다. 생협은 이전의 협동조합운동과 큰 연계 없이 새로운 토양과 문제의식 속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한국전쟁 후 극빈한 상황에서는 소비자협동조합이 성장할 수 없었다. 1970년대 경제개발 시기에 기업 내 구판장을 운영하는 소비조합이 운영되었으나 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은 거의 없었다. 노동조합을 철저히 탄압하던 시대였으므로 협동조합이 가지는 자율성과 자발성은 고취될 리 없었고, 사측이 복지 차원에서 소비재 판매장을 개설한 정도로 해석하고 있다.

19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대통령 직선제를 이룬 것을 분수령으로 한국 사회는 그동안 억눌렸던 자유와 참여의 욕구가 폭발적으로 분출되었으며, 다양한 조직과 운동이 출현하여 역동적인 사회적 변화를 이루어냈다. 생협 역시 그러한 시대적인 소산이며, 정치적 민주화의 토양 아래 그동안 성장한 시민의 역량이 발현하는 훌륭한 장이 되었다.

생협은 자발적이고 전폭적인 조합원의 동의와 참여로 이루어진 가장 전형적인 협동조합으로 시작했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리라.² 출범 초기의 어려웠던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직전인 2000년대 중반까지도 그리 적지 않은 사업 규모와 조합원 규모를 이룩했다. 이는 우리 사회 먹거리 분야에서의 블루오션에 해당하는 친환경 시장을 열었다는 생협의 영민

2 한국의 생협은 이름은 달라도, '생협' 하면 떠오르는 일반적 규범이 형성되어 있는 바, 필자가 경험한 일을 모든 생협으로 일반화하여 말해도 좋을리라 생각한다.

함과 함께, 소비자협동조합이라는 방식을 통해 조합원의 열렬한 지지를 조직했기에 가능한 성과라고 하겠다.

생협의 성장에서 여성 조합원의 역할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삶의 욕구가 양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요구가 생겨났는데, 그것은 산업화 과정이 불러온 작용과 반작용 모두에서 필연적이었다. 고등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가계소득이 증가되어 정신적·물질적 양쪽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확대되었다.

생협의 조합원은 대부분 전업주부—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이 가능했던 시기—였다. 우리는 가부장적 사회구조 속에서 돌봄과 양육을 수행하는 주부로서의 현재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사회적 존재로서 자기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지닌 존재들이었다. 1987년 민주화를 이끌어낸 거대한 벡타이 부대의 절반이 여성이었을 테고, 우리는 그 시대의 자식이라고 볼 수 있다.

행복중심생협(전 여성민주회생협)의 초기 슬로건 중에 ‘생활의 주인, 일터의 주인’이 있다. 협동조합의 정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고용되는 자, 명령 받는 자가 아닌 주인이 되려는 자기실현의 욕구는 정치적 민주화와 결을 같이 하면서도, 일터에서도 주인이 된다는 경제적 민주화 혹은 다른 경제에 대한 열망—경쟁과 소외가 없는 배려와 존중의 경제—또한 시대적 소명의식처럼 존재했다.

조합원들은 매우 헌신적이었다. 일종의 소명감으로 조합 활동에 임했다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생협은 그녀들의 삶에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농민 생산자와 교류하고 공감을 나누고 그들을 지원했다. 좋은 먹을거리로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어머니로서의 가정 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사회 변화를 이루어낸다는 자부심이 충만했다.

생협의 시작은 협동조합운동가, 조합원, 생산자라는 세 주체가 있었기

에 가능했고, 세 주체의 성실함으로 각 주체 간의 신뢰가 형성되었다. 지금은 직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협동조합운동가임에 틀림없는 그들의 헌신, 운동에 대한 의지와 관점을 모두 존중하고 신뢰했다. 조합원은 한없이 고맙고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였다. 볼품없는 생활재도 감사히 받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주문 공급 시스템도 원망하지 않고, 조합에 일이 있을 때는 발 벗고 나섰다. 생산자는 형제자매에게 먹일 농사를 짓는 것처럼 손해가 나는 것도 무시하고 친환경농업에 매진했다. 역사가 시작되려면 다 그런 것인지 미담은 과도과도 끝없이 나온다.

초기 조합원 활동은 주1회 공급이나 공동체로 배송 받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생산자 발굴과 생산지 점검 활동 등에도 실무 활동가와 함께 동행하여 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여하는 등 실무활동가와 의견상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의 열성을 보여주었다. 아무래도 생협이 되는 관계, 생협 사업의 방식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단계였으니 대화도 많았고, 생각의 교류가 많아 이해의 깊이도 있던 시절이었다.

조합원 확대는 매우 중요한 일 중 하나였다. 생협 조합원이 되어 밖으로 나가는 최초의 행사가 조합원 확대를 겸한 거리 시식회였다. 오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들을 나눠 주며 생협을 소개하고 시식 코너로 데려오는 일이 쑥스러웠으나, 금세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스스로 납득이 되고 말았던 기억이 있다. 이후 생협 설명회는 주요한 활동 중의 하나였고, 생협을 설명하는 한마디, 10분짜리, 1시간짜리 매뉴얼을 준비하여, 누구라도 설명회에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생활재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중요한 활동이었다. 생협의 힘은 현실을 비판하면서도 대안을 만든다는 데 있다. 생활재와 생산자 그리고 우리들의 존재는 바로 그 대안의 살아 있는 증거가 된다. 생활재가 어떻게 상품을 대체하는지, 생활재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 운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또 감동이 있는 활동이었다. 그래서 어느 생협이든 생활재위원회가 가장 핵심적이고 권한

도 많이 가진 위원회로 성장해왔을 것이다.

사업 손실이 나지 않게 노력하는 일도 신나고 의미가 있었다. 김장 주문이 잘못 되었던가, 산지에서 올려 보낸 배추가 남았던가 해서 약 100통의 배추가 남게 되자, 조합원 5명이 그 배추로 김장을 담근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온다. 매장에서 당일 소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채소나 과일 그리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는 일도 많았다. 생협에 손실이 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절로 그리되었다.

사업 운영에도 깊이 관여했다. 10여 년간 생협본부에서 가정 공급만 받다가 지역에서 1호 매장을 내기로 결의를 하고, 매장 위치 선정, 자금의 조달, 매장 인테리어와 비품 집기 설치, 매장 활동가 선정에 대한 결정과 진행 과정에 참여했다. 지역 민우회 대표와 생협 위원장은 물론 관심 있는 소모임까지 참여하여 폭넓게 준비위원회를 꾸려 진행했다.

초기에 조합원 수는 적었고, 모든 것을 처음 시작하는 상황이었다. 새로운 사업이었다. 모든 것을 논의하여 결정하고,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실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생협운동이 나름대로의 관습을 형성해가는 초기 단계로서 전형적인 사업 방식과 내용을 구축해가는 시기였다. 이런 시기를 여러 실험과 실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져왔다. 그러한 과정을 경험한 사람들이 생협에 대한 신뢰를 강고하게 가지게 됐고, 이를 이웃들에게 전파하여 사회적으로 생협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 듯하다.

초기의 열성적인 조합원은 조합을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주인으로서 의사결정과 실행 과정에 참여한 것이다. 생협의 주인으로서 생산자와 직원의 성장을 기다리고 인내했다. 생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회사가 맘에 들지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직원은 떠날 수 있지만, 주인은 떠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해도 모자라도 지켜온 것이다. 조합원이 생협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제반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것은 결국, 주인으로서 역할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것은 무급 자원활동과 비교 논의되기보다는 주주의 소유활동 차원과 비교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생협의 성장

생협의 사업 형태와 전략이 안정화되고 조합원의 활동이 유형화되어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행복중심고양과주생협의 경우는 지역생협으로 법인화하고 여성민우회의 여성운동으로부터 생협운동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시기로 잡을 수 있다. 생협 전반에 걸쳐서도 뚜렷한 규모의 성장을 이루던 2000년대 중후반, 직접 참여가 가능했던 공동체적 수준에서 벗어나, 이사회를 구성하고 정관에 따른 총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게 된다. 조합원 내에서도 임원이 생겨나고, 직원을 고용하는 형태로 보다 제도적 장치 속에서 활동을 위치 지우는 단계로 이행하게 되었다.

물론, 규범적 제도는 우리를 억압하지 않았고, 여전히 새롭게 결정해야 할 것도 많았으며, 그러할 여지도 많았다. 지역에 이사장과 이사가 생기니 임원으로서 활동의 책임이 분명해졌다. 조합원 활동은 현재와 같이 유형화된 전형이 구성되어 활력 있게 진행되었다. 마을모임과 소모임은 활기가 넘쳤다. 마을모임의 내용은 유익했고, 참여자들은 마을모임별로 특색 있는 관계 맺기 프로그램과 생협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정보 습득이 가능했다.

더불어 생협의 경영 능력이 가시화됐는데, 경영을 ‘성과를 내는 규율’이라 한다면, 어떠한 경영 전략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생협 성장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형화된 조합원의 활동력보다는 경영 판단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생협의 규모가 커지면서 내부 분업도 가속화되고, 친환경농산물 유통기업과의 경쟁도 치열해졌다. 또한 1인가구 중심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상품 재구성이 요구되는 가족 구조의 변화를 마주하면서 생협의 전형적인 비

즈니스 모델을 완성해왔던 조합원 활동은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게 되었다. 사업 방식이 정형화되고 생산자와도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안정기에 접어들었지만,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영적 판단 비중이 높아지면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경영 책임자와 임원에게 위임되기 시작했다. 생산자와의 관계 맺기 및 생활재 취급 결정은 구매 직원에게, 조합원 확대는 홍보 사업팀으로 위임되어갔다. 조합원에게 생협은 이제 조합원 참여 없이도 자기 스스로 굴러가는 조직으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협, 조합원소유기업

생협의 소유자, 주인은 조합원이다. 소비자가 기업을 소유하는 이유는 원료 공급자의 속임수나 노동자로부터의 착취(태만한 노동으로 손해를 입는 것)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자본 조달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적어야 할 것이고, 경영자 감독비용이 크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더불어 다수 소유자 간 의사결정 비용이 많이 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³

한편, 소비재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강화되고 공정거래가 일반화되면 이러한 소비자 소유기업이 갖는 소유의 이점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식품 사고들—최근의 살충제 계란—은 물론 가습기 살균제, 1회용 생리대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생협에 신규 조합원이 증가하는 것은 소비자 소유의 이점을 입증한다. 시장과 국가가 제공하는 소비재의 양과 질이 충분하다면, 기업의 소유자가 되는 번거로운 일을 선택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한국 사회는 식품 위생, 식품 생산가공과 관련한 제도적인 관리감독 체

3 헨리 한스만(2000), 『기업 소유권의 진화』, 박주희 옮김(2017), 북돋움.

계가 존재하지만, 사전 예방보다 사고가 발생한 뒤에 문제가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 법적 규제가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다. 근본적인 상도덕, 기업윤리 등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고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한국 사회에는 요원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생협이 식품 유통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물론 생협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자체적인 한계가 있다). 아직도 개척할 시장과 조합원이 될 소비자들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 어느 정도 일반 식품 기업과 유통 시스템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식품 사고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생협이 소비자들에게 부각되고, 생협이 확대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명백한 사실은 주인으로서 조합원 소유권 실현의 기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생협의 규모가 커지면서 경영적인 판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판단의 무게도 커져왔다. 생협 내에서 전문 경영인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 생협의 조합원들이 소유권자로서 전문 경영인을 감독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기제를 가지고 있는지, 감독비용은 얼마나 늘어나게 될지가 관건이다. 일반 식품뿐만 아니라 친환경식품 분야에서 일반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었고, 조합원의 라이프스타일이 급격히 변해왔지만 생협은 선도적으로 공급체계를 바꿀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따라서 경영적 요소—성과를 내는 운영의 규율—에 의지하는 바가 점차 커질 것이다.

생협의 소유자로서 조합원은 지금 무엇을 걱정해야 하는가? 조합원 참여가 저조해진다는 것은 무엇이 문제인가?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책임과 권리가 가장 우선이다. 또한 대의원으로서 총회에 참여하고, 임원으로 출마할 권리가 있다. 조합원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이용의 권리만 수취하는 일명, 소비자화 되어가는 것을 오래전부터 걱정 해왔다. 이는 이전처럼 조합원들이 참여하지 않아도 지역조합(직원)의 일이 되어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자본 조달이나 이용에 대한 책임을

나뉘지는 시스템이 정착된다는 것은 한편, 조합원의 책임감을 희박하게 만들 수 있고 이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외부적으로도 생협의 생활재가 갖는 희소성이 크지 않다고 느낄 만한 친환경시장도 형성되어 있어서 소유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

조합원소유기업에서 조합원 참여를 고민하는 지점

조합원이 소비자가 되어간다고 안타까워하는 생산자를 만날 때, 조합원의 주인됨을 고민하게 된다. 매장 활동가들의 고민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조합원이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소비자가 될 때, 생협에서만 가능했던 각종 비용절감이 고스란히 비용으로 엮여지기 때문이다.

조합원 임원들이 조합원 참여의 감소를 느낄 때는 이용활동을 포함한 전통적인 조합원 활동 영역의 사업이 활력을 잃어가는 모습을 마주할 때일 것이다. 그 사업은 조직을 생기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조합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기도 했다. 생협의 마케팅은 근본적으로 바이럴 마케팅이 핵심이다. 조합원도 확대하고 생협운동의 동지를 재생산했던 통로가 점점 좁아짐을 걱정하게 된다.

나는 생협활동을 통해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는 경험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얻었고 그 안에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 함께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체득하고 깨달았으며, 소통의 미학도 알게 되었다. 생협에서 친구와 스승 그리고 동지를 얻었다. 시간을 내어 참여했지만 들인 시간 이상으로 얻은 것이 많다. 물론 생협활동에 깊이 몰입했고 임원까지 경험했기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하는 지점도 있지만, 생협이 아니면 얻을 수 없었던 것임에는 틀림없다. 조합원 활동이 저조해지는 현실을 바라보며, 여성 주부의 성장과 역량 강화의 관점에서 안타까움을 느낀다.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성찰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는 협

동운동은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고민하는 우리에게 많은 힘을 주기 때문이다.

조합원 참여 저조의 원인은 참여를 통해 조합을 성장시킨 조합원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생협 생활재와 생산자의 차별성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한 시기에서 이제는 생협을 신뢰하는 단계로 이행했기 때문에 생기는 반가운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소비자로서 머물러도 괜찮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 또한, 주인됨의 주요한 활동은 의사결정 과정에 유의미하게 관여하는 것인데 사실상 생협의 중요한 결정은 이사회를 비롯한 경영진에서 행해지고 있다.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서 이를 신뢰하거나 신뢰가 부족하더라도 참여 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불할 동기가 크지 않다.

이는 비단 생협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협동조합의 이중성 혹은 긴장은 여러 차원에서 발생한다. 조합원 활동이라 불리는 영역에서의 참여뿐만 아니라 경제적 참여까지 포함해서 참여가 소극적으로 일어나거나 참여의 방향에 있어서 긴장이 존재하게 된다.

대체로 조합원은 주인과 이용자 두 가지 입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잉여금의 배당에 있어 현재를 기준으로 충분한 배당을 요구할 수도 있고, 미래를 위한 적립금을 늘이는 결정을 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 생활재 마진이 낮은 것이 좋고, 소유자 입장에서는 마진을 높여 사업 잉여를 높이고 싶어한다. 일견 대립적인 이해의 순간에 조합원 공동의 의지로서 조합의 지속가능한 균형을 잡아야 건강하다 할 것이다.

경제적 참여 부문에서 출자금, 더 많이 출자를 해도 1인 1표라는 협동조합의 원칙 때문에 의사결정의 권한을 더 많이 확보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없어 출자에 대한 동인이 부족하다. 대부분 출자금이 평균값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생협들은 출자금의 평균값 자체를 높이려는 시도를 계속 해오고 있다.

조합원의 좋은 삶을 위한 노동의 안배

현재 생협 조합원의 참여 형태는 ‘활동’과 ‘노동’으로 구분되어 있다. 노동은 직원 노동과 조합원 노동으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구분은 노동의 자율성과 급여 보상을 축으로 한다. 상품으로서의 노동이 가지는 강제성, 외부성, 소외성, 분절성의 성격은 오늘날 급여노동의 기본적인 성격이다. ‘조합원 노동’이라는 새로운 용어는 급여노동이 갖는 성격을 그대로 가지며, ‘일자리’로서 노동시간이 짧은 시간제 노동과 무엇이 다른지 명확하지 않다. ‘일’로서는 사업 경영과는 상관없는 커뮤니티 활동, 조합원 복지 활동 등 관계 맺기 중심의 활동이 대부분으로, 비전문적이며 사업적인 입장에서 보면 비용을 쓰는 영역이라고도 하겠다.⁴

조합원 입장에서 자신의 생활을 기반으로 노동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삶을 영위하는 다양한 노동이 있을 수 있다. 임금노동만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이웃과 관계를 맺고, 자신과 가족을 돌본다.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각종의 부블노동⁵에도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의 동기도 있다.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거나 노동 강도가 높다면 임금노동 시간의 비중이 클 것이다. 가정주부의 경우, 지불되지 않는 부블노동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자녀를 돌보고 각종 가사일을 마치고 나면, 가족 내 혹은 지역사회에서 관계를 맺기 위한 많은 커뮤니티 활동을 하게 된다. 대부분이 임금을 받지 않는 일손 거들기나 자원봉사 성격의 노동이 많다. 가족 임금체계가 무너지고, 주부들도 취업 전선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지금, 여성 조합원 입장에서는 임금노동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이 당

4 생협 안에서 조합원 활동과 직원 노동에 대한 개념 모색을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 두레생협이 있고, 현재는 거의 모든 생협에서 논의와 모색이 진행되고 있다.

5 J. K. 김슨 그레이엄, 제니 캐머런, 스티븐 힐리(2013), 『타자를 위한 경제는 있다』, 황성원 옮김(2014), 동녘.

연하다.

응당 좋은 삶을 위해서는 임금을 받는 지불노동과 부불노동의 균형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실질 가구소득이 감소하고 있고, 고용 또한 불안정해졌다. 생협 조합원이 시장으로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리고 생협에서 필요로 하는 조합원 활동은 초창기처럼 절대적이지 않다. 조합의 주인되는 활동은 많은 부분 위임되었고 대체물도 일견 존재하는 듯하다. 현재로서 주부 여성 조합원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아닐까. 생협의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활동과 노동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지점이 생겨나게 된다. 논의하고 합의하여 임금노동의 성격을 띠는 것에는 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부 여성들은 가족 내에서도 관습적인 영역에서 돌봄 서비스를 강요받는 경우가 많다. 시민사회 영역에서 공공성⁶ 있는 커뮤니티 활동·노동은 그다지 개발되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 가입률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자치활동도 주부 여성들에게 참여 접근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협 소유자로서의 주인 된 활동이라는 의미는 약해졌을지라도, 사회적 목적을 가진 공공성 높은 조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협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주인으로서의 참여 활동이든, 커뮤니티 활동으로서든 모두 지불되기를 기대하지 않는 노동이기 때문에 돈으로는 충분히 보상할 수도 없다. 다만,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성격의 노동인 만큼 보람과 인정, 관계 형성과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 등 무형의 선물들이 듬뿍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생협이 이런 사회적 성과의 공동 생산자로서 합당한 명예가 부여되어야 하지 않을까.

6 official, public의 의미가 아니라 common의 영역에서.

임정은
강서아이쿱생협 조합원

투명하나 총만한 그림자

: 생협 여성 활동가들의 노동을 생각하다

“ 생협 조합원들, 그중에서도
활동가들은 대다수가 여성이고
‘주부’와 ‘육아’라는 책무를 짊어진 채
활동을 하고 있다.
여성의 활동, 그중에서도
돈을 벌어 오지 못하는 일들은
쉽게 폄하되고
소위 ‘그림자 노동’으로 치부된다.
가사노동, 아이를 키우는 일,
학교 행사에 불러가는 일,
아픈 가족이나 집안 어른을 모시는
돌봄노동이 그러하듯이,
생협의 활동도 그렇게 당연시되고
그림자 취급을 받기 쉽다. ”

“누구누구 엄마는 일(직장) 다니세요? 하고 누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죠. 일 안 하는데 일 해요,라고요.”

평택오산아이쿱 박은주 이사가 인터뷰 중에 한 말이 기억에 남는다. 생협 여성 활동가들의 지위가 절묘하게 드러나는 ‘웃픈’, 웃기고도 슬픈 말이라 생각했다.

생협의 여성 활동가들은 일을 한다. 그것도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열 일’ 한다. 마을모임, 동아리모임 등 모임 운영부터 지기회의, 이사회, 사업평가회, 총회준비위원회, 정기총회 등 회의 자료 준비, 민주적인 회의 진행부터 매장 개설, 매장 운영, 위생 점검 등 매장사업과 관련된 업무는 물론 식품완전표시제 등의 캠페인,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가래떡데이’ 홍보와 행사, 바디버튼 줄이기 캠페인 등 대외홍보, 뿐만 아니라 세월호 집회, 가슴기 살균제, 탈핵, 광우병 소고기, 무상급식 논쟁, 밀양 송전탑 투쟁 등 사안이 있을 때마다 기자회견도 하고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투쟁도 벌인다.

이렇게 치열하게, 하는 일 못 하는 일 없이 팔방미인으로 척척 일을 해내야 하기에 24시간을 분초까지 쪼개고 나누며 살아야 한다. 워크숍이나 생협 행사가 촘촘하게 있는 달에는 주말을 집에서 보내지 못하는 날이 허다하다. 그렇게 ‘빡센’ 활동이지만 그만두거나 발을 빼지 못하는 것은 일을 통해 보람도 느끼고 강한 성취감도 맛보기 때문이다. 또한 연차가 쌓일수록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에 흐뭇하기도 하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활동’을 ‘일’로 여기지 않는다. 돈을 벌어오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까이는 남편에게, 멀리는 시댁과 친정 식구, 아이들 다니는 학교 학부모나 동네 이웃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저녁이나 주말에, 아이들만 두고 나가 생협 일을 하거나 때로는 지방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고 워크숍 등으로 숙박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좋은 일 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주말에는 집에 있는 게 어때?” 라든가 “애가 너무 방치되는 것 아니냐?” 등의 핀잔을 들어야 한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생협 활동은 ‘참 좋은 일’이며, ‘누군가 해야 할 일’,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생협활동가’, ‘협동조합운동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까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생협 조합원들, 그중에서도 활동가들은 대다수가 여성이고 ‘주부’와 ‘육아’라는 책무를 짊어진 채 활동을 하고 있다. 여성의 활동, 그중에서도 돈을 벌어 오지 못하는 일들은 쉽게 폄하되고 소위 ‘그림자 노동’으로 치부된다. 가사노동, 아이를 키우는 일, 학부모로서 주어진 학교 일, 학교 행사에 불려가는 일(지금은 아니지만 2001년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만 해도 엄마들이 의무적으로 급식시간에 밥을 펴야 했다. 지금도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는 엄마들의 몫이다. 녹색어머니회에서 아버지 학부모 가입을 놓고 갑론을박한 뉴스를 검색해보시라.), 아픈 가족이나 집안 어른을 모시는 돌봄노동이 그러하듯이, 생협의 활동도 그렇게 당연시되고 그림자 취급을 받기 쉽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한국 생협은 이러한 여성 활동가들의 시간과 노동, 눈물과 분투 덕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할 수 있었다. 유럽의 협동조합에서는 ‘활동가’라는 개념조차 찾기 어렵다고 한다. 협동조합을 세우고 기초를 만드는 데 초기 설립자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도 아닌 조합원 그룹 일부가 이토록 맹렬하게 활동을 통해 협동조합 사업을 확장하고 다진 사례는 드물다.

대한민국 생협 여성 활동가들의 특수한 사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사회활동이 제한되고 제약받는 환경과 관련이 있다. 아무리 고학력과 여러 스펙으로 무장한 여성이라도 임신을 하는 순간 조직에서 배제되며 출산과 육아를 배려받기는커녕 회사에 민폐를 끼치는 사람으로 낙인찍힌다. 육아휴직을 무사히 쓰고 직장에 복귀해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엄마는 또 한 번 무릎이 꺾인다. 어린이집, 유치원은 그래도 퇴근시간까지 돌봐주지만 1학년은 1시 전후에 하교를 한다. 일하는 부모를 둔 아이들은 그때부터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다.

일을 하면서 버는 수입이 일을 하면서 육아에 드는 비용(방과 후에 아이 봐줄 사람을 구하거나 학원을 뱅뱅이 돌리거나)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시점이 되면 맞벌이부부 중 한 사람이(대개는 여성이) 직장을 포기하게 된다. 육아와 맞바꾼 자신의 커리어와 꿈, 미래를 어떤 여성들은 자식의 삶을 기획하고 설계(아이를 영재, 특기자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거나 특목고, 과학고, 외고 등에 입학시키기 위해 조기부터 계획하는 등)하는 데 몰두한다. 또 일부는 소비활동이나 미용, 건강관리, 요리, 블로그, SNS 활동에 매진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우연히도 육아를 하면서도 병행할 수 있는 부업이나 활동을 찾기도 한다.

생협 활동가들은 소비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눈을 돌린 여성들이다. 나와 내 가족, 내 아이라는 가족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이, 지역이, 공동체가 안전하고 안심되고 평화롭고 민주적인 곳이 되기를 바라며 그것을 위해 에너지를 쏟는 여성들이다. 그러나 면밀히 들여다본다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생협 안에서 정열적이고 활기차게 활동해 온 원동력은 여성 차별적인 사회에서 홀대받고 배제된 ‘울분의 에너지’가 8할은 될 것이다.

생협 활동가들은 자신의 활동, 노동을 ‘봉사’라고 표현하는 데 저항감을 느낀다. ‘봉사’라는 말은 왠지 시혜적인 행위라는 뉘앙스를 풍긴다. 쓰레기를 줍거나 경로당, 병원에 찾아가는 위문 활동처럼 시의적이고 일회적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아이쿱생협이 2016년부터 조합원 자원봉사를 조직하고 힘쓰는 것은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아이쿱 놀c터’라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기도 했다. 활동가 단위가 아닌 조합원이나 일반인에게 ‘활동’이라는 말은 어렵고 모호한 반면 ‘자원봉사’, ‘자원활동’이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이해하고 참여 동기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 ‘자원봉사’라는 말로는 다 담아내지 못하는 생협 내 여성 활동가들의 노동, 그들의 정체성과 삶이 된 바로 그 ‘활동’ 이야기를 들어 보고자 했다. 이 자리를 빌려 취재에 응해주신 세 분께 감사를 전한다. 그

림자처럼 보이지 않고 투명한 노동이나 거기에 자신의 삶과 마음을 입혀
각자의 빛깔로 아름답고 충만하게 채우는 모든 활동가들에게 애정과 응
원을 보낸다.

생협에서 키운 역량, 지역과 손잡다

—전 행복중심고양파주생협 이사장 박정아

박정아 전 이사장에게, 이사장 임기를 마친 올해는 활동가로서 새로운 국
면이 펼쳐지는 시기인 듯하다. 가족들은 이사장을 내려놓으면 좀 한가해
지려니 했지만 박정아 전 이사장의 일상의 리듬은 별로 변함이 없다.

“생협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해야만 하는 일’들이 원체 많잖아요. 그
일들 하느라 고갈되고 소진되기도 하죠. 한발 물러서서 생협 일에 매몰되
지 않고 숨을 돌릴 수 있으니까 다양한 시도가 가능한 것 같아요.”

전직 이사장으로서 모범이 되고 퇴임 후 활동도 좋은 사례를 남기고 싶
은 욕심도 있다. 지금 집중하는 일은 지역과 연계하는 일이다. 생협에서 활
동가로 쌓은 역량과 에너지가 생협 안에만 머무는 것은 안타깝다. 생협 너
머, 지역으로 눈을 돌려 지역과 연대하여 내가 사는 공동체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만드는 일에 관심이 많다.

박정아 전 이사장은 2013년부터 올해 2월까지 4년간 행복중심고양파
주생협 이사장을 맡았다. 이사장 기간을 포함하여 활동 이력만 15년이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작은아이가 다섯 살이었을 때 집 근처 매장을
이용하기 위해 가입했다. 2002년 조합원 가입 직후부터 생활재위원회를 시
작으로 꾸준히 활동을 했고, 2006년부터는 지역조합 이사를, 2009년에는
연합회 생활재위원장 겸 연합회 이사를, 그리고 2013년 지역조합의 이사장
을 맡으며 역할 지위의 정점을 찍었다.

돌아보면 생협 활동과 함께 나이를 먹었고, 그사이 자녀들은 자라 이제

스물네 살, 스무 살 어른이 되었다. 처음 권유를 받아 위원회 활동을 시작할 때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없는 낮 시간에 짬을 내 간간히 활동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활동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점차 자녀들도 방과 후에 혼자 집에 있게 되고 아이들이 방학이라도 생협이 일은 계속 해야 했다. 다행히 아이들이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도서관 활동을 꾸준히 했고 도서관 선생님, 아파트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서 아이들이 사랑방처럼 도서관을 이용했다. 시간적으로도 직장인처럼 오전부터 늦은 시간까지 회의나 교육을 받을 때가 많고, 생산지에 방문하거나 전국 단위의 회의 때문에 장거리를 이동하는 생협 활동가들에게는,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이웃이나 공간이 꼭 필요하다. 박정아 전 이사장은 그런 점에서 학교 도서관 덕을 톡톡히 보았다. 젊은 조합원이나 활동가들이 서로 육아 품앗이를 하거나 아파트 이웃으로 잠깐씩이라도 아이들을 서로 돌봐주는 모습은, 그래서 반갑고도 고마운 일이다.

엄마가 생협 활동으로 바빠 학원에 보내거나 숙제를 꼼꼼히 돌봐주는 등 대부분의 엄마들이 하는 지원활동이 없어 서운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둘째는 얼마 전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엄마가 활동적이고 열심히 사는 게 보기 좋고 자랑스러워요. 엄마는 집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활동이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가족들이 인정해줄 때 활동가는 힘이 난다. 활동가를 움직이는 힘은 이러한 ‘인정’에 있는 것이 아닐까.

고양시에는 5개 생협이 함께하는 생협연합회(한살림고양파주, 행복중심고양파주생협, 고양파주두레생협, 덕양햇살아이쿱, 고양파주아이쿱)가 있다. 출발점, 지향점도 다른 생협이 함께 만나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로 한목소리를 낸 세월이 벌써 10년이다. 박정아 전 이사장의 활기찬 생활의 한 축에는, 이 연합회에서 만난 각 생협의 전직 이사장들과 만든 모임이 있다. 지역 활동의 기반을 만들고 싶어 작년에 결성했다. 이 모임이 주축이 되고 고양시자

치공동체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지역 활동에 관심을 가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도 진행한다.

이사장 임기 기간에 중점을 두었던 텃밭사업도 손을 놓지 않고 이어가고 있다. 텃밭사업의 뿌리는 2008년 당시 여성민우회생협에서 진행한 토종씨앗 지키기 모금운동에 있다. 모금운동 당시에 토종씨앗을 지키는 일에 조합원의 열의와 관심이 뜨거웠다. 모금에서 한발 나아가 직접 토종씨앗을 기르고 씨앗을 받아보자는 제안으로 여성농민회와 함께 홍천, 횡성 등지에서 채종포를 운영했다. 그러다 아예 지역의 텃밭에서도 채종포를 해보자는 생각에 2015년부터 조합원들과 함께 텃밭농사를 하고 있다. 고양은 중심부의 신도시를 제외하고 주변부가 농경지이고, 그 때문인지 도시농업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러한 시도가 가능했다. 초보 농부로 수확이 해마다 들쭉날쭉하지만 내년부터는 먹거리 자급을 시도해볼 생각이다. 4인 가족이 논 100평 정도 농사를 지으면 쌀 자급이 가능하다는데, 쌀 농사는 어려워도 마늘 자급에는 도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땅 60평을 확보했고 여덟 가족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고양시가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청년의 일자리도 만들고 큰돈 없이도 노후까지 안정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도록 힘쓸 것이다. 텃밭사업, 마늘공동체는 그런 미래로 가는 첫 걸음이기도 하다.

본인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보수나 대가 없이 긴 세월을 노동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협 활동가를 무보수 자원활동가로만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생협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다. 명분과 책임감을 내세워 사람(활동가)을 소진시켜서는 안 된다고,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의 헌신에 기대서 한국 생협들이 여기까지 왔지만 이렇게 현상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활동가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보상은 있어야 한다. 물론 외형적인 성장세에 비해 생협 내부의 형편이 녹록치는 않다. 그러나 시간이 더 지나고, 더 성장한다고 해도 내부 사정은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특히나 여성의 독박육아, 돌봄노동, 가사노동을 당연시하는 우리 사회 분

위기에서 생협 내부에서조차 여성의 노동력과 시간을 너무 가볍게,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된다.

“요원하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생협들이 나뉘어져 경쟁하지 말고, 생협 전체가 하나의 힘을 만들어서 연대하고 시너지를 얻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활동가들이 성장하고 보상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일 이사장님의 활동을 임금으로 받는다면 얼마 정도가 합당할까요? 상상해보신 적 있으세요?”라는 질문에 녹색당 당원이기도 한 박정아 전 이 사장은 기본소득(국가나 정치공동체가 구성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 시민배당, 시민배당, 생존소득 등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으로 답을 했다.

“제 활동에 대한 임금을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글썄요, 임금을 받으면 최소 월 250만 원은 하지 않을까요?(웃음) 저희 가족 구성원이 네 명인데, 식구들이 한 사람당 150만 원씩만 벌어 오면 좋겠다,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적 있어요. 기본소득으로 가구당 필요한 소득을 보전해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활동가인 동시에 전문가

—한살림서울 논살림팀 대표 방미숙

“조합원들이 활동을 바라보는 눈이 10년, 20년 전과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여성의 사회활동 기회가 제한적이라 활동 기회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적극 참여했다면, 이제는 경제적 활동이 되어야 참여하는 욕구가 생긴다는 겁니다.”

한살림서울 논살림팀을 이끄는 방미숙 대표는 인터뷰에서 활동가의 경제적 보상에 관한 문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참여가 원칙이지만, 활동가는 애초에 조합원이면서 참여가 남다르게 열정적인 조합원 중의 조합원들이다. 그런데 만일 활동에 대한 대우가 임금 수준으로 잘 마련되어 있다면 그 경우 활동가는 직원인가? 협동조합에서 직원과 활동가는 어떻게 다른가? 혹은 달라야 하는가? 활동가 자신도 답하기 어려운 딜레마이기도 하다. 방미숙 대표는 그런 점에서 분명한 입장을 표현한 셈이다.

“의미, 가치를 추구하는 것 이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활동을 할 때 가족들이 감당해야 하는 면이 있잖아요. 어찌 보면 제 경우는 그런 점에서 유리한 조건이었죠. 저는 생협 활동 외에 다른 직업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수의 여성들이 가정에서도 땀땀하게 자신의 활동을 말하기 어렵잖아요.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고 당당해지기 힘들죠.”

방미숙 대표가 활동하는 논살림팀은 다양한 생협 활동 중에서도 전문성과 지식, 긴 훈련을 필요로 한다.

“사람을 양성하고 키우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논살림팀은 최소한 2년의 시간이 필요해요. 1년은 교육을 받고, 1년은 실습을 하고, 3년째에 생산지 조사 활동을 나갈 수 있어요.”

현재 한살림서울 논살림팀에는 35명이 있고, 이중에서도 13명 정도는 활동 경력 4~10년 이상의 전문 강사들이다.

“논습지네트워크 활동을 하려면 정보력과 지식, 전문성과 윤리적인 방향성을 길러야 해요. 활동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숲 해설가나 생태교육 전문가들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경제적 보상이 되지 않으면 이런 분들을 키워 놓고도 생협 안에 잡아둘 수 없어요. 생협이 활동가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조직에서 좀 더 존중해 준다면 생협의 가치와 목적을 알리는 데도 큰 힘이 될 거예요.”

나도 전에 취재를 위해 아이쿱의 논생물조사팀 ‘거리’의 1박 2일 활동에 동행한 적이 있다. 새벽부터 지방 생산지에 내려가 토양을 조사하고, 트랩

을 설치해 그곳에 서식하는 동식물군을 모두 조사 기록하고,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고,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기상. 기사를 쓰기 위해 사진을 찍고 그들을 따라 다녔을 뿐인데도 체력이 달렸다. 그들의 강행군에 혀를 내둘렀다. 곤충도감, 식물도감을 뒤져가며 미확인 종을 끝까지 밝혀내는 집념과 해박한 지식에도 놀랐다. 학위는 없지만 활동가 한 분 한 분이 식물학자, 동물학자, 생태학자로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고를 생협 조직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조차도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그분들의 노고와 전문성을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다. 논생물 조사나 논습지 네트워크 활동, 논살림팀의 조사·연구 활동은 생협 생산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홍보하는 일이며, 나아가 생협의 생산과 소비가 농약으로 찌든 국토를 회복시키고 땅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든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는 중요한 활동인데도 말이다.

생협 내부에서는 보상이나 인정을 받기 어려운, 준전문가, 내지 전문 인력으로 성장한 활동가들에게 어떻게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우선 방미숙 대표가 찾은 방법은 지자체의 지원이었다. 2012년부터 강동구청의 공모사업으로 도시농업을 시작했다. 강동구청의 호응이 좋으니 서초구, 도봉구, 송파구, 강서구에서도 제안이 들어왔다. 서울어린이대공원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수업, 초등학교 식생활 교육 등등 강의 요청이 쇄도했다.

이렇게 해서 논살림팀에는 1년에 200강좌 이상 강의 요청이 들어온다. 활동가들이 강의를 나가고 강사료 수입이 생겼다. 그러나 처음에는 활동가들이 외부 강의를 나가는 것, 그리고 생협 자원 활동가가 강사료를 받는 활동을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다.

“밖에 나가서 강의를 하는 것은 생협 활동이 아니라고 말하는 활동가도 있었죠.”

그러나 방미숙 대표에게 논살림 활동을 포함한 강연 등 일련의 활동은

한살림의 기본 정신인 생명살림, 농업살림, 밥상살림에 입각한 활동이다.

“생협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가치를 10배, 100배로 확산하고 크게 하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방미숙 대표에게 활동은 곧 소명이 되었다. 우리 생태계에서 논이 단순히 쌀을 생산하는 재배지로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논이 사라지면 즉각 강이 말라 ‘물부족국가’가 되는 위험을 알리는 일에 여생을 걸었다.

남원에서 ‘농부의 딸’로 태어나 아픈 부모님을 대신하여 고등학생 시절 까지 벼농사를 지었던 것은 그런 점에서 우연이 아니다.

2005년 강북 지역의 녹색 삶을 위한 여성들의 모임에서 환경강사 활동하고 있을 때 지인의 권유로 한살림에 가입했다. 여느 조합원처럼 물품이나 매장을 이용하기 위해 가입한 것이 아니라 활동 자체가 목적이었다. 이전에 문화해설사, 숲해설사, 생태체험학습 강사 등을 했던 경력으로 한살림의 논살림팀에 결합한 것이다. 이후 논살림팀 활동, 3년간 한살림 북부 생명학교 일을 병행하기도 했다.

전에는 숲, 인간 문명, 문화, 자연 등을 각각의 독립적인 것으로 보았는데 논살림팀 활동을 시작하면서 논은 자연과 인간이 만나는, 문명과 자연이 결합하는 놀라운 지점임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쌀 소비가 줄고 논이 사라지면서 지표수의 물이 줄고 강과 계곡이 마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논이 있으면 연간 130일 이상 지표에 물을 가두어 지하수 공급 창고 역할을 할 수 있다. 산 중턱 계단식 논이 사라지면서 계곡이 마르고 산 아래 마을에 지하수, 생활용수가 부족해진다는 것을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다.

“논은 지표면에 물을 붙잡아두는 기능을 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그 이유만으로도 논은 보존되어야 합니다.”

4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은 늘 “당신이 그렇게 한다고 지구 안 살아나”라고 이야기했다. 냉소적으로 말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미숙 대표의 활동이 세상에 필요한 일이라는 걸 알고 지지해주었다. 이제는 직

장인이 된 딸과 아들은 어려서부터 적극적인 지지자들이었다. 초경부터 같이 대안생리대를 만들어 쓰고, 엄마의 활동은 널리 알리고 세상에 필요한 일이라고 믿었던 딸이 환경공학을 전공한 것은 엄마의 영향이었을지도 모른다.

오전에는 생협 활동과 지역의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학원을 경영하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허덕이지 않았던 것은 일찌감치 철이 들고 독립적이었던 딸, 아들 덕분이다. 방미숙 대표는 주 1회 이상 협력 회의에 참석하고, 주 1~2회는 강의를 하고, 한 달에 한두 번은 논 조사활동을 하러 서울 곳곳과 지방을 도는 스케줄을 소화하면서도 별도로 메모를 하지 않을 만큼 시간 관리에 능했다. 타고난 체력으로 건강에도 자신이 있었지만 최근 건강에 적신호가 와 주의하고 있다.

남편과 함께 준비하던 귀농을 이제는 혼자서 준비하느라 마음과 몸에 무리가 간 탓이다. 연고지도 없는 곳의 고산 논이 버려져 임야로 변한 땅을 보고 일단 살리자는 마음에 논을 사버렸다. 처음에 동네 이장님은 웬 서울 사람이 와서 쓸모없는 땅을 다 사나, 색안경을 쓰고 보았다. 그러다 방미숙 대표가 산 중턱 논이 보존된 곳의 계곡만 물이 흐르고, 동네는 다 가물어서 지하수를 파고 난 뒤에는 방미숙 대표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논이 있어야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말을 믿게 된 것이다.

방미숙 대표는 말한다.

“생협 활동이 지금까지 대중운동으로 넓게 펼쳐졌다면 이제는 전문성을 가진 활동가를 끌어안고 인정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생협이 협동조합이기에 조합원의 참여와 기여로 성장한다면 각자 능력이 다른 조합원이 각자 잘할 수 있는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그것을 생협의 성장의 밑거름으로 써야 하지 않을까요?”

생협 활동, 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세우다

—평택오산아이쿱 이사 박은주

평택오산아이쿱생협 박은주 이사는 이사로서의 활동만 벌써 7년이다. 올해 생협 활동을 돌아보며 매너리즘에 빠진 것은 아닌지, 조합원을 대하며 초심을 잃은 것은 아닌지 자기 점검을 하는 중이다.

2008년 조합원 가입 후 지역조합이 창립되었고 마을모임에 나가고 마을지기를 맡았다. 2011년에 이사가 되었고 지금까지 이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홍보편집위원회, 안성지역위원회, 소모임위원회 등을 꾸렸고 올해는 자원봉사위원회를 신설했다. 아이쿱자원봉사 ‘아자아자’ 전체 조직의 모토를 지역이라는 말초신경 단위에서 어떻게 펼치고 실천할까를 고민하는 활동가 중 한 사람이다. 비누 만들기라든가 회의 사전 준비 등은 어느 정도 반응이 있었지만 조합 사무 공간 청소, 도서 정리 등 단순하고 쉬운 자원봉사는 참여도가 낮았다.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등 생협을 방문하고 돌아온 연수단 발표를 들었어요. 거기 생협은 조합원이 되는 조건에 자원봉사 활동을 의무화하고 있대요. 매장에서 계산원으로 봉사를 하거나 물품을 소분, 포장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를 하기도 해요. 지금까지 우리 활동가들은 신규 조합원이나 일반 조합원을 대할 때 손님처럼 맞아주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는데, 조합원이 조합 활동에 당연히 참여하고 작은 역할이라도 맡긴다는 발상이 너무나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조합원을 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해 대접하고, 뭔가 하나라도 더 주어야 한다고 읍소하는 태도였는데 꼭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올해는 처음 자원봉사위원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시도를 두루 해보는데 역점을 두었다면, 내년에는 조합원이 참여해서 긴 호흡으로 과정을 함께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자원봉사를 기획할 생각이예요.”

박은주 이사는 편집디자인을 전공해서 지역조합이나 연합회에서 포스

터나 홍보물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일꾼이기도 하다. 카드뉴스나 웹 자보 작업에 더해 아이쿱 블로그 기자단 활동으로 일주일에 1편 이상 기사도 써야 한다. 지역조합 활동도 몸에 익고 재미도 있지만, 기자단 활동은 아이쿱생협이라는 조직 전체를 한 발 멀리서 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열어주었다. 힘들어도 지역 활동과 연합회 활동을 둘 다 적극적으로 하는 건 미시적으로, 거시적으로 상호 보완하는 안목을 길러주기 때문이다. 모르던 것을 알게 되고,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것, 배움과 성장의 재미, 박은주 이사가 활동으로 얻는 가장 큰 보상이다.

오전부터 저녁까지 생협 활동을 하고 집에 돌아와도 쉴 틈은 없다. 학교 다녀온 아이들 간식 챙기고, 저녁 먹이고, 숙제를 돌봐주고, 남편은 귀가가 늦으니 설거지나 빨래 등도 자연스레 박은주 이사의 몫이다. 아이들을 다 재우고 난 뒤 밤 10시부터가 자신만의 시간이다. 조용하면서도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 물론 이 시간도 온전히 나를 위해서만은 쓸 수 없다. 낮에 못 다한 일을 처리하는, 일종의 야근인 셈이다. 새벽 2시쯤 잠자리에 들어 아침 7시쯤 일어난다. 매일 다섯 시간 남짓 자는데, 벌써 몇 년째 이런 생활을 해서 그런지 딱히 잠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에게 생협 활동은 이리저리한 것이라고 설명하면 “아, 봉사 활동 하시는군요.”라는 답이 돌아온다고. 그러면, “네, 그런 일이에요.”라고 웃으며 대답한다고 한다.

“한번은 아이가 밖에서 조금 다친 적이 있는데, 심한 건 아니었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쓸데없이 바쁘게 돌아다니니까 애가 다치지.’”

기가 막히고 상처가 되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남편, 또 가까이 사는 시댁 식구들은 박은주 이사의 지지자들이다.

주말에 연이어 행사가 잡혀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할 때, 아이가 다치기라도 했을 때 씁쓸하고 속이 상하지만 도리어 남편은, “아이가 다친

거는 당신이 집에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는 문제다. 당신이 잘못된 일 아니다.”라고 위로해주었다. 남편은 아내가 생협 활동을 통해 성장하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을 지켜보았다. 처음 마을지기를 맡아서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해야 할 때, 전날 밤부터 연습하고 걱정하던 사람이 이제는 발언하고 자기 일을 당당하게 해내는 것을 목격했다.

박은주 이사는 생협 활동을 하며 주어진 교육의 기회도 고맙게 생각한다. 2015년과 2016년 일본(활동가 기금연수), 2016년 캄보디아(우수조합 연수)에 다녀올 수 있었던 것도 행운이다. 생협 활동을 돌아보면, “내가 언제 이만큼 치열하게 산 적이 있었나?” 생각될 정도로 보람 있고 즐겁다. 생협을 통해 교육 받고 공동체 안에서 훈련 받아 지금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갖게 되었으니 당장은 아니라도 조만간 생협 바깥, 지역으로 나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 한다. 아이쿱 블로그 기자로서 다양한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단위를 찾아다니고 취재하면서 그러한 밑그림을 천천히 그리는 중이다.

박은주 이사는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는 느낌이 좋아요.”라고 말한다. 그것이 가능하게 된 인생의 반환점은 바로 생협 활동이었다.

이순옥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자치국장

조합원의 자부심, 아이쿱 자원봉사

“ ‘아자’는 조합원들이 쉽고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 아주 사소한 것, 그리고 시민으로 성장하는 활동 모두를 자원봉사에 포함하고 있다. 조합의 필요를 자원봉사로 채워가는데, 개인의 재능을 협동조합으로 환원하는 의미가 각별하다. 지역사회를 향한 자원봉사도 활발해졌다. 지역의 한부모 가정, 혹은 저소득 가정에 반찬을 제공하고 아이들에게 요리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소소해 보이나 누구에게는 절실한 생활이기 때문이다. ”

아이쿱 20년과 조합원 자원봉사

1997년 수도권 6개 조합이 모여 출발한 아이쿱생협은 올해 스무 살이 되었다. 어느덧 90개 지역조합과 26만 명의 조합원 규모로 성장했다. 조합원은 물품을 구매하고, 나아가 마을 모임과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다. 조합원은 기초 모임부터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에까지 참여하는데, 이런 활동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지기, 위원, 그리고 임원 등을 가리켜 '조합원 활동가'라고 부른다. 아이쿱의 조합원 활동가를 대략 3,000명으로 보는데 26만 명이라는 전체 조합원 규모에 비하면 그 수는 미미하다. 하지만 수입 개방의 파고 속에 우리 농업과 미래를 걱정하던 소비자들이 식품 정보에 대한 표시를 요구하는 소비자 알권리를 주장하기에 이른 지금, 조합원 활동가들은 소비자운동의 저변을 확대해온 주역으로 성장하였다. 아이쿱생협의 민주주의 토대를 닦은 다양한 모임활동과 소비자 이슈를 끌어올린 알권리 캠페인에 조합원 활동가들이 나서지 않았다면 공허한 구호에 불과했을 것이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친환경 물품을 소비하는 특정 계층에 머무르지 않고, 대안 생활과 실천을 모색하고 때로는 법과 제도의 정비를 위해 실천을 아끼지 않은 데서 아이쿱생협의 조합원들은 참여하는 소비자로서의 자기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조합원 활동가들의 질적 성장에 비해 우리 안의 아쉬운 부분도 발견된다. 어느 단계에서 조합원 참여 규모가 정체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운동체로서의 위상은 높아졌지만 조합원 참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아이쿱 모임부터 캠페인 활동에 이르기까지 자기 점검을 하게 되었다. 때마침 아이쿱 연수단이 방문한 미국의 파크슬로프식품협동조합 Park Slope Food CO-OP의 조합원 자원봉사 사례는 우리의 현실을 점검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좋은 자극제가 되었다. 모든 조합원은 일을 해야 한다는 조합원 활동 시스템이 그것인데, 17,000여 명의 조합원 중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한 달에 3시간가량의 활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하

는 조합원 활동이란 매장 봉사였다. 곡물 소분, 매장 청소, 주차 관리, 치즈 자르기, 물건 포장 등 조합원들은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일에 배치되어 정해진 역할을 한다. 이런 조합원 활동제도는 협동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과 소유 의식을 높이며 보다 높은 수준의 참여와 헌신을 만들어낸다고 담당자는 강조하며 다년간의 경험을 전수해주었다. 협동조합 매장은 조합원이 단순히 이용자가 아닌,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확실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주인으로서 운영과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자원봉사였다. 점점 줄어드는 조합원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조합원들이 할 수 있는 더 쉬운 ‘참가’를 열어야 했다. 아이쿱생협 20년 만에 우리는 ‘활동’과 ‘활동가’의 문턱을 낮추는 기회를 만나고 있다.

물품의 공익적 가치, 조합원 활동과 만나다

아이쿱생협의 자연드림 물품은 조합원의 생필품 기능 외에도 아이쿱의 가치를 반영해왔다. 우리쌀·우리밀은 우리 농업과 식량 자급을 지키는 사회적 가치를 상징하고, 공정무역은 제3세계 노동에 대한 공정 가치와 정의로운 소비를 의미한다. 소비자 알권리를 법과 제도로 촉구한 완전표시제 캠페인 그리고 생활의 안심에 이르기까지 아이쿱생협은 자연드림 물품을 통해서 사회·공익적 가치와 사람 중심의 경제를 담아왔다. 이런 공익적 가치는 조합원들의 더 나은 삶을 지키고 사회적으로는 연대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일반적인 자원봉사가 가난이나 빈곤 퇴치, 혹은 누군가를 시혜하는 것에 머물렀다면 아이쿱생협의 활동은 연대를 기반으로 더불어, 서로 받드는 활동으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갖고 있다. 몸소 나서지 않더라도 구매하는 소비를 통해 조합원들은 공익적 가치를 실천해왔던 것이다. ‘자원봉사’라고 명명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소비는 자원봉사의 테두리 안에 존재해왔다.

물품에 담겨진 공익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우리의 활동은 공익 활동으로 손색없는 ‘아이쿱 자원봉사’다. 이미 아이쿱은 돌봄과 연대의 가치를 품으며 지역과 연계하는 활동, 그리고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연대체로서 기능해왔다. 협동조합 사업과 운동의 주체인 조합원은 공익적 가치를 담고 있는 물품을 기반으로 자원봉사를 실현하고 있다. 협동으로 결사한 사업체를 토대로 조합원은 협동으로 함께한다. 함께 밥 먹는 것도 협동이며 공익이다. 신뢰를 기반으로 연대하는 모든 움직임을 자원봉사라고 규정한다면 누구나 쉽게 공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회적경제 종사자와 회원 그리고 그것과 관계 맺는 모든 사람은 자원봉사자임을 새겨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모두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며 사회적 변화에 동참하는 주체들이기 때문이다.

아이쿱생협 20년차에, 조합원들은 협동조합의 사업과 운동의 주체가 조합원임을 다시 한 번 되새겼다.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고 참여하며 운영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기본 원리이며, 조합원의 주인의식이 약화될수록 협동조합운동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사업마저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세계 협동조합의 역사에서 확인했다. 아이쿱은 ‘헌신하는’ 조합원 활동가들이 조합원으로서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고, 의미를 찾는 활동을 하며, 조합 운영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다. 총회를 통해 선출된 임원 그리고 조직에서 역할을 부여받고 조직을 이끄는 리더들이 그들이다. 조합원 활동가로 규정된 이들을 각별히 조합원과 구분하기도 했다. 활동가와 조합원이라는 구분이 대부분의 조합원들에게는 오히려 참여의 제약 요소가 됐는지도 모른다. 앞서 언급한 파크슬로프식품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주인이 협동조합의 운영과 일에 참여한다’는 매우 당연한 원리를 실천하고 있다. 조합원 활동가와 조합원의 위상이 다르지 않다. 협동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운영 참여는 모든 조합원들의 공통된 ‘자원봉사’에서 비롯됐다. 아이쿱생협 역시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아이쿱 자원봉사의 장(場)을 다지고 있다. 2017년 ‘아이쿱자원봉사’(약칭, ‘아자’)는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소

박하게 참여할 수 있는 ‘쉬운 활동’의 의미를 담은 활동 브랜드이다. 쉬운 참여도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조합원의 행동이기 때문이다.

“아이쿱은 협동조합이며 협동조합을 운영,
참여하는 조합원의 모든 행동을 자원봉사로 규정한다.”¹

아이쿱 자원봉사 : 사회복지와 시민사회를 아우르다

자원봉사(自願奉仕)를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스스로 원하여 받들고 섬긴다’는 뜻이다. 오늘날 자원봉사는 사회복지적 성격과 시민운동적 성격으로 나뉜다. 사회복지적 성격은 개인의 어려움을 돕는 것이고, 시민운동적 성격은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것, 즉 시민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시민권을 행사하는 일이다. 대다수 시민들은 자원봉사를 사회복지적 성격의 개념으로 좁게 이해한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로 말이다. 시민운동적 성격의 자원봉사의 개념이 잘 그려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오는 동떨어진 자원봉사라고 생각한다. 사회 인식의 부족 혹은 개인의 행동이 사회 변화에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아이쿱생협의 자원봉사를 앞에서 확인한 사회복지적, 시민운동적 성격으로 살펴보자면, 사회복지와 시민운동 모두를 아우르며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은 자원봉사를 통해 보다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해가는 힘을 갖기 때문이다.

자원봉사는 단순히 봉사와 희생을 통해 약자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

1 2017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사업계획서



가 아니다. 자원봉사는 시민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시민권을 행사하는 일이다. 즉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나와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사회문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반응하며, 공동체 회복을 향한 약자의 복지 실현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러한 권리를 다양한 영역에서 개개인의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발적으로 실현하는 행위이며 인간의 보편적 행동이 ‘자원봉사’이다.

— 박윤애, 불린티어21 자원봉사리더쉽센터 소장 강연회에서

아이쿱생협의 자원봉사는 자원활동과 무엇이 다를까. ‘자원활동’이란 단어에서는 책임감과 부담감이 느껴진다. 자원활동은 일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또는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라는 편견이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브랜딩한 아이쿱생협의 ‘아자’라는 변화된 패

러다임에서는 조합원 활동가와 조합원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좁혀야 하는 과제가 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를 고민했다. 조합원이라면 쉽고 부담 없이 참여하면서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공익 활동, 그것이 무엇일까.

앞에서도 아이쿱생협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참여를 조합원 자원봉사로 규정했다. 지금까지 가져온 자원봉사의 불편한 어감을 줄이고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쉽고 편안한 활동, 그것을 ‘자원봉사’로 규정했다. 애초 고민했던 조합원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조합원 각자에게 부담 없는 활동, 그것이다.

우리는 이미 공익 활동가!

아이쿱생협은 10년차를 맞이했을 때 생협의 가치를 ‘윤리적 소비’라는 화두에 담아 대내외에 공표했다. 나와 이웃 그리고 지구의 삶을 윤리적 소비로 지켜가자는 캠페인이었다. 제3세계 물품을 수급하되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정무역은 윤리적 소비의 실천이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의 연대는 역사적 정의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으며, 완전표시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소비자운동이었다.

GMO 완전표시제는 3년의 캠페인 성과로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그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참여한 증거가 우리 안에 남아 있다. 17만 명의 조합원이 함께 동참한 캠페인이 없었다면 법안 발의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이쿱생협의 조합원 자원봉사는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한 참여이다. 때로 참여로 인한 변화의 결과를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참여 주체인 조합원들에게 특별한 보람을 안겨주었다. 그래서 아이쿱생협 안에서 꾸준히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캠페인은 조합원들의 일상적 실천

으로도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자신감에 기반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조합원만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이뤄진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아이쿱생협의 활동은 결국 협동조합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비롯해 협동조합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쿱생협의 활동은 90개 지역조합의 조합원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진다. 아이쿱생협은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이 민주 시민으로 거듭나고, 지역사회가 공정과 정의로 지속가능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물론 아이쿱생협에서 앞으로 만들어갈 자원봉사는 협동조합의 가치를 높여 조합원이 자기 주도적으로 생협이라는 기관을 운영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자원봉사는 시민의식의 발로로서

민주주의 확립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술이다.”²

아이쿱생협의 자원봉사는 곳곳에서 소소하고 소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내 가족과 우리 이웃이 쓰는 생활용품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모임이 그렇다. 성남아이쿱생협의 소모임 ‘에코살림단’은 커피 주방 비누부터 코코넛 만능크림, 립밤, 선크림, 비염방지 스프레이, 섬유유연제, 호호바 로션, EM 비누, 가루 치약, 맥주 세탁비누 등을 만들어 보급한다. 소소한 생활용품들을 만들어 소박하게 나누는 과정에서 조합원 간의 우애가 형성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재활용으로 자원순환을 실천함으로써 생태적 측면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은 조합원에 의해 진행된다. 조합원들이 수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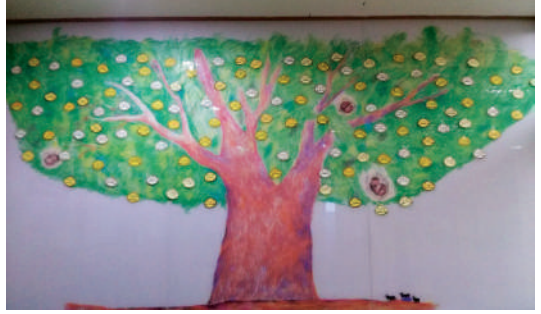
2 이강현(2013). 『자원봉사의 길 : 좋은 사람을 좋은 시민으로 변화시키는』, 아르케.

를 직접 떠서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지역 단체에 기부하는 자원봉사도 일상화되었다. 자연드림 물품인 우유를 마시고 빈 팩을 수집하는 활동부터 그것을 재활용하여 또 하나의 가치를 만드는 일까지 무엇 하나 조합원 자원봉사를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생산지와 각별한 관계를 맺어온 아이쿱생협은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생산지에 봉사를 간다. 대전글꽃아이쿱의 ‘토롱이지킴이’ 모임은 갯잎 농장인 토롱이농장에서 갯잎 따기 자원봉사를 했다.

‘아자’는 조합원들이 쉽고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 아주 사소한 것, 그리고 시민으로 성장하는 활동 모두를 자원봉사에 포함하고 있다. 조합의 행사를 준비하는 자원봉사, 지역조합 공간 청소나 화분 관리도 자원봉사로 이뤄진다. 조합에서 필요한 현수막도 자원봉사로 함께 만드는데 개인의 재능을 협동조합으로 환원하는 의미가 각별하다. 지역사회를 향한 자원봉사도 활발해졌다. 협동조합의 나눔 가치와 상통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부모 가정, 혹은 저소득 가정에 반찬을 제공하고 아이들에게 요리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보드게임 소모임에서는 조합원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보드게임 대회를 자원봉사로 개최하는 사례도 있었다. 자연드림 매장을 방문하는 조합원에게 물품을 안내하거나 매장을 청소를 해주는 자원봉사도 등장했다. 소소해 보이나 누구에게는 절실할 수밖에 없는 생활이기 때문이다.

공정무역의 가치 확산은 ‘시즌2’를 맞고 있다. 경기도가 ‘공정무역 도시 만들기’를 선포한 이후, 6~9월 동안 경기권역 18개 지역조합에서는 조합원들과 함께 공정무역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 서명운동을 133회 진행하여 41,274명의 지지 서명을 받았다.³ 경기도 조합원들과 시민들의 지지가 지자체에 전달될 수 있는 가교 역할이자 공정무역운동을 자원봉사로 실천하

3 출처 :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2017). 「2017년 경기도 공정무역 컨퍼런스 보고서」



김포아이쿱생협의 자연드림 청소 봉사 (사진 왼쪽)

광명나래아이쿱생협의 공정무역 캠페인 봉사 (사진 오른쪽 위)

울목아이쿱생협의 조합원 자원봉사로 꾸민 공간 (사진 오른쪽 아래)

고 있다.

‘아자’는 우리 사회의 아픔에도 기꺼이 손을 내밀어 함께했다. 세월호 유가족을 위한 지역조합 이사회의 릴레이 단식이 있었고, 조합원들도 함께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던 것이 물품 기증으로 이어졌으며, 이것은 안산의 세월호 가족 치유 공간 ‘이웃’에 반찬 제공과 배달차량 봉사로 이어졌다. 그 과정을 조합원들은 사회적 참사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게 되었으며, 아픔에 동참하며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런 활동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지속되면서 더 큰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문제들이 늘어날수록 모든 시민과 단체들이
삶의 한 형식으로서 또 변화를 가져올 원천으로서
자원봉사에 참여해야 한다.” (조니 룬네)⁴

‘아자’가 세상을 바꾼다

아이쿱생협의 자원봉사를 소개하는 이유는 자꾸만 줄어드는 조합원 참여 때문이다. 좋은 먹거리를 보다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은 마음처럼 이 좋은 모임에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를 꿈꾼다. ‘모임’을 통해 조합원 활동가들이 데뷔하고 성장했다. 함께 밥 먹으며 쌓은 정이 어느새 아이쿱생협의 활동으로 이어져 조합원 활동가로 성장하고, 아이쿱생협의 기둥으로 우뚝 섰다. 그런데 조합원 활동가들이 잉태되었던 ‘모임’과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조합원들의 생활 모습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조합원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접근 방식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며, 조합원에 대한 활동가들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가 아이쿱의 고민이었다. 흔히 이야기하는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귀하다는 평범한 가치 속에서 조합원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가치가 숨어 있지 않을까. 이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협동조합의 운동이 아닐까.

‘당신의 쇼핑이 세상을 바꾼다’. 소비자의 선택은 투표 행위와도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내가 원하는 소비를 했을 뿐인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사람중심의 경제로 이어지는 가교가 된다니. 윤리적 소비가 가랑비가 되어 소비구조와 경제구조를 조금씩 바꾸는 것처럼, 조합원 한 사람의 소소한 봉사와 참여가 내 이웃과 우리 사회를 바꾸는 가교가 될 것이다. 도

4 출처 :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문화

농 상생으로 우리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식품 안전을 통해 지역사회의 기준을 높였던 것처럼 자원봉사는 지역과 세상을 바꿀 동력이 될지 모른다. 아이쿱생협의 자원봉사로 조합원 참여가 확산되기를 바란다. 조합원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봉사할 수 있도록 아이쿱생협은 그 문턱을 낮추었다. 그리고 조합원들의 발길로 그 문턱마저 닳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사회와 공익의 가치가 들어 있는 자연드림 물품과 아이쿱생협의 자원봉사를 통해 협동조합은 더욱 성숙할 것이다. 아이쿱생협의 자원봉사가 더 많이 확산되어 아이쿱생협 조합원이라는 사실이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아이쿱생협은 아낌없이 지원하고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더 나은 세상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해 협동조합으로 봉사하라, 나의 '아자'가 세상을 바꾼다.

“인생의 가장 위대한 끝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이다.” 토마스 헨리 헉슬리 Thomas Henry Huxley의 말로 아이쿱생협의 자원봉사가 걸어가는 길을 표현해본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지식보다는 실천이다. 아이쿱생협의 자원봉사는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지만, 나를 위한 돌봄이자 민주시민으로 성장해가는 실천이다.

좌담

- 참 석 김 기 민 청년연대은행 토닥 이사장
김 수 화 행복증심생협 조합원
민 선 영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박 준 구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팀장
손 흥 택 희망나눔세상 위원

사회 · 정리

박범용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연구PM

열정페이와 자원봉사 사이에서

때 2017년 11월 6일(월)

곳 종각 마이크임팩트스퀘어

사회 오늘 좌담회는 다양한 영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경험하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간단히 개인 소개를 해주시고 어떤 계기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준구 1998년부터 자원봉사자로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현재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팀장으로 활동하며 ‘1356 자원봉사 포털’¹ 개설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매번 원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찾기 힘들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1356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입니다.

민선영 ‘청년참여연대’에서 공동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넓게 보면 ‘자원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참여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참여연대’에서 여름과 겨울 방학 중 진행하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인 <공익활동가 학교>에 2013년 여름 참여하면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 이수에 관심을 둔 교육생이었는데, 참여연대 간사와 식사를 하면서 우연치 않게 참여연대의 부설기관인 ‘청년참여연대’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인연이 현재까지 이어져 4년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청년참여연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청년들의 이슈를 다루는 조직 공동체입니다. 참여연대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민단체인데요, 청년참여연대 역시 정치, 성평등, 평화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며 활동합니다. 청년들이 직접 거리에 나가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하거나 세미나를 직접 기획하여 운영하는 등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홍택 저는 서울시 사회적경제과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희망나눔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임원, CEO 등으로 재직 한 6명이 퇴임 후 뜻을 모아 2013년 단체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대기

1 지역, 분야 등 봉사자의 조건에 맞는 자원봉사 콘텐츠를 살펴보고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로 자원봉사 인증서 발급 등이 가능하다. www.1365.go.kr

업에서 오랜 시간 현업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회에 어떻게 이를 환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경영 관련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재능 나눔으로 프로보노 Pro Bono 활동을 하고자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지금까지 5년 동안 사회적기업 대상 프로보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서울, 경기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경영 관련 멘토링, 코칭 활동을 합니다. 지난해 말까지 110여 개 기업의 컨설팅, 코칭을 진행했으며, 올해에는 40여 개 팀의 코칭을 진행했습니다.



손흥택 희망나눔세상 위원

프로보노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가까운 일본의 재능기부 프로보노 활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NPO법인 서비스그랜트 Service Grant나 영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의 서비스그랜트를 방문하기도 했고요. 일본의 경우 은퇴자만이 아니라 현업의 청·장년들이 활발하게 프로보노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프로보노 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본에서는 금요일 퇴근 후 주말을 이용해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프로보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태계가 놀라운 한편 부러웠습니다.

자원봉사 영역에서

유휴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시니어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성과 진정성만 있다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한다면

현재보다 더 많은

참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기민 청년연대은행 토닥 이사장

**기본적으로 개인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자기 시간이
 많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제도적 변화와
각자의 인식 변화가 확보된다면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자원활동의 영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기민 저는 ‘청년연대은행 토닥’에서 올해부터 이사장 역할을 맡고 있는 조합원입니다. 지난 2013년 한살림에 가입 했고, 2014년부터 활동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활동이 자원봉사의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 시작한 일이기 때문인데요, 스스로 원해서 한 일이 직업의 형태가 아닌, 무보수의 활동이었던 거죠.

한살림에 가입하게 된 계기는 그때가 한창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자치구에서 진행한 협동조합 학교를 수강했는데, 강사 중 한 분이 “여기서 이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의미 있지만, 확실하게 협동조합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협동조합에 가입해서 활동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살림에 가입 하게 됐고 초기 물품 이용 활동만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활동까지 연결이 되어 활동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자원활동을 해왔기에 그 연결이 더욱 자연스러웠습니다.

토닥의 경우, 평소 우리나라 제도권 금융의 한계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회적금융 스터디 모임을 했었는데요, 모임 참여자 중 토닥 이사, 공동체은행 빈

고 활동가들이 있었습니다. 스터디 모임이 끝날 무렵에는 자연스럽게 저도 조합원에 가입을 하게 됐죠. 그래서 현재 활동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공부를 한다는 차원에서 한살림 활동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제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자본가와 주주들을 이롭게 하는 일반기업이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과 조합원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협동조합의 물품과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제 소비로 발생하는 고용 창출 효과와 부가가치 발생 등의 이익이 제 삶에 보탬이 되지 않는 지역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저를 비롯한 조합원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닥의 경우 제도권 금융이 제공하기 어려운 신뢰와 관계 기반의 금융 시스템을 공유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제 스스로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수화 청년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니 너무 반갑네요.

저는 행복중심생협의 조합원으로 활동 중인데요, 자원봉사 활동이라서 시작했다기보다는 둘째가 유치원에 다니면서 오전 시간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워졌고,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행복중심생협과 만나게 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행복중심생협 내부에서 “아이들을 먼저 키운 선배로서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해보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아이를 키울 때 겪었던 어려움이 있었기에 다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엄마들을 몇 명 모았습니다. 함께 육아 모임을 시작한 것이 봉사의 첫 계기라고 할 수 있죠. 지금 그 모임을 7년째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다양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 안에 작은 텃밭 가꾸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활동을



김수화 행복중심생협 조합원

**봉사활동을 금전적으로만 환산할
것이 아니라 바우처를 통해
보상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봉사활동 시간을 마을화폐처럼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봉사활동의 가치가
지역사회 안에서 순환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사회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뜻 맞는 사람과 스터디 모임을 하다가,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외부에서 함께 활동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원봉사를 하게 된 계기에 대

하다 보니 여러 주민들을 만나게 되고, ‘동네에 작은 모임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3년 전 주민센터 2층 공간을 리모델링한다는 소식을 우연히 접하고, 공간 리모델링을 논의하는 시점부터 약 8개월간 여러 주민들과 워크숍을 진행하며 공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눴죠. 그렇게 공간이 완성되자 “주민들 스스로 운영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관에서는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등록하면 봉사 시간을 인증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만 있었는데요, 사실상 무급 자원봉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다. 자발적으로 모임을 조직해서 자율적으로 2년째 공간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보수 자원활동이지만 제가 그 공간을 필요로 했고, 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제겐 의미가 큼니다. 이렇게 지금은 마을과 행복중심생협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 박준구 팀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준구 무보수성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남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자원봉사 활동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방금 김수화 선생님께서 필요에 의해 공간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가장 좋은 형태의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원봉사라는 수단을 활용한다는 것이죠. 다만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이라는 국가의 법이 있고, 그 법에 따라 행정적으로 자원봉사를 인증해줄 수 있는 시간 인증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기준에 따라 자원봉사를 인증할 수 있는지 여부의 구분이 있을 뿐입니다.

사회 다른 질문을 하기에 앞서 자신의 자원봉사 활동 경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자원봉사 활동을 이야기해주신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자원봉사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박준구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팀장

무보수성은 노동에 따른 보수가 없다는 것으로 그것이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제적 요건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노동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경제력을 보장해주는 것도 무보수로 볼 수 있지 않을까에 관한 논란이 존재합니다.

김수화 제가 참여한 육아모임은 ‘다함께 행복하자’는 뜻에서 ‘다행’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저희 모임을 보고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모임을 만드는 모습을 봤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추진한 모임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하셔서 몇 번 찾아갔는데요, 사례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하나의 육아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모임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면서 봉사활동의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생협 조합원들만이 아니라 비조합원들까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조합원이 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구요.

그리고 마을 내에서 공간이 생겼을 때, 적은 인원이 2년 동안 공간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과정에서 공간의 변화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공간을 그저 방문자였던 분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시겠다고 하시고요, 그런 변화에도 뿌듯했습니다.

손흥택 자원봉사 활동을 저희는 프로보노 활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활동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현업에서 은퇴한 시니어들이 모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사회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을 재고민하는 것에서부터 프로보노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영리기업에서 오랜 시간 일해왔지만 막상 은퇴 후 그동안의 경험을 활용할 곳이 마땅치 않았 습니다. 마침 사회적경제 분야를 알게 됐고, 사회적경제 기업이 좋은 뜻과 방향을 갖고 운영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경험을 사회적경제 기업을 통해 나누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나는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이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 요청사항 등을 정리해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보노들과 매칭을 하는데요, 저희는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10개월에 걸쳐 월 1~2회 직접 해당 사회적경제 기업을 방문하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합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 서류작업을 하는 등 상세한 멘토링과 코칭을 진행하죠.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5년 동안 꾸준히 활동을 지속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체를 만들어 프로보노 활동을 한 이유는 혼자일 때보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것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역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민선영 중고등학교 때에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봉사활동 시간을 채워야 했기 때문에 우편국에서 우편물 정리를 하는 등 단순노동 제공 자원봉사가 처음 시작한 자원봉사의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이 되고 난 후 관계가 중심에 놓인 자원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센터에 가서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관계를 직접 맺고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지금도 그 경험이 남아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의미를 얻는다는 것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 과정에 내가 어떤 효능감²을 느꼈는지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청년참여연대에서 의 활동 역시 그 안에서 얻게 되는 관계가 제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곳에서의 자원활동이 확실한 미래, 보장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지만 제가 그 안에

2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어떤 문제를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나 기대감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당면한 과제에 대한 집중과 지속을 통해 성취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기업에서는 사람을 쓰지 않아
발생되는 이윤은 결국 누군가의
소득이 됩니다. 반면,
시민단체에서의 자원활동이 나중에
어떤 가치로 변환이 될지를
생각해보면, 작지만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누군가의 소득이 되는 게 아니라
사회 일부분을 부담할 수 있는
활동이 된다는 점에서
열정페이와 자원활동의
경계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서 찾을 수 있는 관계들이 제 삶에 위로가
되기 때문에 계속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민 특별한 에피소드라기보다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활동이 갖는 의미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토닥 활동의 경우 일
상적인 일들의 끊임없는 연속입니다. 조합
원들의 출자금이 제대로 납부되어 있는지
사무국에서는 점검을 해야 하고, 공동체기
금을 필요로 하는 조합원이 신청할 경우 내
부의 의결 구조 안에서 신청 건들을 심의해
야 하죠.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일지 스스로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대출을
신청하는 조합원들의 사유를 살펴보면 대
부분 ‘나도 언젠가 이런 이유로 대출을 신
청할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을만큼 평범
합니다. 간혹 ‘이렇게까지 힘든 사람이 있
을까’ 싶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조합원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토닥이 그
조합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
다. 대출 한도가 150만 원인데, 이 돈으로
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도 안 되는 거
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워크아웃을
받거나 개인회생과산절차를 받는 등 어느
정도 부채를 정리한 뒤에 자신의 삶을 다시

일궈나가기 위한 초기의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빚을 갚거나 대환대출 용도로는 불가능하니까요. 그런 경우에 허무하죠. 토닥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로부터 어떠한 대우를 받기에, 기댈 곳이 없어서 150만 원밖에 대출이 되지 않는 이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나 싶은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게 됩니다. 물론 청년들이 스스로 모은 기금으로 청년 스스로를 돕는다는 측면에서 보람도 있지만, 사회복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사회 내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저희한테까지 손길이 뻗치는 것을 보면 무력감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 손흥택 선생님,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멘토링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손흥택 경기도 양평의 수미마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청년 두 사람이 아버지의 고향으로 귀촌하여 마을 활동을 하다가 마을 안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일종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게 된 경우인데요, 초기에는 사업상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함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콘텐츠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또 콘텐츠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했죠. 그 결과 지난 2013년에는 농림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마을 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는 등 전국에서 찾아오는 농촌 관광마을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자신의 생업과는 별개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인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사회 무보수,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주셨는데요,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쟁점 중 하나가 소위 ‘열정페이’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박범웅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연구PM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일들을 비용 절감 차원에서 무보수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또 국가가 복지의 측면에서 책임져야 할 것들을 자원봉사의 이름으로 민간에 넘기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고요.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민선영 참여연대에서는 자원활동가 분들이 오실 때 그분의 소질과 재능이 무엇인지를 우선 봅니다. 번역이나 교열 작업과 같이 전문적이지만 한편으로 자원봉사에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작

업을 부탁하게 됩니다. 시민단체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번역 업무를 맡기는 것과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자원활동을 요구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활동을 하기 때문에 절감되는 비용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는 사람과의 노동관계가 자연스럽습니다. 사람을 쓰지 않아 발생하는 이윤은 결국 누군가의 소득이 됩니다. 반면, 시민단체에서의 자원활동이 나중에 어떤 가치로 변환이 될지를 생각해보면, 작지만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소득이 되는 게 아니라 사회 일부분을 부담할 수 있는 활동이 된다는 점에서 열정페이와 자원활동의 경계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참여연대 활동에는 보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노력 모두를 필요로 하는데요, 그럼에도 참여하는 서로에게 미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활동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활동을 통해 함께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원활동에 몰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민 결사체의 구성원들은 회비를 내거나 활동을 통해 조직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결사체의 구성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한살림의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나의 필요를 지속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조합 활동에도 적극적으로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좋아하는 물품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생협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토닥 역시 조직이 존재할 때 기존에 느꼈던 은행으로부터의 소외감 없이 금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죠. 조직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자원활동가로서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안에서 열정페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적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근 조합원에게 무리한 업무를 맡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결사체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요구할 때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자원봉사의 영역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시민단체에서 특정한 일을 결사체의 구성원이 아니라 외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진행한다고 할 때, 그 이득이 물론 공익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단체 내부나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가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활동이 봉사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봉사자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번역 업무를 자원봉사자에게 맡기지 않았다면 어딘가에 용역비를 지급하고 업무를 진행해야 했겠죠. 구성원이나 회원도 아닌 외부 자원봉사자들에게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내부에서 지출해야 할 비용을 절감했는데, 물론 그렇게 절감한 돈을 좋은 곳에 사용했겠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불분명한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화 생협의 조합원 활동가들은 그 안에서 보람 등을 느끼며 활동합니

다. 개인을 위한 활동이라기보다는 조직을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지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활동했는지 의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활동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활동가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이사회 등 내부에서 활동가들에게 어느 정도의 적절한 활동비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논의하게 됩니다.

마을 활동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민관이 함께 지역 내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게 되는데요, 주민센터나 구청이 연관된 활동의 경우 관에서 무보수 자원봉사만을 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죠. 처음에야 봉사활동에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때우기 식의 자원봉사가 지속된다면 참여하는 개인의 역량이 커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원봉사자들이 자주 바뀌죠. 마을에서는 특히 중년 여성분들이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하시는데요, 활동에 따른 큰 대가는 아니어도 봉사활동을 통해 경제적인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적절한 보상이 존재할 때 사람들이 꾸준히 남아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기민 시간을 들여 활동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보상해주는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최근에 ‘현재의 자원봉사 시간을 적립해서 나이가 들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에는 그동안 쌓아온 봉사 시간을 바우처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금전적인 비용이 현 시점에 당장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자원봉사 활동을 시간이 흐른 뒤 사회로부터 다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이러한 보상 체계가 민간에서는 이야기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아직 다뤄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조직에서의 활동이 단순노

동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참여자들이 소진되는 것도 있지만, 활동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그에 따라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원봉사를 계속 요구할 수 있는지의 문입니다.

김수화 마을에서 함께 공간 운영 자원봉사를 하는 저희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봉사활동을 금전적으로만 환산할 것이 아니라 바우처를 통해 보상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봉사활동 시간을 마을 화폐처럼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봉사활동의 가치가 지역사회 안에서 순환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사회 자원봉사가 자기 필요로 출발을 하지만 사회 공익적인 효과가 있다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 사회적 인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제를 던지게 됩니다. 박준구 팀장님은 이를 어떻게 보시나요?

박준구 우선 '열정페이'의 개념부터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정페이와 자원봉사를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은 조직이 아닌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의 목적과 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요처에서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경우, 그 목적과 방법에 동의하여 참여하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기대비용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사회적 기대비용은 기회비용과도 유사한데,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창출되는 일정 수준의 잠재적 사회 비용입니다. 사회적 기대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씀하신 공공기관의 번역 자원봉사는 사회적 기대비용이 발생하는 활동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기대비용 때문에 사회적 보상비용의 논란이 발생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보수성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보수성은 노동에 따른 보수가 없다는 것으로 그것이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제적 요건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노동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경제력을 보장해주는 것도 무보수로 볼 수 있지 않을까에 관한 논란이 존재합니다. 실제 저희 센터에서는 봉사활동으로 차비나 식비를 지출한 경우와 같이 손실비용에 대해서 보전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지점이지요. 하지만 사회적 기대비용이 없다보니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이 따로 없습니다. 국가에서 자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대비용에 따른 예산을 산정해서 투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봉사활동에 대한 보상 시스템으로 바우처를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돌봄나눔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봉사자가 질병으로 인해 간병인이 필요할 때 이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 예산을 통한 것인데요, 예산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둘째로, 본인이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서 이에 대한 보상으로 바우처를 받는 경우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상황이고, 실제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경제 상황에 놓인 분들은 봉사활동을 하지 않아도 국가로부터 복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적 기대비용이 없는 활동에 사회적 기대비용을 측정하다 보니 재정 자체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협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경우도 비슷할 텐데요, 기회비용을 낮게 설정하고 활동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최소한의 경제적 보장이 없어 힘들어하고 그만두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를 보전한다고 해도 활동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지

역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봉사자들에게 최저급여에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하면서 실험을 했는데요, 봉사활동 지속률이 3개월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노력이 자본으로 환산되기 시작하면서 그 노력이 평가절하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목적과 비전을 보고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 없이 자본으로만 접근하게 되니, 봉사자들은 어떤 목적을 달성할 생각으로 참여했는데 여기서 우선 충족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한테 지급되는 금전적 혜택 역시 작다 보니 목적이 경제적인 요소로 바뀌게 되면서 활동을 계속할 동안을 잃게 되는 거죠. 꾸준히 유사한 실험을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동기 부여와 인정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목적과 비전에 대한 달성, 사회적인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방법에 대한 연구가 아직 많이 미비합니다.

기본적인 생활수준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자원봉사는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대비용이 없다는 것은 본인 활동의 자율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대비용을 받는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손흥택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분들이 자원봉사에 더 많이 참여하고 계신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야말로 타인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풍족한 사람일수록 타인을 생각하지 않죠.

개인적으로 오늘 자리에 함께한 청년들이 나이를 떠나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다 보니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나누고 봉사하는 모습에서 다른 세상을 보게 됩니다.

김기민 말씀을 듣다 보니 제가 자원활동을 잘 할 수 있었던 이론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회적 기대비용이 없기 때문에 더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무급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타인의 평가나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모두 모여 성과를 함께 평가할 수는 있지만, 외부 사람 또는 이와 관련 없는 누군가가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죠.

사회 목적과 방법을 봉사자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 자원봉사의 중요한 기준이 아닐까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박준구 사회적 기대성과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는 목적과 방법을 선택하는 자원봉사자의 선택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요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곳에서 사회적 기대성과를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자원봉사자 스스로 사회적 기대성과를 가져간다고 하면 그것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기민 이사장님도 사회적 기대성과를 가져가야겠다고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선택하지 않으신 거죠. 만약에 사회적 기대성과를 가져가기로 결정했다면, 그래서 지금 속해 있는 토닥이 현재보다 100만큼 더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목적을 세운다면 그것은 자원봉사자의 자발적 선택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열정페이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봉사자 스스로 사회적 기대성과를 설정하고 창출한다면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사회 사회적 기대비용 없이도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동력은 무엇일까요? 각자의 활동이 갖는 특징과 장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손흥택 자원봉사 영역에서 유휴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시니어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성과 진정성만 있다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한다면 현재보다 더 많은 참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년간 계속해서 활동 할 수 있었던 동력은 사회에서의 경험을 활용하고, 그와 연관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양평 수미마을의 경우,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다 보니 회계작업이나 내부 문서 정리 등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회계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일대일로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했지요. 사회적경제 기업의 필요와 저희의 경험이 맞아 떨어질 때 양쪽 모두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여갈 때 활동의 지속성이 확보되는 것 같습니다.

박준구 저희가 요즘 집중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영역이 프로보노와 기술 기반 봉사활동 Skill-Based Volunteering인데요, 후자의 경우 운영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기술기반 봉사활동을 운영했는데 결과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동안 고연봉을 받으며 했던 활동을 이제는 봉사활동으로, 때로는 자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참여해야 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김수화 마을 활동에 전혀 관심 없었던 분들이 자원봉사 참여를 계기로 마을 활동은 물론, 그 안에서 소소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얻는 모습을 보면서 자원봉사의 선순환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원봉사 활동 자체는 무보수이지만, 그 경험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한편, 어르신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하는 일이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2년 동안 꾸준히 함께하다 보니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이죠. 또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니 우리 마을이 안고 있는 문제를 민원 제기의 방식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해나가려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필요를 스스로 충족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가져가기 위해 고민한다는 것이 자원봉사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민 지금 참여하고 있는 단위에서의 지속적인 활동이 제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금융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토다,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생협 모두 중요합니다. 또한 관계를 통해 내가 확보하는 사회적 안전망들이 지금의 삶은 물론이고 나이 들어가면서 맞닥뜨리게 될 생애주기별 위험, 감당해야 할 몫들을 절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엔 국가로부터 제공받지 못하는 복지 서비스나 사회적 안전망을 혈연이나 결혼을 통해 확보했지만 더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는데요, 제게 지역활동과 단체에서의 활동은 이를 보완해주는 중요한 안전망이 됩니다. 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망이 삶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의미를 갖고 있으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자원활동이 이러한 관계망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중요하죠.

민선영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의 경우 거시적인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내 삶이 바뀔 것을 기대하면서 청년참여연대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변화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활동을 할 때마다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 저도, 참여하는 다른 구성원들도 지치곤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함께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이 있습니다.

‘나는 왜 청년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계속 활동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동안 제가 정치, 민주사회와 같은 커다란 담론에서 소외당해왔다는 사실이 먼저 떠오릅니다. 나이 어린 여성으로, 또 투표권을 행사하지만 정작 제가 지지하는 후보가 낙선이 되는 상황에서,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으로서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청년참여연대 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쟁취해왔고, 그 과정에서만 느낄 수 있는 희열이 제 활동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활동하면서 주장한 이슈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때 느끼게 되는 쾌감이 크죠. 무언가를 쟁취했고, 그 수준의 활동력이 있으면 다른 상황에서 또다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그만큼의 활동력을 작동시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원활동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대성과를 외부에서 제게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스스로 사회적 기대성과를 설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박준구 자원봉사 활동은 방법이며 수단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자체를 목적으로 둔 것이 현재까지의 자원봉사였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노력봉사는 자원봉사 자체가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자체가 목적인 경우는 굉장히 일차원적인 접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자원봉사는 수단일 뿐이고 목적은 그 뒤에 있죠.

공익성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공익성을 제대로 일으키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이슈 파악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 개개인이 주도성을 갖고 사회를 변혁해가는 것이 자원봉사의 정신입니다.

사회 자원봉사 활동이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더 발전하기도 하지만 한편 제도적 한계로 더 성장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가 더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김기민 자원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사회가 더 건강하고,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의 모습에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각자 생존이 버거운 상황이기에 시민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영역이 많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사회 곳곳에 참여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사회가 훨씬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이를 위해서 어떤 조건이 우선되어야 할까를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개인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자기 시간이 많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죠.

사회가 발전될수록 정부의 역할이 상당 부분 민간으로 이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자발적 참여의 영역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시민 개개인의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주는 고민이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의 단축이 단지 법령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 생활 안에서 서로의 의식 속에서 싹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정시 퇴근을 하는 내 주변의 동료의 모습이 너무도 당연한 거죠. 실제 생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어떤 이유로 얹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제도적 변화와 각자의 인식 변화가 확보된다면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자원활동의 영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손흥택 우리나라 기업들의 인식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규정된 근무시간 준수에서 시작해 연차휴가 사용도 촉진하고 있죠. 대기업들부터 앞장서서 조직문화의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에 비용을 지출하는데, 그에 앞서 기업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에게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이 촉진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시간에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각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

어야 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을 방문하고, 현업에 종사중인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이를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대기업에서부터 조직문화의 변화를 통해 현업 종사자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을 내부에 개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기업의 CSR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적은 인력으로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한 중소기업에서는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인 지원도 함께 필요할 것입니다.

김수화 더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활동 자체가 즐겁고 재미있어야 합니다. 종종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주어진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 원치 않는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린 시절부터 봉사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면 시간이 흘러도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시간 때우기가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좀 더 다양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 활동 속에서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있을 때, 무보수 봉사활동이라도 참여하는 개개인이 스스로 활동의 의미를 얻고 꾸준히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영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들이 사회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절대적인 시간 부족 때문입니다. 지금은 당장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기보다는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미래를 위해 지금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시간과 비용에 쫓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분노, 문제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우리들 사이의 연대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원봉사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학생들이 단순노동에 동원되는 모습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상상력을 확장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자발적인 활동이 사회와 연결될 수 있다는 인식,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나의 재능과 소질이 의미를 갖고 사용되는 경험이 중첩될 때 자원활동에 대한 관심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는 아쉽게도 이러한 인식이나 경험이 부족합니다.

사회 자원봉사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에서 나아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노동시간이 절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이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더 풍요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됐고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서로의 상상력을 확장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협동조합 간 협동으로 만드는 신탁의 미래

주 세 운

동작신용협동조합



신탁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찾아야 한다.

동작신탁이 꿈꾸는 것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착한 금융의 길이다.

내가 맡기는 돈에 이자만 붙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도 기여한다는
자부심도 주는 금융이다.

그곳에 신탁의 지속가능한 미래가 있다고 믿는다.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은 착한 금융의 길을 현실화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신탁은 왜 협동조합의 자금조달을

지원해야 하는가? 그것은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신탁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서이다.

신탁이 추구하는 착한 금융의 길을 함께 개척할 수 있는
동반자를 찾고자 함이다.

협동조합의 자금조달과 신탁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금융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협동조합을 법인격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전국적으로 이미 1만 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을 정도로 새로운 경제 모델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는 많이 부족하다. 특히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요구되는 정책이 금융 인프라 구축이다. 같은 사회적경제 안에서도 사회적기업은 이미 존재하는 법인격인 주식회사, 사단법인, 비영리임의단체 등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해서 지원하는 제도인 반면 협동조합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법인격이다. 특히 탈퇴 시 환급 가능한 자본금의 특성이나 1인 1표의 의사결정 구조는 기존의 금융 문법과는 맞지 않는다. 협동조합의 특성을 이해하는 새로운 금융이 필요한 이유이다.

동작신용협동조합은 지난 2014년부터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융자사업을 진행해왔다. 2017년 11월 기준 총 대출 건수는 58건, 약 45억 원의 자금을 사회적경제에 공급했다. 전체 신탁의 사회적경제 법인 대출 실적이 100억 남짓인 것으로 고려하면 결코 적지 않은 액수를 하나의 지역 신탁이 담당한 셈이다. 대출 건수의 63%(대출 금액으로는 74%)가 협동조합 법인에 대한 융자였으며, 이중 과반수가 담보 제공 여력이 없는 법인에 대한 신용대출이었다. 그럼에도 누적 연체율은 0%를 유지하고 있다.

조합에서 융자사업을 담당하며 때로는 광주, 부산의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조직으로부터 대출 문의를 받기도 했다. 현실적으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까지 자금을 취급할 여력이 없기에 그때마다 안타까운 심정이었다. 전국 어디에나 신탁은 존재하지만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융자사업을 하는 신탁은 극히 일부인 현실에서 그 어떤 대안을 제시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민간 주도 협동조합운동의 만형으로서 신탁에는 기본법으로 탄생한 협동조합들을 지원할 당위가 있다. 기본법 협동조합들이 신탁에 가장 기대

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금융 공급이다. 그러나 지역별로 협동조합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신탁조차도 협동조합에 대한 신용 공급은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일단은 기본법 협동조합들의 영세성과 평가 기준의 부재가 가장 큰 이유이다. 또한 신탁 내부적으로 기업여신의 경험부 부족한 탓에 취급이 쉽지 않다.

동작신탁이 처음 융자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리 자금 지원의 의지가 있다 해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상환 가능성이다. 조합원의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신탁에게 원금을 보전하는 것은 가장 큰 의무이다. 선뜻 협동조합에 대한 자금 공급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다수 신탁의 입장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동작신탁의 지난 4년간 경험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신용이 숫자로 나타나는 재무제표 이상임을 증명해주었다. 적절한 평가를 통해 자금을 공급하기만 한다면 신탁의 기존 여신보다 높은 상환율을 보이는 우량한 거래자가 사회적경제였다.

협동조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융자사업을 담당한 지 4년차인 지금도 대출 상담과 평가는 항상 고민의 연속이다. 그나마 신탁은 협동조합이라는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기에 협동조합 법인격의 특수성을 이해하기는 쉬운 편이다. 조합원 탈퇴 시 환급해줘야만 하는 출자금의 특성과 출자 비율에 상관없이 갖는 동등한 의결권 구조 등을 주식회사 금융기관에서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담보 제공이 가능함에도 협동조합이라는 생소한 법인격이라는 이유만으로 은행에서 대출 취급을 거절당한 사례도 종종 있었다.

협동조합은 사업체이면서 결사체이다. 다시 말해 공동의 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원 간에 유대관계가 존재해야만 하고, 의사결정을 민주적으로 이

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협동조합과 상담을 진행할 때 첫 번째로 고려하는 것은 어떤 배경 속에서 조합이 조직되었는가하는 질문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만약 사업상의 이해관계로만 모인 조합이라면 장애에 부딪히거나 부침을 겪을 때 깨지기 쉬운 것이다. 그렇다고 관계성에만 너무 치중하는 조합은 별다른 수익 모델이 없어 사업체라기에 어려운 곳도 많다. 가장 바람직한 협동조합은 유대관계와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조직이다.

두 번째로 중시하는 것은 대표자의 역량이다. 협동조합의 민주적 구조는 의사결정 비용이 높다. 이는 주식회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주 사업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이고 다양한 조합원의 의견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역량 또한 필요하다. 아무리 뛰어난 사업 역량이 있어도 민주적인 훈련이 부족한 리더는 협동조합에 큰 갈등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설립 초창기의 협동조합에 이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조합의 지속가능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지 사업상의 경험만 있는 경영자보다는 지역사회나 기타 다양한 사회단체에서의 활동 이력이 있는 경우를 우대하는 편이다.

세 번째로 고려하는 것은 당연히 재무제표이다. 협동조합도 기업이다. 안정적인 수익 창출은 지속가능한 기업 운영의 선결 조건이다. 그런데 현장에서 만나는 협동조합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설립 초창기의 조합뿐만 아니라 업력이 오래된 곳도 만성적인 영업적자에 시달린다. 사업의 수익성과 사회적 가치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대출 상담에 임할 때마다 배우곤 한다.

다만 지금은 처음 융자사업을 담당했을 때와 재무제표를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졌다.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하는 협동조합이라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제일 중요한 판단 근거는 아니다. 융자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대출금의 상환 가능성이다. 상환 가능성이 높으려면 법인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주식회사라면 간단하다.

돈을 많이 버는 법인은 생존율이 높다. 사회적경제 조직도 마찬가지일까? 협동조합의 생존율을 높이는 요소는 무엇일까? 아직 정답은 모르겠지만 재무제표를 볼 때 그런 관점을 가지려 한다. 단지 단기적인 수익 실현의 여부로만 재무 역량을 판단하지 않고 숫자 안에 담긴 스토리를 통해 이 협동조합이 5년 후 10년 후 지속될 법인인지를 판단하고자 한다. 만약 협동조합의 특성에 맞는 심사 기준 있다면,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인내자본의 필요성

용자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협동조합을 만났다. 필요한 자금의 성격도 다양했다. 단순 운전자금부터, 보조금 사업 수행을 위한 회전자금, 공간 마련 자금과 대규모 시설투자를 위한 자금까지. 제도적 한계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점점 필요를 느끼는 것이 협동조합을 위한 인내자본이다.

그 중 하나는 협동조합 창업 초창기의 높은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인내자본이다. 상환가능성이 대출 심사의 우선순위가 되는 일반 용자사업에서는 창업 초기 단계보다는 어느 정도 매출이 안정화된 성장기 법인을 우대하기 마련이다. 창업 초기의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별도 기금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을 위한 일종의 벤처 캐피탈이랄까. 만약 이러한 기금이 존재한다면 보다 가치 지향적이고 혁신적인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익성이 높은 사회서비스 분야 협동조합을 위한 인내자본도 필요하다. 돌봄, 의료, 요양 등 사회서비스 분야는 협동조합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곳이다. 조합원과 지역사회를 위해 운영되는 협동조합의 특성이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높은 공익성은 곧잘

낮은 수익률로 이어지곤 한다. 이들을 위한 별도의 인내자본이 필요한 이유다. 보다 긴 상환 기간과 낮은 이자율로 이들의 사회적 가치를 지지할 수 있는 인내자본이 필요하다.

마지막 하나는 협동조합의 자산 매입을 지원하는 인내자본이다. 부족한 자기자본으로 높은 자산화의 문턱을 지원하는 인내자본의 필요성이다. 지난 몇 년간 서울시 사회투자기금¹을 위탁 운영한 한국사회투자에서 총 사업비의 90%까지 융자하는 소셜하우징 사업 등을 통해 여러 사회적경제 법인의 자산화를 가능케 했다. 이는 분명 기성 금융제도로는 만들 수 없었던 성과였다. 다만 시(市) 기금이라는 한정된 재원으로만 운용한 탓에 융자 조직에 5년이라는 짧은 상환 기간이 주어졌고, 이는 인내자본이라고 하기에는 아쉬운 한계였다.

해의 사례를 살펴보면 하나의 기금이 단독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여러 기금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한다. 협업을 통해 대출 한도는 극대화하고 리스크는 분산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가령 캐나다의 문화예술 관련 자산화 기금인 커뮤니티 포워드 펀드 Community Forward Fund²는 신탁 등 제도권 금융이 대출금의 60~70%를 저리의 장기 자금으로 제공하면 나머지 20~30% 부족분을 비제도권 금융이 추가 투자하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이러한 공동 융자를 통해 기업은 단기간에 융자금을 전액 상환할 필요가 없고, 기금은 유동성과 효과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³

1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은 2012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2013년부터 사회적경제 기업에게 저리로 자금을 공급해왔다.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용 관리되어온 사회투자기금은 관련 법·제도적 환경 변화 등의 이유로 2017년 4월부터 서울시에서 직접 운용하고 있다. (편집자 주)

2 <http://www.communityforwardfund.ca/>

3 관련하여 동작신탁은 최근 임팩트 금융을 지향하는 P2P업체 비플러스와 함께 사회적경제 영역의 자산화 모델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신탁이 장기의 저리자본을 제공하면, 부족한 부분은 비플러스가 단기의 브릿지 자금을 추가 융자하는 모델이다. 2017년 12월에 첫 프로젝트가 시작할 예정이다.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으로 신협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찾다

신협은 신용협동조합의 약자이다. 이름 그대로 신협의 핵심 가치는 대안적 신용 창출이다. 자산과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과 달리 공동 유대에 기반한 관계금융으로 신용을 공급하는 것이 신협의 존재 의의였다. 1960년 이 땅에 신협이 전래된 이래로 농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어 있던 많은 서민들이 신협의 대안적 신용대출을 통해 고리대의 늪에서 빠져나왔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래 고액 담보대출에 기반한 성장기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뼈아픈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신협의 신용대출 비율은 급격히 감소했다.⁴ 이제는 신용협동조합이 아닌 '담보협동조합'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정도이다. 또한 신용대출 취급 방식 자체도 은행과 유사한 신용평점 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을 도입하게 되면서 대안적 신용 창출이라는 신협 본연의 존재 가치는 많이 퇴색되고 말았다.

정체성의 위기에 빠진 신협이지만, 그렇다고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1975년 평균 조합원 수 500명 남짓이던 신협이 2016년에는 평균 조합원 수 6,400여 명 규모로 성장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과거와 같은 공간적 인접성에 기반한 공동 유대 개념도 많이 희박해졌다. 과거와 같은 방식의 관계금융으로 신용을 공급하는 방식은 이제 불가능에 가깝다.

관련하여 현재 동작신협에서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을 통해 새로이 시도 중인 몇 가지 소액융자 사업을 공유하고자 한다. 아직은 초기 단계의 실험이지만 대안적 신용 창출이라는 신협의 미션을 계승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4 2016년 말 기준 신협 전체 대출에서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4%에 불과하다.

첫 번째는 주택협동조합과 연계해 주거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금융 상품이다.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비싼 월세를 부담하면서도 고시원이나 반지하방의 열악한 시설을 벗어나지 못하는 주거 빈곤을 겪고 있다. 동작신협은 주택협동조합에 대한 융자사업을 통해 여러 채의 저렴한 주거시설 공급을 지원했다. 그러나 주택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저렴한 사회주택 등에 입주하고 싶어도 보증금이 없어 좌절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다. 만약 몇 백만 원의 보증금만 마련할 수 있다면 월세 부담은 반으로 줄이면서 주거의 질은 두 배 이상 좋아지는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 주택협동조합⁵과의 협약을 통해 소득과 신용 기준을 완화한 소액신용대출 상품을 개발했다. 작년 2월에 첫 취급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30여 명 정도의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문화예술인들이 이 소액융자 상품을 통해 공공이나 민간 사회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청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소액융자 상품이다. 동작신협은 고리의 부채로 고통 받는 청년을 위해 재무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는 청년 지갑트레이닝센터사회적협동조합, 청춘희년네트워크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고금리 채무에 대한 대환대출과 재무 상담을 통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만 10명의 청년이 정책자금대출과 신협 자체기금으로 조성한 무이자대환대출의 수혜를 받고 자활의 꿈을 키우고 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녹색금융 상품도 실험 중이다. 지역 사회에서 에너지 자립을 추구하는 협동조합인 에너지슈퍼마켓과의 협업을 통해 개발한 ‘우리집솔라론’이라는 상품은 가정용 미니 태양광발전소 보급을 위한 무이자할부 프로그램이다. 이는 초기 부담이 되는 태양광발전소 설치비를 신협에서 먼저 부담하고 전기료가 절감된 만큼 신협에 상환할 수 있게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5 현재 협약을 체결한 주택협동조합은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모두들청년주거협동조합, 협동조합근바위얼굴, 예술인주택 배우의 집, 완두콩주택협동조합 등이다.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이라는 접근법을 통해 신탁은 소외된 금융 수요를 발굴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신용을 공급할 수 있었다. 이는 무엇보다 신탁만의 사회적 가치를 찾기 위한 실험이다. 이러한 시도가 중요한 이유는 신탁이 은행과 차별화되는 윤리적 금융, 사회적 금융 기관으로써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서이다.

착한 금융으로 차별화하는 신탁의 미래

현재 신탁과 거래하는 조합원의 다수는 조합원이라는 자의식이 없는 금융 소비자일 뿐이다. 이들이 신탁과 거래하는 이유는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 때문이다. 이는 무엇보다 조합원 교육을 방기한 채 규모의 성장만을 추구한, 신탁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이다.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장기간의 저성장 국면에서 고금리에만 의존해 비대해진 신탁은 얼마나 지속가능할 수 있을까? 조합원에게 금리와는 다른 거래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는 신탁은 결국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다.

신탁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찾아야 한다. 동작신탁이 꿈꾸는 것은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착한 금융의 길이다. 내가 맡기는 돈에 이자만 붙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도 기여한다는 자부심도 주는 금융이다. 그곳에 신탁의 지속가능한 미래가 있다고 믿는다.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은 착한 금융의 길을 현실화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신탁은 왜 협동조합의 자금조달을 지원해야 하는가? 그것은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신탁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서이다. 신탁이 추구하는 착한 금융의 길을 함께 개척할 수 있는 동반자를 찾고자 함이다.

살충제 계란, 소비자의 걱정과 생산자의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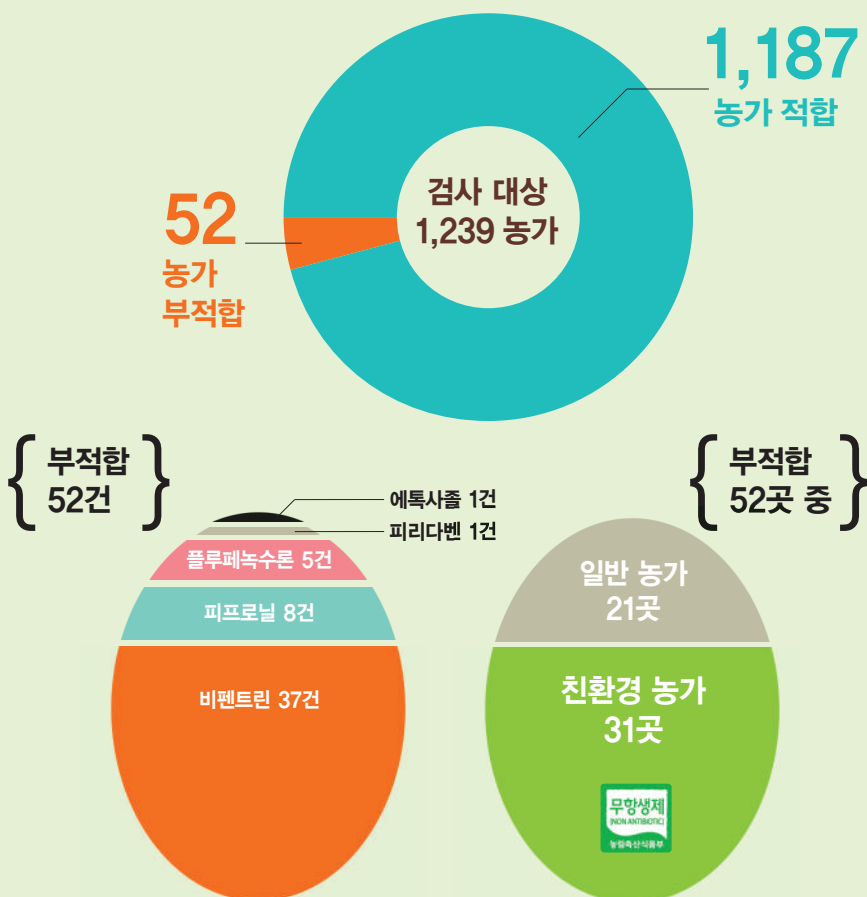
황성구

한경대학교

동물생명환경과학과 교수

2017년 8월 21일 오전 기준, 420곳 보완 검사 포함 최종 결과

산란계 농가 살충제 성분별 부적합 판정 결과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1. 살충제 계란 파동 국내외 이슈

유럽 등 국내외에서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인해 최근 계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안전성에 대한 염려와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

2017년 6월 처음으로 벨기에에서 유통되는 계란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발표를 늦추다가 7월에서야 계란에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됐다고 보고해 거센 논란을 일으켰다. 발표 이후 유럽 각국에서 유통되는 계란을 검사했다. 오염된 계란이 네덜란드와 독일, 영국, 룩셈부르크,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루마니아, 홍콩까지 퍼져나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헝가리, 덴마크까지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28개의 EU 회원국 중 오직 리투아니아와 크로아티아에서만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을 발견하지 못했다. EU 회원국을 포함해 총 49개국이 오염을 보고했고, 이 사건으로 ‘유럽연합 식품·사료 긴급경보시스템^{RASFF}’에 600건 가까이 신고가 접수되었다. 영국 한 나라에서만도 약 70만 개의 계란이 오염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대만의 44개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도 피프로닐 수치가 기준치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럽의 최대 계란 생산지인 네덜란드에서도 살충제 계란이 먹거리 체인으로 유통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란계 농장에서 닭 진드기 방제를 위해 살충제 사용이 만연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사건은 2017년 7월에 공식 발표되었다. ‘네덜란드 식품 및 제품 안전위원회^{NVWA}’는 한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테스트한 결과 수치가 기준치인 0.72mg/kg을 초과했다고 보고했다. 2017년 8월 루마니아에서 위탁 생산된 계란을 이탈리아에서 측정한 결과 1.2mg/kg이라는 매우 높은 수치가 나타나 더욱 충격을 주었다. 네덜란드 식품안전 당국은 산란계와 육계가 동시에 생산되는 농장에서 가금육에 대한 피프로닐 검사를 실시했으나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2017년 8월 14일 한국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던 중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산란계 농가 한 곳에서 피프로닐이, 광주시의 농가 한 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비펜트린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부터 모든 계란 출하를 중지하고 3,000마리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모든 농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는 계란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됨에 따라 다음 날 판매를 잠정적으로 중단했으며, 11번가도 계란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CU와 GS25,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들도 날계란뿐만 아니라 계란을 사용하는 제품의 판매와 발주를 중단했다.

잔류 농약 검사는 계속되었고, 8월 16일까지 철원군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피프로닐이, 양주시, 천안시, 나주시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비펜트린이 검출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오전 5시까지 전수조사 대상인 1,239개 산란계 농가 중 876개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67곳의 농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고 32곳에서 생산된 계란은 살충제가 과다 검출되어 전량 폐기했다고 발표했다. 32곳의 농가 중에서 피프로닐이 6곳, 비펜트린이 23곳, 플루페녹수론이 2곳, 에톡사졸이 1곳에서 검출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전수조사 대상인 1,239개의 농장 중 1,155개 농장에서 검사를 완료했으며, 13곳에서 추가로 살충제에 오염된 계란이 확인되어 총 45개 농장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다음 날인 18일 발표했다. 8월 18일 전수 조사가 마무리되었고, 최종적으로 49곳의 농장에서 살충제에 오염된 계란이 발견되었다. 49곳에서 생산된 계란은 전량 폐기되었으며,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농가의 계란은 즉시 출하가 허가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살충제 성분 전수조사 도중 경상북도의 친환경 농장 2곳의 계란에서 DDT가 검출되었다. 다만 농림부는 검출된 DDT가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를 들어 친환경 인증은 취소하되 적합 농가

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2. 왜 살충제 계란이 생산되었는가?

산란계의 몸은 이나 진드기가 서식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산란계가 흙바닥에서 사육이 되는 경우에는, 흙으로 목욕을 하는 닭의 습성 때문에 이와 진드기를 떨쳐버릴 수 있다. 하지만 케이지에서 하루에 110g의 사료를 먹으며 계란을 생산하는 경우, 진드기나 이가 번식하기 시작하면 그 증식 속도는 어마어마하다. 그 과정에서 산란계는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 속에 놓이게 된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닭 진드기를 퇴치하기 위한 살충제의 사용이었다. 닭 진드기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레드마이트(*Dermanyssus gallinae*)로 국내에서는 일본말인 ‘와구모’로 더 잘 알려진 해충이다. 이 해충은 닭의 피를 빨아 먹고 서식하는데 피를 먹으면 혈액 색깔 때문에 몸이 붉게 보인다고 하여 레드마이트Red mite라고 부른다. 크기는 대개 0.5~1mm 정도이다.

이 해충은 닭에 계속 기생하지 않는다. 어둡고 습한, 좁은 공간을 좋아하기 때문에 밤에 주로 움직이며 닭의 체온과 이산화탄소를 감지하여 이동하고, 닭을 흡혈하여 최대 7~8개월까지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더욱 왕성하게 증식하여 농장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 이러한 진드기의 감염은 어느 나라든 산란계 농장에서는 예외 없이 골치 아파하는 문제이다. 이들은 중추를 새로 들여오거나 난좌, 야생조류, 야생 설치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도 80~90% 농가가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대부분 티푸스나 대장균증 등 복합감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감염이 되면 산란율이 최대 20%까지 떨어지고 난질도 나빠진다.

또한 흡혈로 인한 빈혈이 발생하고 심하면 폐사하게 된다. 가려움으로 인해 불안증세가 심해지고 수면 부족이 동반되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높아지면서 결국 면역력이 떨어져 백신접종에 대한 항체 형성 효율과 항병력도 떨어지게 된다. 5만 두의 산란계 농장에서 심하면 하루에 100두씩 죽어 나갈 때도 있다고 한다. EU는 추정 피해액의 규모가 연간 1,800억 원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이렇게 막심한 피해를 초래하는 닭 진드기를 방제하기 위해 매우 효과적인 유기염소계 화학물질 중 하나가 피프로닐이다. 이렇게 사용된 살충제가 사료 물을 통해서 혹은 호흡 중에 닭의 체내로 흡수되고, 대사를 거친 후 계란 내에 살충제 성분이 함유되는 것이다.

3. 국내 유통 문제로 인한 소비자의 인식 혼선

살충제 계란 파동이 휘몰아치며 우리나라도 대형마트, 수집 판매업체 등 105개소의 계란을 무작위로 샘플링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준치(0.02mg/kg) 이상의 농약 성분(비펜트린, 피프로닐)이 최대 0.056mg/kg까지 검출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1,239개 산란계 농장의 계란을 수집하여 전수조사 한 결과, 49개 농장에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 성분인 플루페녹수론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농약 성분이 검출된 농가의 절반이 친환경농가라는 사실에 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해당 농가의 계란 출하를 즉시 중단하고 유통 물량 추적조사를 통해 전량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향후 친환경 인증기관에 대한 인증기관 폐쇄 등 강력한 조치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견된다.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 피프로닐 등은 진드기나 이 등을 살충하는 데 효과적인 유기염소계 화학물질로, 자연 분해가 쉽지 않다. 국내에서는 1972년부터 DDT(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를 비롯한 일부 유기염소

계 살충제 사용을 금지해오고 있다. 하지만 DDT의 경우 반감기가 최소 2년에서 최대 15년으로 분해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 이미 오래전 토양 등에 잔류한 농약 성분이 산란계 체내에 잔류하여 최종 부산물인 계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맹독성 살충제인 DDT가 검출된 계란을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제재없이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유럽 등 국제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피프로닐의 경우에는 기준치 이하가 검출되어도 해당 농가의 계란을 모두 회수·폐기했지만, 인체에 더 해로운 DDT 등 다른 농약은 기준치 이하라며 그대로 유통시키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여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전수조사 대상 친환경 인증 농가의 계란에서는 피프로닐과 DDT 이외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피리다벤, 클로르페나피르, 테트라코나졸 등 모두 8가지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당국은 에톡사졸, 플루페녹수론, 피리다벤 등은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성분이라는 점을 들어 검출된 양에 관계없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해당 농가의 모든 계란에 대한 유통을 금지시켰다. 하지만 DDT와 비펜트린, 클로르페나피르, 테트라코나졸 등은 기준치 이하가 검출된 경우 친환경 인증마크를 떼어내고 유통시킬 수 있도록 했다.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것 중에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것을 제외하고, 다른 성분에 대해서는 친환경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유통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 조치는 전문가나 소비자들이 납득하기 힘든 점이다.

4. 친환경 인증제도의 한계점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소비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먹거리 안전성을 담보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토양, 물, 농약 등에 대한 분석을 마친 후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한 검증을 거쳐 인증을 한다. 이러한 인증 받은 농가에서 오염된 농축산물을 생산한다면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인증 스티커를 믿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번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인해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약 80여 개 인증기관 중 20곳을 제외하고 모두 인증기관 허가가 취소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많은 인증기관들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인증을 이행하지 못한 정황들이 드러나며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의 부실 인증 논란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친환경 인증마크가 붙어 있는 농산물도 더 이상 믿고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아이쿱생협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인증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다. 인증팀이 생산 현장에 직접 나가서 조사하고 샘플링한 것들을 분석하여 심의를 거친 후 인증하는 절차를 거친다.

인증 제도의 신뢰 문제는 생명과 직결되는 먹거리의 안전 관리 차원에서 결코 간과할 수는 없다.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증마크를 버젓이 붙여 유통하는 것을 규제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민간의 많은 기관에 인증기관 허가를 내어주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진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의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현재와 같은 먹거리에 대한 안전 불감증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소비자들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를 믿고 그만큼의 비용을 더 지불한다. 이번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인해 어찌면 향후 더 크게 발생할지 모를 심각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일찍 파악하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하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다음의 그림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데 농산물 생산자, 수입 농산물, 취급자 인증 등이 있다.

〈그림1〉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 절차



인증 업무는 사실상 거의 민간에 맡겨왔다고 할 수 있다. 민간이 인증 업무를 담당해온 이후 부실 인증 사례가 속출하게 되었다. 지난해에도 약 2,700건의 부실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더군다나 살충제 계란 사태가 벌어진 이후 이루어진 전수조사에서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살충제가 함유된 계란이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이 결과로 발표됨으로써 소비자들의 당혹감은 더욱 컸다. 무항생제 계란은 일반 계란과 비교해 대략 30~40% 정도 비싼 값으로 판매되어왔다. 지금까지 인증마크를 보고 상품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은 정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부실한 관리 감독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말 기준, 300마리 이상의 산란계 농장 1,060개 농장 중 73% 정도 되는 780여 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농가였다. 그러나 이중 9개 농가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되었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농가까지 합하여 전수조사를 한 결과,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총 52곳(피프로닐 8곳, 플루페녹수론 5곳, 비펜트린 37곳, 에톡사졸 1곳, 피리디벤 1곳)이었고, 이중 1973년 이후로 사용이 금지된 DDT가 검출된 농장도 2곳이나 있었다. 이들 농가가 DDT를 실질적으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 계란 내 검출이 되었는지는 면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1〉 한국 산란계 농가 계란 전수조사 결과

구분		친환경 농가	일반 농가	소계
부적합	잔류 기준 위반	31	21	52
	상용 위반	37		37
	소계	68	21	89
적합		617	535	1,152
전수검사 대상 농가 수		683	556	1,239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7. 8. 22). 「국산 계란 살충제 안전관리대책」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는 부적합 처분을 받은 농가의 계란은 모두 폐기 처분하고 유통 및 판매 중단 조치를 선포했다. 반면 DDT와 비펜트린 등은 기준치 이하가 검출된 경우 친환경 인증 마크를 떼어내고 유통시킬 수 있도록 했다. 검출된 살충제 농도가 기준치 이하이므로 친환경 인증 스티커만 떼고 유통하도록 했다는 정부의 판단도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살충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진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아이쿱생협의 인증 체계는 비교적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무리 인증 절차가 충실할지라도 보다 중요한 것은 생산자의 의식이다. 생산자 의식의 고양을 위해서는 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페널티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경각심을 가지고 생산에 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개선점과 대책

생산자 입장에서 살충제 계란이 발생한 원인은 피하기 어려운 닭 진드기를 어떻게 퇴치할 수 있을가에 대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다. 일단

발생하면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농가들은 이를 방제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러한 실정에서 앞으로 인증제도를 더욱 공고히 정착시켜가기 위한 몇 가지 개선점을 제시한다.

첫째, 축종별로 생산성을 저해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항생제 또는 살충제 등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제할 수 있는 대체 사양 관리 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농가 수준에 맞는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채 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닭 진드기가 발생하면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살충제를 찾게 된다. 그러나 닭 진드기 퇴치를 위한 대안이 있으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닭 진드기는 계사의 경우 상대습도 70~90%에서 잘 번식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특히 계사 내 상대습도를 40% 이하로 낮추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면, 살충제 사용이 아닌 다른 친환경적 대책을 쉽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습도를 낮추기 위해서 계사 내 제습기를 설치하거나 습도를 줄일 수 있는 흡습제로서 규조토, 실리카 등 천연 물질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천연 물질은 물리적으로 진드기의 표면에 손상을 입히는 내성이 없고, 친환경적인 퇴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일본에서 도입된 기술 중 하나는 석회를 이용한 방법이다. 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 처리된 석회를 도포함으로써 와구모 퇴치에 매우 효과를 거두고 있다. 현장의 실증 사례를 살펴보니 폐사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여름철 벽과 천장에 석회를 도포한 결과, 열 차단 효과도 커서 고온 스트레스에 대한 개선 효과를 가져왔다. 산란율 개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이를 접목시키고자 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이러한 정보 교환과 교육이 큰 실효를 거두리라고 생각된다.

둘째, 사용이 금지된 항생제 및 살충제 등을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즉 인체에 투여되는 의약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적어도 아무 곳에서나 쉽게 살충제나 항생제 등의 치료제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동물 의약품의 판매 및 구

매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스템과 더불어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셋째, 인증기관의 경우 부실 인증 결과가 발생했을 때의 페널티를 더욱 강화하여 인증기관 취소를 비롯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관리 감독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처럼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검증을 거쳐야만 인증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해당 인증 마크의 가치도 인정받고, 소비자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다.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한 번의 부적합 판정으로 인해 얼마나 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생산자와 소비자, 인증 종사자, 정부 모두가 인식을 같이할 때 이번 항생제 계란 파동과 같은 먹거리 안전 불감증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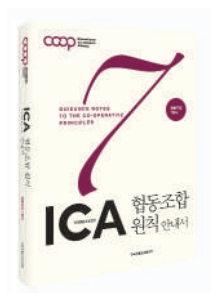
참고문헌

- BBC News(2017.8.11). "Eggs containing fipronil found in 15 EU countries and Hong Kong". Retrieved 2017.8.11.
- ABC News(2017.8.11). "EU : 17 nations get tainted eggs, products in growing scandal". Retrieved 2017.8.12.
- <http://www.dutchnews.nl/news/archives/2017/08/contaminated-egg-scandal-rumbles-on-fipronil-found-in-romanian-eggs/>
- 매일경제신문(2017.8.15). 「이마트 · 홈플러스, '살충제 논란' 계란 판매 중단(종합)」, mk.co.kr(in Korean), Retrieved 2017.8.16.
- 한국경제신문(2017.8.15). 「'살충제 달걀' 파문 확산… 대형마트 3사 계란 판매 중단」, hankyung.com(in Korean), Retrieved 2017.8.16.
- "Fipronil causes commotion at Rikilt (video)", resource.wageningenur.nl. Retrieved 2017.8.31.

김형미

아이쿰협동조합연구소 소장

『ICA 협동조합 원칙 안내서』 제6, 7원칙 해설



이 책이 독자들에게 전달될 무렵이면 한국협동조합협의회에서 번역·발행한 『ICA 협동조합 원칙 안내서』가 공표되어 회원 조직과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웹사이트에 실릴 것이다. 올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중요한 문서가 한국어로 공표되는 소중한 결실을 얻게 되어 기쁘다. 필자는 그동안 ‘지침서’라고 소개해왔는데 이번에 공표될 한국어판 제목에서 ‘안내서’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향후 이 문서를 접하게 될 독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연재 마지막 제목을 이에 맞게 바꾸었다.

제6원칙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

협동조합은 지방, 국가, 지역 그리고 세계 차원의 조직과 협력함으로써 협동조합 조합원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이바지하며 협동조합운동을 강화한다.

안내서에 따르면 제6원칙은, 협동조합기업의 전형적인 특징이고 모든 인류를 위해 보다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미래 경제를 창조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바람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낸다. 구문은 협동조합이 규모의 경제 달성과 상호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동한다면 지역 수준을 넘어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점을 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 균형이라는 매우 어려운 조정이 필요하다.

제6원칙의 해설에서 강조하는 것은 독립성과 조합원의 민주적 통제를 유지하면서 모든 협동조합을 위해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모든 협동조합의 영원한 도전 과제이자 협동조합의 독창성에 대한 시험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은 간헐적인 협업collaboration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헌신과 장기적인 참여를 의미한다.

안내서는 협동조합 사이 협동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데 필요한 주요 특성을 개방성과 투명성, 책임성, 대표성, 유연성, 호혜성, 그리고 협동조

합 정체성 고수(固守)라고 했다.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을 위한 문은 열려 있고, 그 절차와 약속 사항은 투명하게 공개되며, 조합원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책임성 있게 추진하며, 공동 의사결정은 공정하면서도 각 협동조합 조합원과 그들의 지역사회 이익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는 협동을 실현하는 주체가 다양한 의견과 배경, 표현 방식을 지닌 당사자들인 만큼 필연적으로 불확실성이 수반되므로 협동조합인들은 타 협점을 모색하고 혁신하며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협동조합 사이 협동은 상호 이익에 근거하지만 참여하는 협동조합들마다 지원이 필요한 시기, 반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기는 다를 수 있다. 제6원칙에 충실한 협동조합들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보답하여 상호 이익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협동조합 사이 협동이 조직되는 방식은 정치·경제적 맥락에 따라서 달라진다. 2차 협동조합 결성보다 먼저, 공통 이익을 위해 프로젝트에 기반한 협업 활동이 일어나기도 한다. 유동적이며 분권화된 네트워크로 모이기도 하는데 네트워크 활동의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는 개별 협동조합과 신생 협동조합을 네트워크 활동에 끌어 모으는 것이다. 본격적인 협동은 연합회^{federation}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더 작은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존중하면서도 부족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연합회를 구성하는 것이야말로 제6원칙의 핵심이다. 전국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국민경제 속에서 협동조합 기업이 번창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제1원칙은 연합회가 카르텔처럼 운영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오늘날처럼 국제화된 시장과 복잡한 공급망 속에서 모든 분야의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함께 활동해야 한다. 특히 소농들은 1차 협동조합에 참가할 뿐 아니라 더 나은 시장접근성, 마케팅, 공동 보관시설 등을 보장하기 위해 2차 협동조합으로 협력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주택협동조합은 전문경영지원, 건설공사와 유지보수 서비스, 교육훈련 서비스, 거버넌스 자문을 제공하는 2차 협동조합을, 신용협동조합은 통합

적인 금융·정보기술 시스템을, 소비자협동조합은 도매사업, 심지어 국경을 초월하여 공동구매력과 생산 단위를 확대하기 위한 공동사업을 위해 2차 협동조합을 결성한다. 이러한 부문별 협동조합연합회는 정부와 규제기관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을 대변하고 지식과 정보 공유의 장으로 기능한다.

안내서는 제6원칙에서 ‘협동조합 사이의 경제적 협동’, ‘협동조합 사이의 거래(Coop2Coop)’, ‘타 부문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이종 협동)’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적 협동의 구체적인 분야는 협동조합 자본조달을 위한 협력이다. 여기에는 연합회 차원의 연대기금 마련, 기존 협동조합들이 국내·국제적으로 보조금이나 연성대출(연성차관)¹을 신생 협동조합에게 제공하거나 기술지원(경영 지원, 리더 훈련, 전문가 파견 등)을 행하는 것이다. 나아가 가장 직접적인 경제 협동은 협동조합 사이의 거래와 무역으로 표출된다.

안내서에서는 일본 농협과 생협 사이의 (친환경 유기농산물) 거래, 남반구와 북반구 협동조합 사이의 공정무역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타 부문 협동조합들을 넘나드는 협동은 상품과 서비스 구매, 공동 마케팅, 공동 교육훈련 등으로 드러나며 더 나아가 협동조합운동이 공정무역, 노동운동과의 협력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더 넓게 활동함으로써 협동조합운동은 혁신과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안내서는 “개별 협동조합이나 부문별 협동조합은 때로 성장이 지체되거나 지역, 국가, 또 특정 사안에 관해서는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다. 그러나 타 지역 협동조합의 사례나 세계 정의를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는 등 다른 측면을 통해 영감을 얻을 수 있다”고 명시한다.

협동조합은 그 자체가 자생할 수 있게 설계되어 개별 협동조합도 많은 일을 스스로 해낼 수 있다. 그런데 안내서는, 협동조합이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함께 도모하고 일해야 한다는 점을

1 soft loan, 상황 기간이 길거나 금리가 낮아 원리금 상환이 가벼운 대출이나 차관.

강조한다. 제6원칙은 협동조합운동의 오래된 비전이며 ICA의 ‘협동조합 10년을 위한 청사진’(2011년 공표)에 반영된 협동조합 연방공동체²를 이루기 위해서도, 경제활동과 결합된 협동조합의 공동 캠페인은 매우 중요하다.

제6원칙 적용 시의 과제로서 특히 효과적인 협동조합 무역과 글로벌 협동조합 은행·보험 개발은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지구 전체가 하나의 시장으로 점점 통합되고 복잡해지는 가운데 협동조합 사업의 기반인 국제 협동조합은행이나 보험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안내서는 제안한다. 필자가 덧붙인다면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해외여행을 하면서 비자 카드나 마스터카드를 사용하고 영리기업의 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관행도 협동조합 신용카드와 보험으로 대체되고 협동조합 가치를 지키는 협동조합들 사이 무역을 통한 공급망이 더 개척되어야 하겠다.

제6원칙은 1966년 ICA 협동조합 원칙 개정 시 추가되었다. 당시 새로운 현상이었던 다국적 자본주의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된 원칙이었다. 현실에서 이 원칙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지만 다른 형태의 기업보다 다국적 경쟁의 압력에 잘 견디고 협동조합 경제를 이루는 데 매우 핵심적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1995년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 초안자였던 이안 맥퍼슨 Ian MacPherson은 세계경제에서 국가가 통제력을 잃고 있는 가운데 협동조합이 보통 사람들의 직접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합작투자를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공동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³ 사실상 국제 차원의 협동조합 합작투자, 공동사업 행위를 통해 다국적기업

2 co-operative commonwealth. 안내서 마지막 용어 정리에 따르면, 이는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협동조합이 만들어내는 부(富)를 말한다. 이러한 부는 협동조합 기업들이 경제·사회·환경을 아우른 활동이 결합되어 창출된 결과이다.

3 ICA(1995). ‘Background Paper to the 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 협동조합의 아이덴티티에 관한 ICA 성명의 배경 설명 자료; 쿠리모토 아키라(2006). 『21세기의 새로운 협동조합 원칙: 일본과 세계 생협 10년 동안의 실천』, 주영덕·김형미 옮김(2009), 생협전국연합회.

에 길항하기 위한 ‘협동조합적 방식’을 바랐던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제6원칙을 실행하는 데 있어 타 부문과의 협동이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 예컨대 협동조합 합병, 이종 연합회, 연대기금 설치와 공동행위, 협동조합 합작투자사업에 대한 규제, 세제 등 협동조합 법제도 개선 활동이 각 나라마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반영되어야 한다.

한편, 제6원칙을 언급할 때마다 흔히 듣게 되는 말은 “협동조합들끼리 협력이 아닌 경쟁을 왜 하느냐?”는 질문이다. 이에 대한 하나의 대답은 저명한 협동조합 연구자 존스톤 버첼(Johnston Birchall)의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유럽의 소비자협동조합운동은 계급, 인종, 정치 및 종교적 입장 등에 따라 성장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위의 요소들이 조합 가입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협동조합들이 사람들의 현존하는 동질성을 반영하여 서로 다른 문화적 유대와 다양한 선택을 제공한 것이다.⁴

각 부문, 지역, 전국, 심지어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경쟁하는 협동조합은⁵ 하나의 협동조합만으로는 담을 수 없는 주민, 소비자들의 필요에 따라 다르게 결성되고 서로 다른 도전 방식으로 공존하는 가운데 자극과 학습을 주고받으며 성장해왔다는 인식이 현실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협동의 수준은, 안내서에서 열거하고 있듯이 ‘협업→네트워크→연합회’, ‘자금 지원→Coop2Coop→타 부문 사이 협동’⁶으로 점차 발전하고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각 단계별로 협동을 통한 이익과 신뢰가 증진되는 경험의 축적이 매우 중요한데 경험의 축적에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4 존스톤 버첼(1997), 『21세기의 대안 협동조합운동』, 장종익 옮김(2003), 들녘, 328쪽.

5 한살림과 아이쿱(한국), 신협과 새마을금고(한국), 미그로와 코업 스위스(스위스), 아를라 푸즈와 폰테라 그룹(낙농 부문, 국제 차원), 국제 와인시장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와인협동조합들의 경쟁 등.

6 반드시 단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다. 경향을 표현하기 위해 화살표를 사용했다.

〈그림1〉 협동조합 사이 협동, 그 역동성



여행객들은 브라질 사륜차협동조합(Co-op Buggy)의 사륜자동차를 타고 모래언덕을 달리고 발사협동조합(Co-op Balsa)의 뗏목을 타고 브라질 나탈에 있는 피탕기강 여울을 건넌다. 발사협동조합 조합원은 의료협동조합인 우니메드(Unimed) 티셔츠를 입고 있다.

출처: ICA 협동조합 원칙 안내서

2015년 11월 19일 - 두레생협연합회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

생활에 도움을 주는 참 좋은 협동조합을 소개합니다.

서울시협동조합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첫 번째 협동조합을 소개합니다. 생활에 더 가까이 있는 참 좋은 협동조합을 소개합니다.

한국거사노동조합협동조합

한국거사노동조합협동조합은 2015년 11월 19일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거사노동조합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한국거사노동조합협동조합'을 통해 노동조합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 노동조합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 노동조합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 노동조합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

주요 사업 : 노동조합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 노동조합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 노동조합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

서울시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협동조합연합회는 2015년 11월 19일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시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 '서울시협동조합연합회'를 통해 서울시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 서울시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 서울시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 서울시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

주요 사업 : 서울시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 서울시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 서울시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5년 11월 19일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설립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 농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 농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 농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 농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

주요 사업 : 농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 농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 농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5년 11월 19일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설립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농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 농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 농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 농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

주요 사업 : 농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 농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 농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

2015년 11월 두레생협연합회 월간 안내지 『두레』는 서울시협동조합협의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소개했다. 한편, 서울시 소재 생협들은 생협 매장에 신생 협동조합, 사회경제적 조직의 입점도 추진했다.

출처: 두레생협연합회 홈페이지

제7원칙 커뮤니티 관여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승인한 정책 안에서 커뮤니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활동한다.

이 원칙은 1995년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 당시 처음으로 명시된 원칙이며 2011년 ICA 칸쿤 총회에서 미주협동조합 대표들이 ‘커뮤니티와 환경의 지속가능성 관여’concern for communit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ICA가 협동조합 원칙 안내서를 만들게 된 계기를 직접 제공했던 원칙이다.

안내서는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문〉에 나타난 협동조합 가치들 중 ‘자조, 자기책임’과 ‘정직, 개방성, 사회적 책임 그리고 타인에 배한 배려라는 윤리적 가치’를 결합한 요소가 제7원칙이라고 말한다. 협동조합은 그 사업이 영위되는 지역사회에서 탄생하고 뿌리를 내리며 협동조합의 성공은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발전되게끔 뒷받침하는 역량에 달려 있다. 초기 선구적인 협동조합은 교육, 사회, 문화 활동을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했다. 협동조합 사무실은 종종 시민사회, 자원봉사 단체, 주민 조직들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로 활용되고 협동조합의 민주적 리더십과 전환가능숙련은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시민사회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협동조합이 커뮤니티를 생각할 때는 경영·경제학 발상을 넘어 더 특별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1995년 이전 커뮤니티 관여는 제6원칙의 일부였다. 제7원칙이 독립해서 새로이 명시된 배경에는 1987년 유엔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에서 채택한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일명 브룬트란트 보고서가 있다. 이때 처음 제시된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을 뜻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나아가 더 나은 삶에 대한 염원을

충족하는 모든 기회가 확장”되는 것이다. 이어 국제사회에 전환점이 되는 1992년 리우 선언이 있었고 같은 해 ICA 도쿄 총회에서 채택한 ‘환경과 지속가능 발전 선언문’을 통해 협동조합이 조합원 교육, 기관 활동에 있어 환경문제를 우선해야 함을 재확인했다. 따라서 제7원칙은 지속가능한 경제·사회·환경 부문의 발전을 위해 협동조합운동이 기여함을 표명한 것이다.

1997년 이래 국제사법재판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제공법 상의 개념으로 인식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측면은 생태적 균형, 사회정의, 경제적인 안전보장으로, 이 세 가지는 상호 의존적이며 서로 재생되기 때문에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

〈그림2〉 지속가능성의 뼈대

〈협동조합 지속가능성 보고 : 안내서〉(ICA, 2016)에서 인용.



제7원칙 구문은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승인한 정책 안에서...”로 시작된다. 이는 자기 이익과 커뮤니티를 위한 배려 사이의 균형을 잡는 민주적 권리가 조합원에게 있다는 의미로, 이 원칙에 내재된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긴장 관계를 표현한다.

그러면 협동조합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협동조합은 물질적 성장과 비물질적 필요·염원 사이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함을 잘 알고 있다. 문화·예술, 영성과 종교상의 권리, 교육, 역사와 유산, 지역·문화 축제 등이 비물질적 필요이다. 안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제7원칙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자고 말한다.

사회의 지속가능성	· 평화와 사회정의에 대한 헌신 : 지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협동조합을 지원 · 직원에 대한 관심 : 좋은 고용주로서 직원과 그 가족의 복지에 관심을 기울임. ILO 노동기준 준수. 신생 협동조합이 국제 기준을 맞추기 어려울 경우 제6원칙의 일환으로서 고용 실무 지원, 직장연금 연대, 연합회를 통한 공동 인사관리 등을 추진 · 청년에 대한 관심 : 지역사회의 청년들을 지원하는데 참여. 청년을 이사로 선출하거나 청년단체와의 협력, 중·고교, 대학에서 협동조합 교육을 지원하는 등
경제 발전의 지속가능성	· 빈곤과 부의 불평등 해결에 책임감을 지닐 것 · 사람을 발전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유엔 사회개발정상회의(WSSD,1995) 인식을 바탕으로 다수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일 것 · 협동조합의 윤리적 가치를 거래·무역 등에 적용함 : 윤리적인 공급망 계약과 공정무역, 지체 없는 거래대금 지급, 협동조합 사이 거래 등
환경의 지속가능성	· 미주협동조합들이 ‘협동조합 녹색협정(Co-operative Green Pact)’을 선언, 실행 계획을 수립했듯이 협동조합은 모범 사례를 본받고 확대해야 함. 환경 부하를 최소화하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증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수행해야 함 · 환경보호는 긴급하고 점차 중요해지는 과제. 환경문제를 위한 노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이 모든 이들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함

특히 협동조합은 사회·경제·환경, 이 세 차원에서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협동조합의 이득이 일치하도록 만드는 것이 결국 ‘협

동조합기업의 선순환'을 촉진한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예컨대, 지역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내 조달 활동, 공동소유 매장, 지역 자산의 공동소유 등을 장려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기로 결정하는 선택을 장려하는 것이다. 그 결과 새로운 조합원의 유입, 매출액 증가, 더 많은 잉여금으로 선순환이 발생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서 그 투명성과 영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향후 과제로서 무엇보다 모든 협동조합이 구체적인 실천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협동조합이 자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독하고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건설·보수 작업 시 사용하는 목재들도 지속가능 삼림경영 인증을 받은 곳에서 조달하는 등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협동조합의 실천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지구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 위생서비스, 식품 냉장보관을 위한 전기, 안전하고 치안이 유지되며 해충이 없는 양질의 주택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협동조합들에게 오픈소스 IT 소프트웨어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도 협동조합의 실천으로서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 홀로 커뮤니티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이룰 수는 없다. 지자체와 중앙정부, 영리기업, 자원봉사 단체 등과 협업해야 한다. 협동조합은 세계 평화와 사회 결속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지역 공동체의 조합원들이 협동조합 기업에 참여함으로써 시민사회 건설에도 역할을 해왔다. 안내서는 “협동조합은 지금까지 시민사회의 전진과 민주주의 회복에 계속해서 기여해왔고 앞으로도 역시 그럴 것이다.”로 끝맺는다.

이처럼 안내서는 협동조합 원칙을 재밌고 적절한 해설과 적용 지침, 향후 고려사항 및 과제를 제시하고 협동조합의 실천과 연결하여 원칙

의 뼈대에 풍부한 실재감을 살려냈다. 제7원칙에서 말하는 커뮤니티의 실체에 대해서는 “커뮤니티라는 개념이 지역^{local}을 주로 의미하지만, 그것이 배타적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우리는 점점 미디어와 가상 커뮤니케이션 기술로 연결된 글로벌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안내서의 설명이 도움이 된다. 사람, 마을, 지역이 국가, 국제사회, 지구환경과 갈등하거나 이해 대립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을 협동조합 선구자들은 꿈꿔왔고 곳곳에서 실천해왔다. 그런 점에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협동조합운동의 역사에서 면면이 흘러왔던 실천을 표현한 것이었다.⁷

커뮤니티 관여가 제7원칙으로 독립한 것은 인류가 직면한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경종, 합의 형성과 협동조합운동이 궤를 같이 하면서 미래를 지속가능한 체제로 만들겠다는 국제 협동조합운동의 결의가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그 후 ICA는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협동적인 국제 협력 사업을 위해 스스로 자금을 마련하고(국제협동조합임팩트투자기금)⁸ 재원에 처한 협동조합들을 돕고 있다.

또한 2016년에 발표한 <협동조합 지속가능성 보고 : 안내서>에서는 협동조합에서 지속가능성이 얼마나 증진되었는지를 투명하게 보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지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를 참조로 각 협동조합의 특성에 맞는 지표를 추가 발굴하여 연차보고서에 반영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다.

7 Ian MacPherson(2012). “Cooperative’s concern for the community : from members towards local communities’ interest”, *Euricse Working Paper* n.46/13, p.5.

8 Global Co-operative Impact Fund. 2015년 5월. 프랑스 최대 금융기관인 크레디 코페라티프(Crédit Coopératif)가 주도하여 개발도상국의 신생 협동조합들에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금과 융자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의 협동조합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표1〉 협동조합 지속가능성 지표

협동조합 원칙	지표 예시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 조합원 수 · 조합원 다양성(연령대, 성별, 민족, 학력 등) · 이사회 다양성
2. 조합원의 민주적인 통제	· 이사 선출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비율(총회 참석률) · 조합원이 제출한 의안 채택 수
3. 조합원의 경제적인 참가	· 조합원 제공 자본 비율 · 분할불가(비분할) 자본 비율 · 조합원 충성도 지표
4. 자율과 독립	· 외부 투자자가 소유한 협동조합 자산 비율
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예산 비율 · 프로그램 참가자 수(조합원, 일반 시민, 청년, 이사)
6.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	· 타 협동조합과의 연대, 협력에 사용한 예산 비율
7. 커뮤니티 관여	· 조합원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 매출 대비 지역 기반 조직에의 할당금 비율 · 지역 푸드뱅크에 기부한 식품 중량 · 지역 기반 지원 단체 수

이 글의 첫머리에서 언급한 대로 안내서 전문은 올해 안에 한국어로 공표될 것이다. 지면 상 〈협동조합 원칙 다시 보기〉 연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이 오히려 더 많았다. 내년부터는 지난한 작업 끝에 탄생한 상세하고도 명확한 『ICA 협동조합 원칙 안내서』를 한국 협동조합인들이 음미하여 각자의 현장에서 더 풍부히 해야 할 자신의 해설을 덧붙이고 함께 토론하여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더 많이, 더 깊게 만들어내길 소망한다.

적폐 청산

박해성

만화가



행복은 우리 동네 '좋은 일자리'에서 시작된다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

김은남 시사IN 기자



“직원협동조합이라는 정체성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협동조합 생존을 위한 최상의 비책일지도 모른다.

직원협동조합의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매장 곳곳에는 협동조합의 가치를 알리는 홍보물이 눈에 잘 띄게 설치돼 있다.

신선야채 코너, 반찬 코너, 생선 코너, 정육 코너... 얼핏 눈으로 훑기에는 일반 마트와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육지에 비해 제법 구색을 갖춘 문구 코너가 설치돼 있고, 중국인 관광객이나 중국동포 노동자가 많은 제주시 특성상 중국 식품 코너가 별도로 차려져 있다는 점 정도가 눈길을 끈다.

그러나 협동조합에 관심이 좀 있다는 사람들에게 이곳은 평범한 일개 마트가 아니다. 직원협동조합(노동자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전국 최초의 마트가 바로 이곳 제주 행복나눔마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니 매장 입구에 이를 알리는 문구가 깨알처럼 적혀 있는 것이 뒤늦게 눈에 띈다. ‘전국 최초의 직원협동조합 마트’ ‘전직원 정규직 고용’ ‘운영 수익의 2/3 지역사회 환원’ 같은 문구들이다.

전국 최초의 직원협동조합 마트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은 사단법인 행복나눔제주공동체로부터 시작됐다. 제주 지역에서 시민·사회운동을 하거나 노동운동, 진보정당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중심이 돼 2012년 설립한 단체가 행복나눔제주공동체다. “지난 몇 년간 지역 사회단체들이 제주도개발특별법 저지, 강정마을 해군기지 설립 반대 운동 등 개발 이슈에 주로 대응하다 보니 시민들이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사업을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들었다. 생활에서 부닥치는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보고자 행복나눔제주공동체를 만들게 됐다”라고 이경수 초대 공동대표는 말했다(이 대표는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 이사장이기도 하다). 산후조리원, 보육시설, 요양원처럼 생애주기별로 협동의 힘으로 먹고살 수 있는 경제사업을 구상하되 그 수익을 지역민과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때는 바야흐로 협동조합기본법이 막 시행되던 시기. 사업체 형태로 협동조합을 선택한 이들이 댄 처음 눈을 돌린 것이 바로 마트였다. ‘청정제주’

라고는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심도시라 할 수 있는 제주시 도심 일대는 어찌 보면 서울의 자치구 한 곳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즐비한 빌딩, 변화한 거리 풍경, 출퇴근 시간마다 어김없이 되풀이되는 교통체증 등이 낯설지 않은 기시감을 불러일으킨다.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맥도날드 등 유명 브랜드 샵 또한 서울에서와 큰 차이 없이 만날 수 있다.

다만 그 와중에도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이른바 SSM^{Super Super market}이라 불리는 기업형 슈퍼마켓이다. 제주는 유통산업발전법이 논란이 됐던 2011년부터 일찌감치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조례로 규제한 바 있다. 제주의 개인사업자들이 1989년부터 슈퍼마켓협동조합을 결성해 골목상권을 지켜온 데 따른 성과였다. 이로 인해 제주시에서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GS 슈퍼’ 같은 기업형 슈퍼마켓 상호대신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골목 슈퍼인 ‘나들가게’ 상호를 내건 가게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행복나눔제주공동체가 마트 사업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도 그 덕분이었다.

다만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다른 도시나 마찬가지로 열악한 편이었다. 휴무일이 보장되지 않은 채 하루 10시간 이상씩 근무하는 것은 물론 초과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했다. 이런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보자는 것이 직원협동조합을 구상하게 된 계기였다고 이경수 이사장은 말했다. 마트 사업을 할 장소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다. 행복나눔제주공동체가 세들어 있던 상가 건물 1층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마트 주인이 소식을 듣고 양도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기존 마트에서 일하던 직원 10여명 또한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협동조합에 합류했다.

임금 올랐는데 매출은 오히려 상승

그렇게 제주시 노형동에 270여 평 규모의 행복나눔마트 1호점을 개소한 것이 2013년 4월. 돌아켜보면 그로부터 지금까지 4년이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고 이경수 이사장은 말했다. 마트를 시작한 첫째 협동조합의 목표는 저임금 해소였다. 육지 출신 제주 이민자인 김중호 조합원은 “3년 전 제주도에 입도^{入島}한 뒤 한동안은 ‘투잡’을 뛰었다. 하루 8시간씩 일하는 것으로는 4인 가족이 먹고살기 위한 생계비를 벌기 어려웠다”라고 말했다. 기존에 육지에서 하던 전산 쪽 일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그 또한 여의치 않았다. 제주에는 다양한 일자리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마트, 편의점 등을 옮겨 다니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다.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은 이런 저임금·장시간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우선 역점을 두었다. 모든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은 기본이었다. 시급은 초창기만 해도 경력이나 직급에 따른 구분을 두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했다. 그러다 경력에 따라 1~4급까지 총 20호봉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급여체계가 세분화되었다. 2017년 11월 말 현재 최하위 경력자의 시급은 7,000원. 그간 법정 최저시급 이상을 유지해온 원칙에서 나아가 내년에는 이를 생활임금 수준까지 맞춰보려고 조합은 노력 중이다. 급여체계가 이렇게 바뀌면서 일자리의 질은 당연히 높아졌다. 주 6일간 하루 10시간씩 일하고 월 120만 원 정도 받아가던 직원이 협동조합 전환 이후에는 하루 8시간 일하고도 160~170만 원 가량을 벌어들일 수 있게 되었다. 신이 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 개장 반년여 만에 마트 매출도 20% 가량 상승했다.

개장 이듬해인 2014년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은 여기서 나아가 주5일제로 대표되는 노동시간 단축에 도전했다. 말 그대로 임금 삭감과 노동조건 저하 없는 이상적 형태의 주5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실험은 실패로 끝이 났다. 노동시간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일할 사람을 더 뽑아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행복나눔마트 노형점은 13명에서 22명으로 직원 수를 대폭 늘렸는데, 매출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인건비만 폭증하다 보니 당연히 적자 폭이 커졌다. 그 뒤 다시 직원 수를 18명까지 줄인 뒤에야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의 매출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조합원 일부의 문제 제기에 따라 주5일 40시간이라는 노동시간 기준도 완화됐다. 애초에는 배달·판매·유통·조달 등을 두루 거치는 순환근무제를 도입해 야간근무를 하는 직원들의 노동시간을 줄여주고 싶었다고 이정수 이사장은 말했다. 이렇게 되면 직원들의 전문성이나 업무 이해도 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일부 직원은 생각은 달랐다. 각자 전문 영역이 있는 만큼 다른 사람이 그 분야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효율이 떨어진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자신은 더 많이 일해 돈을 더 벌고 싶은데 왜 회사가 노동시간을 정하려 드느냐는 반발도 일부 있었다.

마트에 이어 독립 편의점에도 진출

이런 우여곡절을 거치는 와중에도 협동조합은 꾸준히 규모를 키워갔다. 설립 4년차인 2016년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은 제주공항 인근인 제주시 오라동에 행복나눔마트 2호점(오라점)을 냈다. 제주 특산물과 문화상품을 파는 온·오프라인 쇼핑몰인 ‘베리제주’, 로컬푸드 한식뷔페인 ‘섬채’, 청년과 중장년을 위한 창업 지원 로컬푸드 레스토랑인 ‘애월바베’ 또한 같은 해 잇달아 오픈했다.

2017년에는 ‘콘콕’이라는 독립 편의점 사업에도 새롭게 진출했다(콘콕은 편의점[convenience store]과 협동조합[coop]의 합성어다). 제주도는 관광지인 만큼 마트 못지않게 편의점이 흔하다. 한국편의점협회에 따르면 인구 수당 편의점이 가장 많은 곳이 제주도다(2,482명당 1곳). 그런데 이들 편의점 대



베리제주는 제주 특산품과 문화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이다. 제주 생산자와 육지 소비자를 잇는다.



콘쿵은 대형 프랜차이즈 계열 편의점과 달리 독특한 메뉴와 매장 구성을 선보이고 있다.

부분은 대형 프랜차이즈에 소속돼 있다. 곧 점주 대부분이 이들 대기업과 불공정한 가맹 계약을 맺는 한편 높은 가맹 수수료를 내는 구조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영업 이익을 내려면 점주들이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저임금으로 착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맞서 새로운 제주형 편의점 모델을 만들어보겠다는 것이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의 포부다. 협동조합은 지난 7월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에 콘쿱 제1호점을 냈다. 마을 어귀 바닷가에 자리 잡은 이 편의점은 언뜻 분위기가 카페처럼 보이기도 한다. 일반 편의점과 달리 쉬어 갈 수 있는 휴게공간을 충분히 배치해두었기 때문이다. 매장 내부는 일반 편의점과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제주에서 흔히 보기 힘든 외국산 맥주와 안주·과자류를 다양하게 비치한 점이 색다르다. 바닷가에 머물며 편의점을 찾는 젊은 관광객들의 취향을 고려해서다. 일반 편의점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볼 수 있는 삼각김밥, 햄버거대신 ‘제주산 돼지로 만든 오삼두루치기’ ‘호곰도시락’(‘호곰’은 제주어로 ‘조금’이라는 뜻이다) 등 낯선 이름의 간편식이 진열돼 있는 것도 인상적이다. 대형 프랜차이즈로부터 독립된 편의점이기엔 가능한 자유로운 매장 구성이다.

“높은 가맹수수료 부담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 뒤 독립적으로 편의점을 운영해볼까 고민 중인 점주들도 적지 않다. 이들에게 새로운 대안 모델을 제시하고 싶었다”라고 김하나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 홍보팀장은 말했다. 단, 콘쿱에 참여할 점주는 ‘노동존중’ 조항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곧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의 최저임금, 연차수당, 휴게시간 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해야 하는 것이다. 가맹수수료 부담을 대폭 덜게 되는 만큼 이로 인한 수익을 노동자와 나누자는 게 콘쿱의 기본 구상이다. 이로써 가맹본부와 점주, 노동자가 상생하자는 뜻에서다.

콘쿱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유통망 확보는 물론 가맹사업에 필요한 전산·물류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았다. 이에 당분간 직영점 형태로 콘쿱을 두세 군데 더 운영해보고 가맹점을 모집할 계획이다. 편



이경수 이사장은 협동에 기반한 경제 공동체를 꿈꾼다.

의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마트 사업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조합은 기대 중이다.

갑작스런 확장에 뒤따른 위기

사업이 이처럼 급속도로 확장되다 보니 예기치 못한 뼈격거림도 감지된다. 이경수 이사장은 “우연이 겹치다 보니 일이 지금처럼 진행된 것일 뿐 의도적으로 공격적인 확장을 하려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이를테면 행복나눔제주공동체가 행복나눔마트 노형점 다음으로 공을 들인 것은 의료사협(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었다. 의료사협이 운영하는 병원을 지을 요량

으로 제주시 오라동에 부지까지 확보했다. 그런데 이 같은 구상이 막판에 틀어지면서 공중에 뜨게 된 부지에 마트 2호점과 로컬푸드 한식뷔페를 갑작스럽게 입점시키게 됐다는 것이다.

이 지역의 경우 본래 병원 부지 정도로 예상했던 터인지라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150평 규모로 새로 개장한 행복나눔마트 2호점은 1호점에 비해 개선된 매장 설계와 인테리어로 훨씬 깔끔하고 쾌적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용객 자체가 많지 않다. 여러 개의 체인을 보유한 마트들에 비해 물동량이 적어 구매협상력이 떨어지다 보니 가격을 낮추는 데도 한계가 있다. 2호점 점장을 맡고 있는 김중호 조합원은 “지역 소비자들은 아직 가치보다는 가격에 민감한 경향이 있는 듯하다”라고 말했다. 매장 안내판이나 홍보물 등을 통해 행복나눔마트가 직원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마트이고, 수익의 상당 부분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고 알리고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가격으로 승부하기도 쉽지 않다. 가격을 낮추려면 결국 직원들을 쥐어짜야 할 텐데 직원들이 주인이 되어 정당한 대가를 받자고 만든 직원협동조합이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는 협동조합이 처하기 쉬운 딜레마이기도 하다. 박강태 HBM협동조합경영연구소 이사는 “현실적으로 협동조합의 사업적 성과 또는 성패는 기본 원리보다는 시장 대응 또는 자본 기업과의 경쟁에서 결정되는 바 크다”라고 지적한다(『협동담론』). 자본·노동·기술을 생산의 3요소라 할 때 직원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노동 측면에서 강점을 가진다. ‘사람을 위한 사람 중심의 기업’인 협동조합에서는 일반 기업에 비해 노동자 개개인의 창의성·상상력·자율성·책임성 등등이 더 잘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이 50명인 직원협동조합이라면 사장이 50명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이들 50명은 일반 마트의 종업원과 달리 더 주도적이고 헌신적으로 일하며 영업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니 사장 혼자 경영을 고민하는 일

반 마트와 경쟁이 되겠다”라고 이경수 이사장은 말했다. 실제로 콘쿵에서 매니저로 일하는 주정에 씨는 “과거 다른 편의점에서 일할 때는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일에만 전념하면 됐다. 그렇지만 협동조합에서 일하게 된 지금은 손님 취향에 맞춰 어떤 물품을 들고 어떻게 진열하는 게 좋을지 운영 전반을 함께 고민하게 된다. 일반 직원으로 일할 때와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자본이다. 협동조합이 성공하려면 노동의 질 못지않게 사업에 충분한 규모의 자본을 끌어들이 수 있어야 한다. 조합원의 출자금만으로 이를 충당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한국 사회에 협동조합을 위한 연대기금이나 인내자본이 형성돼 있는 것도 아니다. 식당이나 편의점은 그나마 투자비용이 적게 든다. 행복나눔마트 2호점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에서 6억 원 가까이를 빌리는 것으로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충당했다. 자본의 사회적 조달구조가 형성돼 있지 못하다는 점이 역시나 아쉬운 대목이다. 이로 인해 증가한 부채비율 등은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의 재정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마디로 행복나눔마트 1호점을 제외하고는 전부 적자 상태이다. 새롭게 진출한 사업장들이 자리를 잡기까지 적어도 3년은 걸릴 것이라 보고 있다”라고 이경수 이사장은 말했다.

‘제주의 몬드라곤’을 꿈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이 오늘날 받는 주목은 전국구 급이다. 2015년 기재부 장관상을 받은 데 이어 2016년 제주도 우수 사회적경제 기업 및 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을 견학하기 위해 일부러 제주도를 찾는 단체도 끊이지 않는다. 단순히 전국 최초의 직원협동조합 마트를 운영하고 있어서가 아니다. 지역사회와 결합해 새로운 경제 공동체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실제로 구현해가고

있는 협동조합이라는 측면에서도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의 위상은 독특하다.

마트 운영 등에서 난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기본이다. 수익의 2/3를 지역사회에 돌려주겠다고 선언한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은 혹자가 난 지난 2015년부터 3년째 수익금 일부를 도내 독거노인, 환경단체, 복지단체 등을 위해 기부해오고 있다. 여기서 한걸음 나아가 다양한 지역경제 모델을 만들어 경제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것이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의 포부다.

협동조합이 마트에 이어 제주산 로컬푸드로 만든 제철음식을 파는 식당(섬채, 에월바베)이나 제주 특산물 및 제주에 거주하는 예술가들이 만든 문화상품을 파는 온·오프라인 쇼핑몰(베리제주) 등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그래서다. “괜찮은 아이디어와 재주가 있어도 판로가 없던 젊은 문화예술 창작자들에게 베리제주가 유용한 플랫폼이 되고 있다”라고 (사)제주올레 안은주 이사는 말했다. 이들 식당이나 쇼핑몰에서 지역 인력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니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큰코뿔 또한 편의점이 위치한 지역의 청년회·부녀회 등과 연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 일부를 마을에 환원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행복나눔마트 내에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서로좋은가게’가 입점해 있는 등 ‘협동조합간의 협동’도 실천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올해 75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매출 규모를 향후 3년 이내에 100억 원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이 내세운 목표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만든 사업 모델을 지역 내에 전파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공동체 연대기금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적립된 기금은 청년이나 중·장년층에게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제 공동체의 기반을 만드는 데 쓰일 예정이다. 글로벌 시장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구성된 연대기금을 적극 활용했던 몬드라곤 모델이 떠



행복나눔마트 내에는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서로 좋은가게'가 입점해 있다.

오르는 대목이다. 몬드라곤은 이 같은 연대기금을 투입해 도산 위기의 협동조합을 구제하기도 하고, 새로운 협동조합의 창업을 지원하기도 했다.

‘유리할 때는 조합원, 불리할 때는 노동자’

실제로 지역사회에서는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이 장차 ‘제주의 몬드라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은 생존 가능성을 두고 사투하는 수준이며, 애초에 뜻했던 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협동조합의 지난 4년을 돌아보는 이경수 이사장의 냉정한 평가다.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직원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강화하는 한편 생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는 자기진단을 겸해서다. “소통과 협의를 통한 마트 운영으로 모두가 주인이 되는 일터를 만들어간다는 것이 우리가 내세운 가치다. 그러나 여전히 유리할 때는 조합원, 불리할 때는 노동자 행세를 하려는 사람이 적지 않다”라고 그는 말했다. 일례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 직원 일부는 난관을 어떻게 타개할지 고민하기보다 자기 한몫 건사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곤 한다는 것이다. 다른 일터를 알아보거나 떠나가는 직원도 있다.

조합원 가입을 꺼리는 것 또한 권리만 누리면서 의무는 지지 않으려는 자세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출자금 1천만 원을 내야 한다. “협동조합 출범 초기 출자금은 3백만 원이었다. 그러나 이 정도 액수는 취업 보증금 정도로 여기는 듯해 출자금을 1천만 원으로 인상했다. 조합의 주인으로서 책임의식을 갖기 위해서다”라고 조합 측은 설명했다. 그런데 그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다 조합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여겨지면서 조합원 가입을 망설이는 것이다.

2017년 11월 말 현재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 직원 51명 중 조합원은 20명으로 약 40% 수준이다. 출자금은 15억 7천만 원에 이른다. 이에 협동조합 측은 조합원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경수 이사장은 사업장 내 소통과 합의의 교육도 더 잘 이뤄줘야겠지만 무엇보다 조직의 성장이 자신과 연관된다는 것을 직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새로 도입한 것이 조합원 배당제도다. 조합원이 되면 급여 외에 이익이 났을 때 따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조합에서 운영하는 다른 매장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도 받는다. “월별 손익, 영업 이익 등을 직원들에게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직원들



행복나눔마트는 전국 최초의 직원협동조합으로 운영된다. 2017년 말 현재 직원 51명 중 20명이 조합원이다.

이 이를 공유하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운영에 임할 때 회사가 망하지 않고 영속할 수 있다는 믿음도 생겨날 것이다”라는 그의 말마따나 직원협동조합이라는 정체성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협동조합 생존을 위한 최상의 비책 일지도 모른다. 직원협동조합의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에서 교육의 우선순위

— 협동을 통한 더 좋은 교육 만들기

김현하

아이룸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부문 부문장



교육이 없는 협동조합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현실에서 교육은 우선순위에서 자꾸만 밀려날까요? 로치데일공정선구자협동조합은 교육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 1852년 정관을 개정해 잉여가 생기면 배당하기 전 2.5%를 교육을 위한 사업에 쓰기로 결의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1849년 신문 구독을 위한 도서실을 만들었지만 당시만 해도 신문 구독할 돈이 없어 조합원들이 월 2펜스씩 돈을 모아 구독료를 충당했습니다. G.D.H. 콜의 『영국 협동조합의 한 세기』에 따르면 로치데일 조합원은 경영에 필요한 경제학, 회계학뿐만 아니라 캠브리지대학의 교수로부터 천문학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조합 사무실에는 많은 과학 기구를 구비하고 유료로 현미경을 빌려줬다는 기록도 있는데, 이들이 교육에 상당한 비중을 두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이밖에도 여럿 있습니다. 160년이 흐른 지금, 오늘날 협동조합 조직들은 교육에 얼마나 우선순위를 두고 있을까요? 오늘은 교육을 조직의 백년지계로 보고 투자를 아끼지 않은 조직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미래를 대비하는 협동조합 교육을 같이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전국 1등’을 지향하는 농협의 교육

전국 1등 농협을 지향하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있는 양서농협인데, 실제로 2006년, 2007년 농협중앙회 종합업적평가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53위였다고 하니 괄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지금도 10년째 전국 1%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양서농협은 2005년부터 다양한 사업을 시작했는데 특히 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 인상적입니다. 양서농협은 상하반기에 걸쳐 2회 조합원 교육을 진행합니다.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사업보고회를 열고, 딱딱한 회계자료보다는 조합원이 이해하기 쉬운 동영상부터 화

보집까지 다양한 자료들을 만들어 제공합니다. 작년에도 3,000여 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려 2주일 동안 설명회를 열었다고 하니 여타 농협과는 다른 행보입니다.

정보공개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농촌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영농회장, 부녀회장에게도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정관상에는 분기별 1회 대의원에게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2006년부터 지역사회에 조합원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리더들에게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교육과 정보공개에 조합원들과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이 우호적이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아깝다는 반응부터 무관심과 일부 감정 섞인 저항까지 있었다고 하니 시작이 순탄할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10년 동안 꾸준히 교육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조합원과 참여자들이 조금이라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교양, 건강, 역사 등의 교육을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강의로 제공했습니다. 이제는 교육 프로그램이 완전히 정착했다고 양서농협은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양서농협 이충수 전무의 교육 인사말에 교육에 대한 의미가 엿보여 소개합니다.

오늘 정말 잘 나와 주셨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을 확신한다. 오늘 사정상 못 나오신 내부 조직장님들에게 오히려 죄송하다. 오늘 우리 농협이 정성껏 준비한 프로그램을 듣지 못하다니, 좋은 기회를 놓쳤다.

—이충수, 『협동조합 경영 이야기: 농협다운 농협, 1등 농협』(시간여행, 2017)

조합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도 교육의 주요한 대상입니다. 양서농협은 매달 임직원에게 협동조합 이념과 실무 교육을 병행합니다. 그중에 두 번은 CS(customer service) 관련 교육인데, 흥미롭게도 전 직원의 참석을 위해 새벽 6시에 열립니다. 직원이니까 억지로 자리를 지키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다녀온 강사들은 새벽 6시가 무색할 정도로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반응하고 큰 환호로 맞이해주었다는 후일담을 전합니다. 딱딱한 의사

에 오랫동안 앉아 시간을 뺏기는 교육이라면 없는 만 못하지만, 직원들이 감동하고 참여하는 교육은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드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최고의 교육 과정을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라면 반드시 운영하겠다는 원칙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배울 수 있고, 삶과 일에 신선한 자극을 얻을 수 있다면, 전국 어디서든 최고의 강사를 모셔온다는 원칙은 조직 내에서 교육의 위상이 어떤지 알

수 있게 합니다. 『지선이 사랑해』로 잘 알려진 이지선 박사, 카카오톡 홍보이사, 종교인 혜민 스님,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박사, 구글코리아 팀장부터 정치인, 기업인, 스포츠 스타 등 분야와 지위에 상관없이 열정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 어려운 환경에서도 특별한 삶의 태도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엄선해 감동을 주는 교육을 만들어냅니다. 양서농협은 양서농협의 핵심 가치로 ‘친절’과 ‘배려’를 들고 있는데, 교육이야말로 적극적이고 솔선수범하는 조직의 토양을 위한 투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교육 기획의 세심한 배려가 엿보이는 대목은 또 있습니다. 양서농협은 직원의 가족에게도 양서농협이 지역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떤 감동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알리는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진행합니다. 가정 안에서 자신의 일을 지지받는 직원과 그렇지 못한 직원은 일을 대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업무의 생산성도 다르지 않을까요? 나의 남편, 아내, 자녀가 회사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양서농협(출처 : 농협은행 뉴스 ©사진가 고승범)

업무를 지지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가족들 역시 농협의 일원으로 양서농협의 활동을 이웃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린다면 어떨까요? 이는 일이 단순한 생계수단 이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1,000회를 맞이하는 작은 시골의 교육

농업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 작은 마을, 전라남도 장성군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군 단위 최초 토지민원 행정 전산망 구축, 전국 최초 군 이미지 통합 브랜드(CI, County Image) 개발, 전국 지자체 최초 팀제 실시, 전국 최초 교육 전담부서 교육계 신설이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혁신적인 행보를 걸어왔습니다. 올해 5월 산업연구원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장성군은 초고령화 지역 중 초고성장을 구현하는 지역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이 변화의 밑천은 장성군 1대 민선군수인 김홍식 전 군수가 장성군에 심은 교육에 대한 믿음에 있습니다. 장성군은 공무원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지난 20년 동안 매주 한 번씩 장성아카데미를 열어 올해 6월에는 1,000회를 맞이했습니다. 지자체 최장 기록과 함께 학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05년에는 장성아카데미하우스를 열어 장성군의 교육 자료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전자도서관(현 장성중앙도서관)을 개관했고, 공무원에게 부족한 그 밖의 교육은 기업에 민간 위탁해 매년 한 번씩 3박 4일 동안 서비스 개선, 장성군 이미지 제고, 혁신 등에 관한 주제로 집합 교육을 진행합니다.

다리를 세우고 도로를 포장하면 지역의 변화를 당장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교육은 효과도 불확실하고, 그 변화가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와 언론 모두 ‘시골 변방에서 진행하기에는 너무 수준 높은 교육이다’, ‘교육 대신 다리를 하나 더 세워라’고 할 정도로 반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장성군은 그럼에도 다가오는 시대에 다음 세대

로까지 전해지는 가장 위대한 상속은 물질이 아닌 지식과 정보라는 믿음으로 한 회 한 회 교육을 이어갔습니다. 잘 만들어진 교육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구성원들의 냉소가 점차 자발적 참여로 바뀌었고, 공무원과 의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 노동연구원에서는 장성군의 성과를 연구 분석해 정부에 제출했는데, 장성군이 혁신할 수 있었던 6가지 배경 중 2가지를 ‘교육과 연수를 통한 제도적인 장벽의 극복’ 그리고 ‘자기 발전을 위한 학습 조직’으로 꼽았습니다. 『주식회사 장성군』이라는 책에서는 장성아카데미를 꾸준히 수강한 공무원 수강생들의 인터뷰가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을 짧게 소개합니다.

시간이 많아서 많은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족한 시간과 바쁜 일상 속에서 나름대로 시간을 만들어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취미가 등산인데 장성아카데미에서 자극을 받은 뒤로 우리 꽃과 식물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얼마 후 산에 오르는 동안 이름조차 몰랐던 꽃들에 눈길을 주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등산의 의미가 더욱 커지고 풍부해지더군요. 언제나 깨어 있는 삶의 자세와 의식을 지니게 됐습니다.

몇 년 동안 강의 내용을 수첩에다 빠짐없이 기록하다 보니 어느덧 제 자신이 지식인 대열에 합류해 있다는 자긍심이 생겼어요. 다양한 전문가들의 폭넓은 강의 덕분에 업무에 창의력이 더해져 능률도 오르고요. 다른 지자체 공무원과 합동교육을 받다 보면 장성군 공무원이 발표나 토론에서 두각을 나타내요. 이게 다 장성아카데미 덕분이죠. 장성아카데미 덕분에 인생을 몇 배 더 보람 있고 활기차게 사는 것 같아요.

—양병무, 『주식회사 장성군』(21세기북스, 2005)

2017년, 장성군을 찾은 강사들은 안도현, 은희경 등 문학인부터 방송



장성아카데미 (출처 : 장성군청)

인 김제동, 기생충학자 서민, 여행가 한비야 등 유명인사와 여러 대학의 교수, 전문가들까지 분야를 망라합니다. 인구 5만 명이 채 되지 않는 농촌 마을에서 지금까지 강연한 강사만 900여 명, 수강생만 36만 명입니다. 일 주일에 1회씩 참석하면, 1년에 52명의 강사들을 만날 수 있으니 꾸준히 참여하면 대학교 교과과정이 부럽지 않습니다. 참여가 쉽지 않은 군민들을 위해 장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강의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으니 대도시 못지않은 섬세한 행정 서비스입니다. 군에서는 장성아카데미의 강연 내용을 녹취해 강연집도 만들어 발간하고 있는데, 출판한 책만 4권입니다. 장성군 홈페이지에는 장성아카데미를 ‘강의와 토론이 병행되어 토론에서는 지역 발전에 대한 제언이나 강의 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고 소개합니다. 직접 가보지 않아 실제 모습은 어떨지 모르지

만 다녀온 강사들이 칼럼을 통해 공무원들의 진지한 태도와 뜨거운 질문에 감동받은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는 수강생이 직접 무대에 올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유발언 시간이 주어져 군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있습니다.

더 좋은 교육은 더 큰 협동으로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사례가 충분한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예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산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농협이나 지자체가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예산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차이가 이 조직들을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왜 신생 협동조합은 교육의 우선순위를 높이지 못하고 있을까요?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조합원이나 직원이 교육을 가면 일에 공백이 생겨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고, 교육을 받겠다고 결정했더라도 현장 중심의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이 많지 않아 관행적인 교육으로 그치게 되어 의욕적인 참여가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교육 훈련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직원들의 잦은 이직으로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저숙련, 단순노동이 많아 교육의 필요성 자체를 인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입니다. 신생 협동조합의 경우, 단독으로 변화되는 시장구조와 교육 훈련 시스템에 적응하기에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식 기반 경제는 변화의 속도가 빨라 R&D 투자와 새로운 학습법의 적용이 빈번하게 요구되는데, 작은 기업 차원에서 충당하기 어려운 재정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군소 협동조합 혼자서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비배제성, 비경합성에 따른 공공재 성격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에서는 이직이 빈번해 기관에서 큰 투자로 교육을 제공해도 교육의 수혜는 조직의 자산으로 남기보다 수강생의 사적 재화로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선 자신들이 교육시킨 직원보다 이미 교육을 잘 받은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런 의사결정을 내리면 어느 누구도 교육에 투자를 하지 않아 교육 자체의 질이 떨어지고 발전이 더딘 모순적인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조직에겐 최선의 선택이 산업 전반에는 최악의 선택이 되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이 게임 이론의 유명한 사례에 따르면, 서로 협동하면 모두에게 유익하지만 결국 각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게 되면서 자신을 포함한 모두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협동조합 역시 여력이 생기더라도 직원 교육에 과소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개별 협동조합 혼자서 해결하기보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나서 사회적경제 공동교육기관을 세우고 협동의 동기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종간협동조합연합회와 사회적경제연합회를 만들어 정부가 물적 자산과 인프라를 제공하고, 연합회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동 교육사업을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관 혼자서 제한된 강사와 수강생으로 만들어내는 교육 효과보다 더 큰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올해 문화재청의 지원으로 문화재형 사회적기업들은 한옥 복원을 위한 교육을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또한 인력이 부족한 목수, 와공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문화재형 사회적기업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기관의 한계를 극복하고 협동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려는 협동조합도 참고해볼 만합니다.

‘공부에도 다 때가 있다’, ‘때를 놓치면 후회한다’라는 말은 힘이 셉니다. 이 따듯한 충고는 무서운 경고가 되어 청소년들을 교실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런데 공부에 정말 때가 있을까요? 20세기까지만 해도 인간의 뇌는 신체와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불가역적인 노화의

길로 접어든다고 믿었습니다. 한마디로 ‘나이 들면 머리도 굳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도 뇌는 굳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학습하고 자극하면 생애 전반에 걸쳐 새로운 신경 경로가 화수분처럼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신경가소성neuroplasticity이라고 부르는데, 뇌가 일생 동안 경험과 자극을 받으면서 새로운 신경 연결망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사용하면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것이 신경가소성의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입니다. 결국 학습의 효과는 학습하지 않기 때문에 낮은 것이 나이 탓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빠르게 지식기반 사회로 전환되는 오늘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은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건이 어려워도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로치데일 사례에서처럼 조합원과 직원을 위한 교육에 우선순위를 높이고, 부족한 인프라는 협동의 힘으로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간을 존중하는 경제는 가능하다

『협동조합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존 레스타키스 지음, 번역협동조합 옮김

작한책가게, 2017

이강백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대표



1. 다른 경제는 가능하다. 그리고 다른 경제는 가능해야 한다. 다른 경제가 아니면 세계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옥스팜이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를 앞두고 16일 발표한 ‘99%를 위한 경제’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에 걸친 ‘부의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세계 최상위 부자 8명이 전 세계 인구 절반인 36억 명의 재산과 같은 부(富)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에는 388명이 나머지 인구 절반의 재산과 같은 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부의 불평등은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15년 이래로 전 세계 상위 1%가 나머지 인구 전체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

좋은 책임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기준은 얼마나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가로 판별할 수 있다. 존 레스타키스의 『협동조합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사람을 위한 경

제, 그 이상과 실천을 만나다』라는 책은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책이다. 다른 경제에 대한 모색을 다룬 책 중에서 이렇게 잘 정리된 책을 만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2. 전 인류를 기만한 망상의 극치는 경제학에서의 ‘자기조정 시장’이라는 개념이다. 존 레스타키스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망상의 극치인지를 이 책의 첫 장에서 규명해놓았다. 첫 장의 제목은 ‘거대한 망상’이다.

“경제적 망상이 극에 달한 시기에 ‘자기조정 시장’이라고 하는 심각한 기만은 역사상 가장 과감하게 적용되었다.”(26쪽) 이 개념은 경제가 완전히 별개의 영역이고, 그 자체로 완벽하고 충분하며, 우리 삶을 구성하는 사회적·인간적 관계는 경제와 별개일 뿐만 아니라 경제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 미국 금융시장의 붕괴와 세계경제질서의 파탄은 이런 비이성적 망상이 현실을 지배하도록 부추긴 대가였다. “거대한 망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자유시장이 스스로 완벽한 질서 속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넘어 ‘시장’ 자체가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원천이라는 망상으로 진화한다.”(27쪽)

이런 망상의 극치는 『역사의 종언』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미국 정치경제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황당한 주장으로 이어진다.

“그는 인간 성취의 총체인 시장은 아무런 개입이 없을 때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완벽한 민주주의로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20세기 말 시장이 만든 민주주의가 다른 모든 세계관과의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면서 후쿠야마는 인류의 역사가 종착점에 다다랐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진지하게 제기했다. ‘자유를 향한 끝없는 노력’이라 할 수 있는 인류의 역사가 미국, 서유럽 등 자유시장 국가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는 신자유주의 질서 속에

서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인류에게 미국에서 실현된 완벽한 자유시장 자본주의만이 남았고 그것이 역사의 종말이라고 말한다.”

공산주의에 대한 찬양과 똑같은 논리구조 아닌가? 한때 이런 망상 같은 주장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자유시장을 신봉하는 이들의 확고한 신앙은 맹목적 믿음, 절대적 확신, 증거를 무시하는 태도, 다른 시각에 대한 호전적인 태도 등 종교적 광신의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경제학은 21세기 들어 물질의 시대에 완벽히 어울리는 세속적 종교가 되었다.”(28쪽)고 저자는 말한다. 자유시장을 옹호하는 자본가들과 신자유주의자들은 신성하고 바람직한 정치체제인 민주주의가 경제에서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이 시장과 기업을 권위주의적으로 통제한다는 원리를 고수하는 한편, 자유시장과 그 연장인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의 기초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어리석은 주장은 거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장과 민주주의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는 것은 너무 기본적인 혼동이 자 기만이다.

“자유시장과 민주주의의 동일시는 사실 자유시장 옹호자들이 자본주의 경제의 비민주적인 현실을 덮기 위해 민주주의를 오용하고 왜곡한 결과다.”(40쪽) 저자는 여기서 새롭게 문제 제기를 한다. “민주주의가 정치에 바람직하다면 경제에도 똑같이 좋은 것 아닐까? 자유시장은 왜 권위주의적 지휘통제 모델에 의해 운영되며 개별기업에서는 독재권력 모델로 구현되는가? 이는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근본적인 모순이며 자유시장 신화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시장이 자유로워야 한다면 시장을 구성하는 제도 역시 자유로워야 한다.”(41쪽)

3. 그렇다면 마르크스주의는 어떠한가? 사실 마르크스는 위에서 말한 고전적 정치경제학의 작업가설(working hypothesis)을 거의 대부분 수용했다. 불변의

경제법칙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현실의 종속은 양자의 주장 모두 거의 변함이 없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무시무시한 표현은 자본주의사회의 왜곡된 거울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저자는 비판한다. 자기조정 시장이든 공산주의든 기독교의 천년왕국론이 경제적 법칙으로 세속화된 것이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법칙에 인간을 종속시키는 해방이란 대체 무엇인가?’ 이런 운명론적 사고는 지금까지도 경제학에서 사라지지 않는 요소다. 시장 자체를 거부하는 마르크스주의의 조류들은 애초에 경제민주화에 관심이 없었다. 노동자가 착취당했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정당화한다는 듯 자본의 독재를 노동의 독재로 대체했을 뿐이다. “마르크스주의 역시 경제를 개방적, 민주적, 윤리적 영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지연시키는 수많은 포퓰리즘 중의 하나였다.”(76쪽)

4. 협동조합 모델, 협동조합운동은 로버트 오언(Robert Owen)이 제시한 이념적 모델은 실패하고 이상에서 실용으로 초점이 전환되었을 때 비로소 성공한다.

협동조합 모델이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어 국민경제의 모든 부분에 뿌리를 내리면서 네덜란드와 북유럽에서는 농업 부분이 협동조합으로 재편되었고 지금까지도 농업생산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자유시장 교리라는 단일한 세계관이 경제와 공공정책의 이론과 실천을 모두 지배하고 있다. 개인, 공동체, 모든 국가는 극소수 엘리트의 편협한 이익에 종속되었고, 이는 개인의 삶과 환경, 사회의 안녕에 재앙을 낳고 있다. 공동체와 국가는 소수가 아니라 다수를 위한 시장을 만들 대안을 찾아야 하는 지점에 서 있다.

협동조합은 사회적으로 긴밀한 연대를 이루고자 하는 매우 고유한 인간 본성의 구현이자 경제적 표현이다. 그래서 ‘협동’이라는 방침에 따라 기

존 경제 질서를 다시 짜는 것이 이제는 사회적 가치관과 인간 존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간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 책은 좀 더 인간적인 경제를 이루기 위해 세계 협동조합운동이 펼쳐온 경제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전 세계의 구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적, 실천적으로 풀어냈다. '경제에서 민주주의란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을 가장 실천적으로 구현하는 모델이 협동조합이다.

5.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모델(Emilian Model)은 주목할 만한 영감을 제시한다. 이탈리아 패션산업을 세계 최정상으로 이끌고, 에밀리아로마냐 주를 경제적으로나 삶의 질 등 모든 측면에서 이탈리아 최고로, 나아가 유럽의 상위권으로 이끈 것은 에밀리아의 협동조합 클러스터였다.

“에밀리아 모델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데 수많은 소기업들의 협력이 필요한 협동생산 시스템이다.”(123쪽) 각각의 소규모 협동조합 기업들은 고도로 전문화되었으며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 수출 제품을 생산한다. 이들 기업들은 협동과 경쟁을 통해 목표의식을 공유하고, 한 기업의 성공이 다른 모든 기업의 성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한 기업의 성공이 반드시 다른 기업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협동과 상호부조의 문화가 성공을 이끌게 되었다.

이제 세계 곳곳에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향한 운동이 경제민주주의 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책은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모델, 아르헨티나의 기업회복운동, 스리랑카 농민들을 중심으로 본 공정무역과 협동조합, 캐나다의 사회적협동조합, 일본과 인도의 사례 등을 통해 경제를 좀 더 인간적으로 바꾸어내려는 다양한 시도와 성공적 결과를 소개한다.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사업체에 고용된 고용 인원은 세계 다국적기업에서 고용한 고용 인원보다 많다. 협동조합은 2017년 현재 85개국에 걸쳐

존재하며, 조합원 10억 명 이상이 몸담고 있다. 협동조합운동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지속성 있고 강력한 풀뿌리운동'이다.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상은 일상의 삶 속에서 조용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오늘날 자본주의체제를 재구성하고 인간적으로 변화시킬 경제 모델의 열쇠다. "지금보다 인간적인 경제 및 사회질서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누구나 의지만 있다면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인간적인 경제는 건강한 생태계와 비슷하며, 그러한 경제를 만들려면 인간사회의 다양한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는 다양한 경제 조직을 계속해서 창조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을 추구하는 다른 경제는 현실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고 그것이 주도하는 다른 경제는 가능하다.

협동조합,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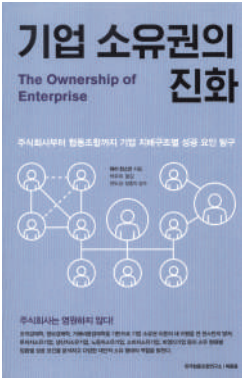
『기업 소유권의 진화』

헨리 한스만 지음, 박주희 옮김

복돋움, 2017

송성호

콤비즈협동조합 감사



헨리 한스만 Henry Hansmann의 『기업 소유권의 진화(*The Ownership of Enterprise*)』가 이 분야 전문가에 의해 번역 출간된 것은 협동조합의 소유권 이론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기쁘기 그지없는 소식이다.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이지만 두꺼워서 도전하지 못하고 대신 이 책의 요약본이라 할 만한 논문 “Ownership of the Firm”(Journal of Law, Economics, & Organization, Vol.4, No.2, Fall 1988.)이 있어서, 그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이제 보다 상세하게 설명된 책이 우리말로 쉽게 번역되어 출간되었다니 반가웠다.

『기업 소유권의 진화』는 ‘특정한 산업, 특정한 국가경제에서는 왜 특정한 기업 소유 형태가 주류가 되고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소유권의 특징과 기능에 대해 좀 더 넓은 관점으로 이 질문을 바라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현재 가장 일반적인 투자자소유기업 형태를 기본으로 하여 협동조합, 비영리기업

등 다른 대안적 소유 형태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의사결정에 관련된 문제가 기업의 소유 형태와 내부 구조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소유권 이론을 분석하는 틀로 먼저 저자는 소유권을 ‘통제권’과 ‘잉여수취권’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았다. 소유권의 구조 측면에서 계약의 총합으로서 기업을 바라보면서 기업의 이용자인 자본공급자, 노동자, 원료공급자 및 소비자 등이 있다고 언급하며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간다. 첫째, 왜 기업의 소유권을 그 기업과 거래하는 이용자들이 가지는가? 둘째, 특정 이용자 집단이 기업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결정적 요인은 무엇인가? 우리들이 보통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묻지 않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저자는 기업을 계약의 총합으로 보면서, 기업과 이용자의 관계는 ‘시장계약관계’ 혹은 ‘소유관계’라고 설파한다. 앞의 관계일 때 이용자는 기업과 단지 계약관계만을 가지며 소유자는 아니다. 뒤의 관계일 때는 이용자가 곧 소유자인 경우이다. 그런데 이용자에 따라서 시장계약관계나 소유관계일 때 발생하는 거래비용이나 거버넌스 비용 및 기타 비용들이 다르므로, 우리는 자기가 속하거나 만들려는 조직에서 어떤 이용자인지 기업과 어떤 관계를 맺으려 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조직 형태가 결국에는 주류가 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즉, 비용이 최저가 되는 관계를 가진 조직 형태를 가져가야 한다는 말이다.

이 책의 또 다른 장점은 시장계약 비용, 소유 비용의 다양한 종류들이 친절한 설명과 함께 소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독자들이 찬찬히 읽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조직 혹은 협동조합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게 해준다. 또 책의 내용이 역자의 후기에 잘 요약되어 있어서 공부하기에도 편리하다. 게다가 이런 요소들이 기업의 소유권 형태에 따라 어떻게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지, 투자자소유기업을 시작으로 노동자소유기업, 농

업 등 생산자소유기업과 다양한 소비자소유기업, 그리고 비영리기업과 상호회사 등을 서로 비교해봄으로써 깊이 있는 관찰을 할 수 있다.

특히, 협동조합 연구자나 실천가들이 빠지기 쉬운 협동조합에 대한 구범적 당위론에서 벗어나서 좀 더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관점으로 협동조합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면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기업 통제에 참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당위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런 이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그런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나머지 이용자 집단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시각은 저자가 모든 기업 형태에 대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매력이다.

이 책이 다른 기업 이론 관련 연구서들에 비해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집단의사결정 비용에 대한 것이다. 기업의 소유자들이 이해관계에 차이가 있을 때, 의사결정을 내리는 보편적인 방식은 이용량에 비례하거나 1인 1표의 원칙에 따라 투표하는 것인데, 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다를 때 그런 의사결정은 비용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이 비용에 대해 다양한 조직 유형별로 설명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협동조합에서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과정의 이슈는 아주 중요한 것이므로 집단의사결정 비용에 대한 치밀한 설명은 특히 도움이 된다.

이 책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미국학자의 책이고 처음 나온 지 2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독자들이 읽을 때 이점을 감안하고 읽어야 할 것이다. 나오는 사례들이 주로 미국의 예라서 낯설거나 어색하기도 하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차입매수leveraged buyout 시장이나 정크본드(투기등급 채권) 시장의 변동 등이 투자자소유기업을 분석할 때 반영되지 못했다.

그리고 저자가 서론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이 책은 신제도경제학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고, 법학자로서 경제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하고 읽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저자는 주식회사도 특별한 형태

의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거래를 하는 이용자들의 협동조합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은 기업과 이용자 간의 관계라는 이론적 틀을 가지고 기업을 바라보는 데는 맞겠지만, 국제협동조합연맹의 정의와 7원칙을 기준으로 협동조합을 바라보는 협동조합인들에게는 당황스럽게 들릴 수도 있다. 물론 저자의 의도는 이용자를 중심으로 바라본다는 뜻이겠으나, 그런 표현은 협동조합에서 구성원의 민주주의적 통제 원칙을 전혀 다르게 보는 것이라고 해야겠다. 1인 1표가 아닌 1주 1표의 주주 민주주의도 민주주의 범주에 넣는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업과 이용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소유권 문제를 보고 있고, 이용자 간의 관계 혹은 조합원 간의 관계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어서 협동조합이 사람들의 결사체라는 관점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을 읽는 분들은 저자가 법학적이고 제도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소유권 이론을 전개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 책은 협동조합을 하는 분들의 생각을 좀 더 조직적이고 객관적이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책을 읽고 나서 저자의 생각을 보다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싶으신 분들은 서두에 소개한 논문 “Ownership of the Firm”이 38쪽밖에 되지 않으니 요약과 복습 삼아서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다.

이주희
아이클협동조합
지원센터
국제부문 부문장

협동조합의 직원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다

●●● 코업뉴스Co-op News 자원봉사자 지수Co-op News Volunteer Index에 따르면 2016/17 회계 연도 동안 영국의 6개 소매협동조합의 98,313명의 직원들이 156,340시간을 자원봉사에 참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간을 다시 계산하면 총 900만 분이 넘으며 직원 당 99분 이상이다. 주로 자원봉사 활동은 업무시간에 이루어지며 이를 임금으로 환산하면 2,100만 파운드에 이른다.

영국 코퍼라티브그룹The Co-operative Group의 조사에 따르면 직원 5명 중 1명이 현재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코퍼라티브그룹의 지속가능성과 윤리에 대한 보고서인 2016년도 코업웨이Co-op Way 보고서는 ‘모금 활동, 공식적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역사회 프로젝트 운영 및 참여 등을 통해 직원들이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년 직원들은 근무시간 중 2일 동안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015년과 비교하여 2016년 봉사활동 시간이 증가했는데, 이는 영국 적십자와의 자선 파트너십을 통한 기금 모금과 2016년 새로운 정체성 선언인 ‘Back to being co-

op'에 따른 커뮤니티 활동 증가에 의한 것이다.

회원 협동조합인 미드카운티협동조합(Midcounties Co-operative)은 총 9,000명의 직원들이 총 36,000시간을 지역의 프로젝트에 공헌했는데, 이중 21,000시간은 실제로 지역 커뮤니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봉사한 시간이다. 봉사활동 시간은 작년의 10,500시간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 직원들은 조합원들이 지역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지난 10년 동안 지역 커뮤니티의 직원들은 총 234,000시간을 봉사활동에 할애했다. 조합원 활동 이외에 미드카운티협동조합이 특히 직원들의 봉사활동을 강조하는 이유는 커뮤니티에 기반을 둔 협동조합이 조합원과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항상 그들의 요구나 상황들을 제대로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서던협동조합(Southern Co-op)에서는 2016년 직원들이 1,000시간의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현재는 단순 봉사활동에 투입된 시간을 측정하는 것보다 자선단체와 직원들 모두를 위한 자원봉사의 질적 향상, 기술 공유와 개발 기회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전체 보고서 링크 : www.thenews.coop/community-impact-index-2017/

난민을 위한 협동조합에 지역사회와 난민들이 기여하다

●●● 유럽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유럽의 난민들은 현재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들이 새로운 커뮤니티에 적응하고 통합되기 위해서는 발 빠른 노력이 필요하다. 2017년 첫 3개월간 약 165,000명의 난민들이 유럽으로 건너왔고 현재까지 99,742명이 이탈리아에, 15,230명이 그리스에 도착했다.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은 18,000명의 난민과 이민자들에게 220개소의 환영센터와 170채의 주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중 하나는 볼로냐, 페라라, 라벤나에 기반을 둔 카멜롯Camelot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멘토링 프로그램, 이탈리아어 강좌 및 인턴십을 제공한다.

카멜롯 협동조합은 청년 난민들의 숙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볼로냐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은 온라인 신청과 면접을 거쳐 선발되며, 선발된 주민들은 일정 기간 훈련을 받고 프로젝트의 규칙을 지키겠다는 합의서에도 서명한다. 지금까지 볼로냐의 28가족이 난민들을 받아들였으며, 카멜롯 협동조합은 내무부의 난민·망명신청자 보호 프로그램SPRAR을 통해 타 지역에도 이 프로젝트를 확대하고자 한다.

SPRAR 프로젝트를 통해 카멜롯은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들에게 기술과 법률 조언, 카운슬링, 직업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인의 경우에는 이력서 작성, 구직 및 직업 훈련과 관련하여 개별 조언자를 배치하고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현재 5명의 훈련 전문가를 고용하고 있다. 인턴십은 장기고용 보장의 첫걸음으로 2016년 난민을 위해 51개의 인턴십 일자리를 확보했다.

1992년 12명의 청년과 3개의 협회가 함께 설립한 카멜롯 협동조합은 현재 고용된 200명의 직원 중 20%가 이민자이다. 카멜롯 협동조합은 난민 중 장애인, 고문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총 12개 기업이 만들어졌는데 이중 10개가 협동조합이다.

그리스의 사회적협동조합인 재생의 바람-Anemos Ananeosis은 WELCOMMON이라는 쉼터를 운영 중인데, 하루에 160~180명이 이용한다. 2016년부터 총 500명의 난민이 쉼터를 거쳤다. 50% 이상이 18세 미만으로 숙박 이외에도 심리적·의학적인 지원을 받으며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연마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WELCOMMON은 15개국에서 온 난민들을 위해 11개 언어의 통역을

제공한다. 여기에 머무는 난민들은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UNHCR}에 의해 선정된 사람들로 편부모 가정, 강간, 인신매매 피해자, 전쟁이나 고문으로 장애를 가진 난민, 암 환자 등 취약계층이 많다.

협동조합 쉼터에는 아랍어를 구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영어, 수학 등의 교육강좌와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자원봉사자 중에는 자신이 난민인 경우도 많다. 스물한 살인 아흐메드^{Ahmed}는 그리스에 도착한 후 이 쉼터를 이용했고 그 경험을 통해 자원봉사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미래에 시리아 사람들을 위한 자원봉사자 공동체를 설립하는 것이 꿈이다.

올해 말, 협동조합은 요리가 가능한 난민들과 지역의 레스토랑을 연결하는 푸드 페스티벌을 계획하고 있다. 장기적인 목표는 다민족 식당을 사회적기업으로 설립하는 것이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참고 www.thenews.coop

<http://wp.coopcamelot.org/camelot-social-cooperative/>

<https://anemosananeosis.gr/en/about-us-en/>

생활 속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을 일상에서 좀 더 가까이 만날 수는 없을까요? 빠르게 살고 빠르게 생산하며 소비하는 삶의 속도에서 벗어나 찬찬히 주위를 돌아보며 깊이 있게 생산과 소비의 관계를 엮어나가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려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일상 속에서 협동과 연대의 들쭉날쭉을 이어 사회 공공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생활 속 사회적경제를 만나보세요!

신효진
편집위원회

소비로 전하는 사회적 가치

한 해의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을 앞둔 요즘, 의미 있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새해 계획을 세울 때 봉사활동이나 정기 기부와 같은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기에는 망설여집니다. 커다란 의미부여가 오히려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직접 활동을 하기에 앞서 우리의 일상 소비에서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반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소비에 우리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넣어보는 거죠. 특히 이번 호에서는 국내 사회문제를 넘어 전 지구적인 문제 해결에 도전장을 내민 소셜벤처를 소개하려 합니다. 제3세계의 빈곤,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고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일이 일상의 소비로 가능합니다. 지금 함께 살펴볼까요?

크래프트링크

직접 만든 핸드메이드 제품은 대량생산으로 만들어진 제품과 달리 사람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손으로 만든 것들은 그래서 소중하고 귀합니다. 세상



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그렇고 만든 이의 정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크래프트링크 CRAFTLINK는 남미의 원주민부터 우리 사회의 미혼모까지, 수공예품을 통해 사람과 세상을 연결하고 사회에 필요한 변화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중남미 인구의 약 30%가 UN이 정한 절대빈곤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절대빈곤층의 상당수는 원주민들이라고 합니다. 남미 여행 중 현지의 빈곤 문제를 목격한 크래프트링크의 대표는 남미 수공예품을 판매하고, 이 수익의 일부로 현지 원주민들을 지원합니다. 크래프트링크에서 주목할 만한 서비스는 마치 잡지를 구독하듯 매월 1만 원의 구독금으로 3개월마다 큐레이션 된 수공예품을 받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주민 여성들은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게 되고 자신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거나 저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나의 소비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연말에는 임팩트 리포트를 구독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변화의 모습을 직접 살펴볼 수 있죠. 최근에는 국내 미혼모 여성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으로까지 아이템을 확장시켰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이어져 내려온 남미의 수공예 기술이 바탕이 되어 그들의 이

야기가 한 땀 한 땀 제품에 담겨집니다. 우리는 그들의 생동감과 영감을 구입한 제품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다채로운 색감으로 채워진 수공예품의 구입은 소비를 통한 즐거움만이 아니라 창작자들의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노동의 자립을 지원해 그들이 경제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하죠. 수공예품으로 함께 가치를 뛰어넘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보다 자세한 정보는 크래프트링크의 홈페이지(<http://www.craft-link.co.kr/>)를 참고하세요.

네이처앤드피플



재활용품에 디자인 또는 활용도를 더해 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up-cycling은 버려지는 옷으로 전혀 다른 디자인의 옷, 가방 등을 만드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업사이클링으로 가장 유명한 브랜드는 트럭 방수포 등으로 가방을 만든 프라이탁Freitag일 겁니다. 20년

전 스위스에서 시작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브랜드가 됐죠. 여기 업사이클링으로 환경보호의 가치를 실천하며 제2의 프라이탁을 꿈꾸는 기업이 있습니다. 부러진 야구 배트를 이용해 만든 우든 펜과 인테리어 소품,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고 베어진 망고나무를 이용한 망고 그릇 등을 만드는 네이처앤드피플Nature & People입니다.

동남아에는 망고나무를 포함한 과수나무가 많습니다. 기후적 특징으로 나무의 성장 속도가 빠르지만 20년만 지나도 열매 맺는 능력이 현저하

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쓸모없는 나무가 됩니다. 네이처앤드피플은 그렇게 버려지는 나무를 사용해 친환경 그릇을 만듭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나무를 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소비자들이 그릇을 하나 살 때마다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겁니다. 지금까지 심은 나무는 약 1천 그루가 넘습니다. 베트남에는 레몬나무, 캄보디아와 태국, 미얀마에서는 망고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제품의 상당수는 제3세계 사람들의 땀이 묻어나 있죠, 네이처앤드피플은 그 사람들에게 나무를 돌려줍니다. 특히 빈민가에 심은 망고나무는 1년에 세 차례나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오는 중요한 원천이 됩니다.

‘소비하다’를 뜻하는 영어 ‘consume’의 어원은 씹버리다, 먹어치우다, 소모하다를 뜻하는 라틴어 ‘consumere’에서 찾습니다. 소비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진시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나의 소비가 한 그루의 나무로 다시 태어납니다. 나의 소비가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소비를 통해 뿌리내린 한 그루의 나무들이 모여 울창한 숲을 이루길 바라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네이처앤드피플의 홈페이지(<http://www.withnnp.com/>)를 참고하세요.

생협평론 2010 겨울(창간호)

창간 특집 윤리적 소비, 신자유주의 질서를 거스르다!

소비가 이념적이고 윤리적이기까지 한 까닭은?

— 이정옥(대구가톨릭대 교수, 사회학)

윤리적 소비의 경제학적인 이해와 생협의 선택

— 김형미(메이지대학원 정치경제학 박사후기과정)

iCOOP생협과 윤리적 소비

— 정원각(iCOOP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유럽의 윤리적 소비

— 이의남(iCOOP고양생협 이사)

[창간 특집 좌담]

윤리적 소비는 생산, 소비, 노동 모두를 고려한다

— 김아영, 김미영, 송정임, 우분주

생협평론 2011 봄(2호)

특집 경쟁의 생산에서 협동의 생산으로

WTO-FTA 시대 한국의 농축업정책,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 권영근(생명창고·지역순환형 사회형성추진운동협의회 상임대표)

한국 농업의 위기와 협동조합의 과제

— 정은미(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협동과 상생의 대안 만들기

: 배추파동을 통해 생각해보는 생협운동의 비전

— 허현중(지역재단 기획이사)

아이쿱은 왜 생산의 문제를 고민하는가?

— 신성식(아이쿱생협 생산법인 경영대표)

[좌담]

생산자들에게 듣는다 : 한국농업현실과 아이쿱 생산정책

— 김진원, 박석원, 오미예, 유재흠, 주정산

생협평론 2011 여름(3호)

특집

협동조합 제대로 이해하기

협동조합이란? : 경제학적으로 이해하기

— 정태인(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신뢰의 생산이 협동조합의 본성

— 정찬율(친환경유기식품유통인증협회 사무국장)

왜 협동조합은 규모 확대 문제에 더 민감한가

— 장종익(연세대 경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일본 생협이 직면한 과제와 조합원 참여 시스템

(日本の生協が直面する課題と組合員の参加システム)

— 丸山茂樹(JC総合研究所、客員研究員) / 번역: 김연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좌담]

생협, 규모가 커지면 협동조합 정신이 훼손될까?

— 김영숙, 이금자, 이필규, 김아영

생협평론 2011 가을(4호)

특집

복지사회, 협동과 참여

복지국가운동과 협동조합운동

— 정승일(복지국가소사이터티 정책위원)

복지사회의 이행전략으로써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에 관한 탐색

— 장원봉(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연구교수)

협동조합운동과 복지

— 김형미(메이지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선수금 운동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협동조합 경제

— 오항식(아이쿱생협연합회 사무처장)

[좌담]

협동과 참여, 그리고 복지

— 권순실, 김민경, 이미연, 장남희, 김아영

생협평론 2011 겨울(5호)

특집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협동조합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협동조합

— 김찬호(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두레생협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과 의미

— 권순실(생협전국연합회 전 회장)

지역사회에서, 생활인이, 만들어가는 소박한 복지

: 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협동복지사업

— 박제선(여성민우회생협 연합회 기획부)

나눔과 협동이 건강을 만든다 : 의료생협

— 조병민(대전민들레의료생협 전무이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만들기과 한살림의 '지역살림운동'

— 정규호(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실장)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이쿱생협

— 김대훈(아이쿱생협연합회 대외협력팀장)

일본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 (協同組合と地域社会への貢献)

— 北川太一(福井県立大学経済学部 教授) / 번역 : 김연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좌담]

지역 활동가들이 보는 협동조합의 나눔 활동

— 김이창, 이진홍, 이혜정, 정경섭, 김아영

특집

민주주의와 협동조합

민주주의 발전에서 협동조합의 역할

—정태인(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민주주의를 훈련시켜온 유럽의 협동조합들

—정원각(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유럽의 협동조합기업 : 경제민주화 구현 현장

—김현대(한겨레 선임기자)

일본의 협동조합 민주주의 : 그 성과와 과제

(日本における協同組合民主主義 : その成果と課題)

—杉本貴志(関西大学商学部教授) / 번역 : 김연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1970년대 한국 협동조합의 민주주의 지향성

—신철영(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친환경유기식품클러스터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좌담】

협동조합이 민주주의를 말하다

—신종철, 안상연, 오귀복, 이화수, 홍준호, 김아영

특집

세계의 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시사점

—기노채(아틀리에 대표이사, 주택건설협동조합준비모임 대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김신양(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부회장)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의 역사와 한국에서의 전망과 과제

—김성오(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소비협동조합의 과제와 대안

—전형수(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신용조합과 협동조합은행

—김창진(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생산자협동조합의 생성과 진화

—장종익(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특별기고]

살아 있는 역사

: 50년 전, 영국 북서부의 협동조합 매장 근무를 추억하며

(Living History : Working at the Co-op in north-west England
fifty years ago)

—로저 리차드슨(R. C. Richardson, 영국 윈체스터대학 명예교수)

[좌담]

새로운 협동을 모색하는 협동조합들

—국태봉, 김일섭, 석승억, 조성돈, 김아영

생협평론 2012 가을(8호)

특집

협동조합의 이론과 실제

협동조합과 ‘일다운 일(Decent work)’의 만남

—신효진(한국해양수산개발원 ODA인턴)

협동조합은 고용 천국을 보장하는가?

—김성오(『몬드라곤의 기적』 저자)

여성의 참여와 도전을 위한 협동조합의 원칙과 실천전략

—김아영(성공회대학교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박사과정)

여성의 능력을 높이고 권한을 강화하는 협동조합을 지향하며

—이미연(아이쿱구로생협 이사장)

협동조합 고유의 특성에 근거한 경영전략

—이호중(농업농민정책연구소 ‘너름’ 연구기획팀장)

나그네 민주주의와 주인 민주주의 :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에 대해

—신성식(아이쿱생협 생산법인 경영대표)

[좌담]

협동조합에 대한 세간의 관심과 기대, 어떠세요?

—권미옥, 김현동, 박주희, 서재교, 김아영

특집

자본 조달, 한국 생협의 난제

협동조합과 '자본'

— 김수행(성공회대 석좌교수)

협동조합을 위한 금융모델

— 조혜경(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협동조합에서 자금의 문제

— 정원각(아이쿱사회적경제지원센터 준비위원장)

협동조합 지원금융 역할을 수행해온 캐나다 데잘맹신허

— 장종익(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좌담]

한국 생협의 자본 조달 현실

— 기노채, 김대훈, 민영, 조향숙, 김아영

특집

협동조합 생태계

한국 사회 경제위기의 대안 하나, 협동조합 생태계

— 김기태(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협동조합 생태계에 대한 구상

— 신성식(아이쿱생산법인 경영대표)

협동조합 생태계로 다함께 행복한 노동을

— 김홍범(아이쿱축산 상무대행)

협동조합 생태계와 조합원 활동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의 경우

— 권미옥(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활동국장)

협동조합 생태계는 어떤 모습일까?

— 오향식(아이쿱생협 콤피티스 경영이사)

[좌담]

협동조합 생태계,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 김동준, 송주희, 유창복, 이대중, 장은성, 조우석, 손범규

특집

생협법 제도를 둘러싼 논쟁들
: 조합원 외 이용을 허용할 것인가

일본 생협법의 조합원 외 이용 규제 (生協法における員外利用規制)

— 関英昭(青山学院大学名誉教授) / 번역 : 이향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6조를 철폐해야 하는 이유

— 김형미(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상임이사)

협동조합의 비조합원 이용 금지에 대하여

— 이재욱(춘천산골마을협동조합 부이사장)

협동조합의 비조합원 이용 문제에 대한 단상(短想)

— 김성오(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좌담]

한국 생협법의 조합원 외 이용금지 조항, 어떻게 볼 것인가

— 김보라, 김창근, 문보경, 박은경, 김형미

특집

협동조합 법 제도를 둘러싼 논쟁들
: 정부의 지원, 어디까지가 바람직한가

협동조합 정부지원, 협력적 사회 환경 조성이 우선이다

— 최유성(전 특임장관실 제2조정관)

정부의 지원, 어디까지가 바람직한가?

— 이이재(새누리당 국회의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 개정 쟁점 및 대안

— 김현미(민주당 국회의원)

협동조합과 바람직한 국가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 강민수(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무국장)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의 방향

— 김대훈(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장)

[좌담]

정부의 협동조합 지원, 어디까지가 바람직한가?

—강완구, 박봉희, 손낙구, 정원각, 이향숙

생협평론 2013 겨울(13호)

특집

협동조합 정체성 논쟁 1

[발제]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

—신성식(아이쿱생산법인 경영대표)

[토론]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에서 길을 찾자

—이현숙(한겨레경제연구소장)

나무로서 협동조합과 숲으로서 협동조합

: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에 대한 단상

—장종익(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화폐 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제도 차이를 인식하자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협동조합운동, 천천히 훑아보면서 나아가기

—김동준(성공회대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연구교수)

토론에 대한 발제자 의견

—신성식(아이쿱생산법인 경영대표)

[좌담]

활동가 입장에서 바라 본 “협동조합 다시 생각하기”

—김순희, 정설경, 정현화, 손범규

특집

바람직한 사회적 경제 모델 찾기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운동

— 장원봉 (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

사회적 경제의 현실과 협동조합운동의 방향

— 하승우 (폴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 경제 개발

— 김성기 (사회적 협동조합 SE EMPOWER 이사장)

한국 사회적 경제의 주요 이슈와 과제

— 김영식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

[좌담]

사회적 경제, 어떤 모델이 바람직한가

— 김재경, 양현준, 윤호중, 이이재, 김형미

특집

한국사회 친환경농산물의 현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현황과 전망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최동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

한국 친환경농산물의 조명 : 생산·시장·소비 측면에서

—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COOP생협 친환경농산물 수급 시스템

— 신신일 (아이쿱인증센터), 허미영 (아이쿱농산)

순환과 공생의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옥천 이야기

— 권단 (옥천순환경제공동체 운영위원장)

[좌담]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들이 들려주는 현장 이야기

— 김근호, 임영택, 주정산, 홍진희, 이향숙

특집

협동조합 교육,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의 협동, 협동은 어떻게 배우게 되는가?

—문영선(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교육을 통한 협동조합과 사회의 성장

—정원각(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대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협동조합, 학교에서부터 교육해야

—금현옥(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교사)

학교협동조합에서의 협동조합 교육

—박주희(학교협동조합지원네트워크)

협동조합 교육, 습득이 아닌 참여와 협동의 과정

—김아영(성공회대 협동조합경영학과 박사과정)

[좌담]

학교협동조합, 그 현장의 소리

—강연수, 김민성, 김현미, 박선하, 황성경, 지민진

특집

한국협동조합의 성장통

이용자협동조합 임금노동자의 노동 문제

—김대훈(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이사)

반겨야 할 역설, 협동조합의 민주적 거버넌스

—윤주일(쿠파협동조합 이사)

협동조합은 좋은 일자리인가

—강민수(콤파즈협동조합대표)

협동조합 지배구조에 대한 단상

—김성오(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협동조합, 공제조합의 거버넌스 : 역설 시각에서
(The Governance of Co-operatives and Mutual Associations :
A Paradox Perspective)

—크리스 콘포스(Chris Conforth, 영국 Open University 교수)

[좌담]

소비자협동조합의 거버넌스와 노동의 실재

—김정희, 이선경, 한금희, 손범규

생협평론 2015 봄(18호)

특집

협동조합기본법 2년, 그 성적표는?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에 따른 정책효과와 향후방향

—이철선(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2년,

기본법 제정 당시의 정책목표는 얼마나 달성했나?

—이대중(전 기획재정부 협동조합법제정팀장)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그 성과와 과제

—문보경(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협동조합의 지형

—김현하(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협동조합지원 2팀)

[좌담]

협동조합기본법 2년, 우리 마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

—김정원, 유영우, 이석우, 정원오, 김형미, 김현대

생협평론 2015 여름(19호)

특집

청년과 협동조합

청년, 협동조합, 그리고 '멤버십 사회'

—이원재(희망제작소 소장)

서울시 청년 협동조합 주택

—이수연(서울시 사회적경제과 주무관)

협동조합과 청년의 만남 협동조합, 청년에게 더 다가가기

—이현숙(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청년들의 '사회적 노동' 경험 : 청년들의 서사를 중심으로

—명수민(서울대 교육인류학 석사), 이영룡(연세대 문화학협동과정 석사)

[좌담]

협동조합을 만난 청년들, 위기도 행복도 서로 함께

—김진희, 임소라, 조한솔, 김지만

생협평론 2015 가을(20호)

특집

사회적경제와 행복한 지역 만들기

사회적경제, 지역 발전의 대안인가?

—김기태(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마을과 경제

—유창복(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사회 혁신에 기반한 지역 발전 : 캐나다 퀘벡의 사례

—정준호(강원대학교 교수)

혁신적 협동조합과 지역 만들기 : 구레자연드림파크 사례

—정태인(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젠트리피케이션, 사회적경제로 핵심을 짚어내자

—전은호(사회주택협회 사무국장)

[좌담]

임대업이 꿈인 나라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누구의 문제인가?

—안진걸, 김남균, 선민, 위성남

특집

협동조합 지원, 그 실상과 바람직한 방향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둘러싼 협동조합 관련 언론 보도 심층 분석

— 조현경(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지원정책과 협동조합 현황

— 정상철(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과장)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경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 유정식(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기업·운동·정치로서의 협동조합

— 김종걸(한양대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좌담]

비판은 약으로 삼고, 오해는 풀어가며

— 박란희, 이현숙, 장승권, 최혁진, 김기태

특집

협동조합으로서의 농협

협동조합의 관점에서 본 농협의 역사

— 박성재(순천대학교 초빙교수)

세계 농업협동조합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

— 안상돈(농협중앙회 미래전략부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 회복과 농협의 과제

— 이호중(지역재단 농협연구교육센터 센터장)

도시농협,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 소비자를 통해 생존하거나 문 닫거나

— 정연근(내일신문 기자)

[좌담]

농협에 기대하는 변화, 그리고 농협과 생협의 협동

— 장민기, 정기석, 조성규, 조현선, 유재흠

특집

협동조합과 혁신

협동조합은 사회혁신이다

—이일영(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대안 조직으로서의 협동조합과 혁신의 과제

—김동준(성공회대 경영학부 연구교수)

노동자소유기업, 일터를 혁신하고 사회를 혁신하다

—김활신(안산아이쿱생협 이사)

학교협동조합, 학교를 혁신하다

—주수원(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정책위원)

[좌담]

협동조합, 혁신의 DNA를 찾아서

—김대훈, 김아영, 김홍길, 서종식, 정경섭

특집

협동조합과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은 왜 프랜차이즈에 주목하는가?

—장종익(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주임교수)

소셜 프랜차이즈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이해

—김정원(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협동조합 · 프랜차이즈 현황과 소상공인 지원정책

—남윤형(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버거킹, 던킨도너츠에서 레베(REWE), 코나드(CONAD)까지

—김현대(한겨레 출판국장)

해피브릿지가 바라본 사회적경제 영역과 프랜차이즈

—윤천(해피브릿지 외식창업센터 센터장)

[좌담]

협동조합, 프랜차이즈를 만나다

—김현, 박승룡, 이우용, 박찬선, 강민수

특집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

우리 사회 고령화 문제와 그 해법으로서의 사회적경제

—정건화(한신대학교 교수)

고령화에 대응하는 일본 생협의 복지사업

—이향숙(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원)

의료협동조합이 만들어가는 '노인이 행복한 세상'

—박봉희(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교육연구센터 소장)

여민동락공동체의 일상

—강위원(여민동락공동체 대표 살림꾼)

고령화의 도전과 한살림의 대응

—장지연(한살림서울 돌봄기획팀 차장)

[좌담]

조합원의 눈으로 노후를 꿈꿔보다

—김미선, 김종희, 우미숙, 추정숙, 김형미

특집

불안의 시대, 협동조합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인공지능과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 인간의 길

—구본권(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인간 존중의 조직 문화는 가능한가?

—최동석(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협동조합의 고용 실태와 과제 :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이흥택(충남연구원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전임연구원)

'재미'있는 일하기, 협동조합에서는 가능한가요?

—제현주(협동조합 롤링다이스 조합원)

[좌담]

협동조합은 좋은 일자리에 대한 필요와 열망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김선경, 마성균, 백희원, 서종식, 최혁진

생협평론 2017 여름(27호)

특집

새 정부에 건네는 사회적경제의 제안

‘모두가 행복한 나라’와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병학(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 집행위원장)

사회적기업 법제도 분석과 개선 방안

—김혜원(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 분석과 개선 방안

—장종익(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

동료 시민과 새 정부에 건네는 사회적경제 현장의 목소리

· <청년> 청년이 웃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바라며

—조금득(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무국장)

· <스니어> 장년층 인생 후반의 새로운 가능성, 사회적경제

—김만희(서울시50플러스재단 일자리사업 본부장)

· <여성> 페미니즘 관점으로 본 사회적경제의 평가와 과제

—오김현주(마포공동체경제네트워크 모아 공동대표)

[좌담]

사회적경제 정책 실행을 위한 첫 걸음

생협평론 2017 가을(28호)

특집

사회적경제와 노동조합의 만남

협동조합운동과 노동조합운동 : 연대와 협력의 가능성 탐구

—김성오(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이사장)

노동조합과 사회연대경제의 상생 : 캐나다 퀘벡의 사례

— 김창진(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사회적경제대학원 교수)

노동조합과 사회적경제의 협력

— 황선자(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따로 또 같이

— 박경숙(순천광장신문 시민기자), 이종관(순천광장신문 편집장)

평화시장의 모범업체

— 김민수(청년유니온 위원장)

[좌담]

노동운동과 사회적경제는 왜 함께하려 하는가?

No. 발행년도 제목/ 저자 및 역자

- 1 2006 『생협 인프라의 사회적 활용과 그 미래』
____일본 21세기코프연구소센터 저 | 한국생협연합회 역
- 2 2008 『iCOOP생협 10년사 : 협동, 생활의 윤리』
____iCOOP생협연대 저
- 3 2008 『일본 위커즈 콜렉티브 활동 사례연구』
____김주숙, 김미영, 김양희, 안세희, 정금수, 이향숙
- 4 2008 『생활 속의 협동』
____오사와 마리 저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옮김
- 5 2009 『세상을 바꾸는 소비자의 힘 2009 윤리적 소비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집』
_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 6 2009 『새로운 생협운동』
____한국생협연대 엮음 (초판 : 2002)
- 7 2011 『뒤영벌은 어떻게 나는가』
____이바노 바르베리니 저 | 김형미·김영미 옮김
- 8 2012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
____김형미 외
- 9 2012 『협동조합, 그 아름다운 구상』
____에드가 파넬 저 | 염찬희 옮김
- 10 2012 『후쿠이생협의 도전』
____일본생협연합회 엮음 | 이은선 옮김
- 11 2012 『일리스트로 배우는 생활협동조합 매장 운영 가이드 북』
____오리토이사오와카니시 케이코 저 | 이은선 옮김
- 12 2012 『현대일본생협운동소사』
____사이토 요시아키 저 | 다나카 히로시 옮김
- 13 2012 『꺼지지 않는 협동조합의 불꽃』
____와카츠키 타케유키 저 | 이은선 옮김
- 14 2013 『살아 숨쉬는 마을 만들기』
____니시무라 이치로 저 | 번역모임 연리지 옮김
- 15 2013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 역사와 사람들』
____조지 제이콥 홀리요크 저 | 정광민 옮김
- 16 2013 『협동조합 운영 사례집』
____서울특별시
- 17 2013 『진짜 가격은 얼마인가요(2013)』(E-Book)
_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 18 2014 『진짜 가격은 얼마인가요(2014)』(E-Book)
_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 19 2014 『협동조합 키워드 작은 사전』
 ___김기태, 김형미, 신명호, 장종익, 정병호 외
- 20 2014 『협동과 연대의 인문학』
 ___김창진 편저
- 21 2015 『iCOOP생협 2015년 입문협동조합』
 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 22 2015 『사람을 탐하다 : 협동조합 역사에서 살아온 그 사람을 탐하다』
 ___인물탐구동아리 '사탐' 저
- 23 2015 『스웨덴에서 협동조합을 배우다』
 ___아너스 오르네 저 | 이수경 옮김
- 24 2015 『21세기의 협동조합 : 레이들로보고서』
 ___A.F. 레이들로 저 | 염찬희 옮김
- 25 2015 『영국 협동조합의 한 세기』
 ___G.D.H. 코울 저 | 정광민 옮김
- 26 2016 『iCOOP생협 2016년 입문협동조합』
 ___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 27 2016 『아이쿱 사람들 : 협동조합의 문을 열다』
 ___차형석 지음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 28 2017 『로버트 오언 : 산업혁명기, 협동의 공동체를 건설한 사회혁신가』
 ___G.D.H. 콜 저 | 홍기빈 옮김
- 29 2017 『기업 소유권의 진화』
 ___헨리 한스만 저 | 박주희 옮김

No.	발행년도	시리즈명	제목/ 저자 및 역자
1	2007	연구보고 2007	『생활협동조합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보고서 : 한국생활연합회 소속 조합원을 중심으로』 ____김주숙·김성오·정원각
2	2009	연구보고 2009	『2009년 iCOOP생활 협동가 의식조사 보고서』 ____김아영·정원각·이향숙
3	2010	연구보고 2010-1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 생활운동을 중심으로』 ____염찬희·염은희·이선옥
4	2010	연구보고 2010-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의 공제조합운영에 관한 연구』 ____장원봉·하승우·임동현
5	2010	연구보고 2010-3	『생활협동조합 커뮤니티 디자인 연구』 ____김찬호
6	2010	연구보고 2010-4	『2009 iCOOP생활협동조합원의 소비자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____염찬희
7	2011	연구보고 2011-1	『아이쿱생협의 교육현황, 그리고 교육효과 및 만족도에 대한 연구』 ____정해진
8	2011	연구보고 2011-2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한 지자체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협력방안』 ____장종익·김아영
9	2011	번역서 2011-1	『일본공익재단법인생활협동조합연구소 리포트 No.62 : 위기에 대응하는 외국생활협-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웨덴생활-의 동향』 ____김연숙·이주희·정화령
10	2011	번역서 2011-2	『일본공익재단법인생활협동조합연구소 리포트 No.64 : 협동조합의 출자금, 자본회계 문제』 ____김연숙·이주희·정화령
11	2012	기획연구과제 2012-1	『유럽 주요 국가 소비자협동조합의 성패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____장종익
12	2013	기획연구과제 2013-1	『지대(地代)가 친환경농업에 미치는 영향』 ____장상환
13	2013	기획연구과제 2013-2	『2012 아이쿱생활협동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____염찬희·손범규·지민진

- 14 2013 기획연구과제 2013-3 『생협의 사회 가치 : 아이쿱생협을 대상으로』
____이향숙·지민진
- 15 2013 생활과 동향 1 『한국소비자원, 「2013 한국의소비생활 지표」 발표』
____지민진
- 16 2014 생활과 동향 2014-1 『윤리적 소비 속, 업사이클링(Upcycling) 다시 생각하기』
____손범규
- 17 2014 생활과 동향 2014-2 『일본의 유기농업인증제도의 시사점 : 참가형 인증시스템의 의의』
____지민진
- 18 2014 생활과 동향 2014-3 『밀레니엄세대에 동기 부여하기 : 아이쿱생협의 20대 직원의 특성을 중심으로』
____손범규
- 19 2014 기획연구과제 2013-4 『2013 아이쿱생협 직원의 직무만족도 조사』
____손범규
- 20 2014 연수보고서 2014-1 『2014 ICA Research Conference in Pula, Croatia and 2014 Co-operative and Social Enterprise Summer School in Sheffield』
____서진선
- 21 2014 기획연구과제 2014-1 『공정무역을 통한 지역사회 역량강화 iCOOP생협과 PFTC-AFTC의 파트너십 연구』
____엄은희
- 22 2014 기획연구과제 2014-2 『생협의 사회가치 2014 아이쿱생협을 대상으로』
____이향숙 · 이문희
- 23 2015 연구원리포트 2015-1 『협동조합 자본조달 방안 중 조합원 차입금과 기금에 관한 사례 조사』
____서진선
- 24 2015 연구원리포트 2015-2 『협동조합의 자본조달과 우선출자제도』
____지민진·서진선
- 25 2015 기획연구과제 2015-1 『iCOOP생협 생산자회원의 특성 : iCOOP생산자회 정회원조사 2014년도』
____정은미
- 26 2015 기획연구과제 2015-2 『2014 아이쿱생협직원의 직무만족도 조사』
____손범규
- 27 2015 기획연구과제 2015-3 『아이쿱생협 통계 2014』
____지민진
- 28 2015 기획연구과제 2015-4 『2015년 아이쿱생협 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
____손범규·이예나
- 29 2015 기획연구과제 2015-5 『2015년 아이쿱생산자회원 실태 및 의식조사』
____이향숙

30	2016	흐름을 읽다 1-01	『저성장 시대, 가치소비의 경험』 ____지민진
31	2016	기획연구과제 2016-1	『아이쿱 통계 2015』 ____지민진
32	2016	기획연구과제 2016-2	『친환경 우유의 생산 및 소비 확대와 낙농제도 : 아이 쿱생협의 판매대행제의 시사점』 ____장재봉
33	2016	번역서 2016-1	『협동조합의 난제 : 자본』 ____윤길순·최은주·서진선
34	2016	흐름을 읽다 1-02	『소비, 근심을 덜다 : 저성장기 소비의 질적 변화』 ____지민진
35	2017	기획연구과제 2017-1	『한국 협동조합 법제도 개선 연구 1』 ____협동조합 제도개선연구회
36	2017	흐름을 읽다 2-01	『소비, 그리고 쉼(休)』 ____지민진
37	2017	흐름을 읽다 2-02	『생활동향연구, 2017. 6』 ____지민진
38	2017	흐름을 읽다 2-03	『생활동향연구, 2017. 7』 ____지민진
39	2017	흐름을 읽다 2-04	『생활동향연구, 2017. 8』 ____지민진
40	2017	흐름을 읽다 2-05	『생활동향연구, 2017. 9·10』 ____지민진

연구보고서(수행연구)

No.	발행년도	시리즈명	제목/ 연구자
1	2014	연구원 리포트	『훗카이도 지역 밀 산업의 시사점』 ____이향숙
2	2014	서울시 기획 연구	『학교건강매점 협동조합 모델개발 연구』 ____지민진·최은주
3	2015	기획연구과제 2015-6	『고양파주아이쿱생협조합원의 소비생활과 의식에 관 한 조사』 ____손범규·신효진
4	2016	양천구 기획 연구	『양천구 사회적경제 인적 자원 조사』 ____이향숙·김경아

연구보고서(아이쿱 해외 협동조합 연구동향)

No.	발행년도	시리즈 번호	제목/ 편역자
1	2012	2012-2	『미국 협동조합 현황(1)』 ____이경수
2	2013	8-2	『지역사회 만들기와 생협』 ____이경수
3	2013	9-3	『지역복지·어르신복지와 생협의 역할 (地域福祉・高地域福祉と生協の役割)』 ____이경수
4	2013	10-1	『푸드 테저트 문제와 지역 커뮤니티』 ____이경수
5	2013	10-2	『전업주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____이경수
6	2013	13	『대규모 협동조합, 공제조합의 조합원 거버넌스 참여 : 코퍼라티브 그룹 형성평가』 ____이경수
7	2014	2014-13	『이론』『사례』『거버넌스』 ____이경수
8	2015	2015-2	『범대서양무역투자자동반자협정과 식품 : 소비자협동조합의 시각』 ____이경수
9	2015	2015-3	『2014 아이쿱해외협동조합연구동향 모음집』 ____이경수
10	2015	2015-4	『기후변화와 소비자협동조합 : 도전에 앞서 나가기』 ____이경수
11	2015	2015-12	『지속가능발전 개발재원과 사회연대금융의 역할』 ____이경수
12	2016	2016-01	『핀란드 S그룹 : 핀란드 소비자협동조합 탐구 1-7』 ____이경수
13	2016	2016-02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의 사회적연대경제의 현황』 ____이경수
14	2017	2017-02	『바르셀로나 시청의 사회적연대경제 추진 정책』 ____히로타 야스유키 지음, 이향숙 번역
15	2017	2017-03	『이탈리아 소비자협동조합 탐구 : 2016 아이쿱해외협동조합 연구동향 모음집』 ____이경수
16	2017	2017-04	『협동조합의 국제화와 몬드라곤의 도전』 ____윤길순
17	2017	2017-05	『몬드라곤 협동조합 조직 구조의 진화』 ____윤길순

생협평론 정기구독 안내

『생협평론』은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협동조합의 공론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신청 방법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www.icoop.re.kr) 홈페이지에 있는
‘1년 구독권 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 전화를 주시거나 혹은 이메일로 주소와 연락처, 이름을
남겨주세요.

구독료

- 1년 구독료 : 10,000원

입금 안내

- 계좌 : 국민은행 448601-01-449694
- 예금주 :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기타

- 구독 기간에 책값이 올라도 정기구독료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분실이나 반송 등 배달 사고로
『생협평론』이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꼭 연락 주세요.
- 낱권 구매는 연구소 이메일로 개별 신청 바랍니다.

벌써 한 해의 마무리를 생각해야 하는 때입니다. 혹시 『생협평론』 정기구독을 갱신해야
하는 시기는 아니신가요? 『생협평론』 정기구독 기간을 확인해보세요!
(매년 정기구독을 갱신하시는 것이 번거로우시다면, 한 번에 여러 해 구독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전화 02-2060-1373

이메일 icoop-institute@hanmail.net